

‘정당 위기’ 개념의 정립과 실효적 평가를 위한 제언*

정진웅 ■ 단국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정당 위기’ 주장이 후발 민주주의 국가 사례에서 서구 정당과의 단순 비교, 저발전 및 혐오와의 혼용 등의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엄밀한 개념 정립과 평가 방식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당 위기’ 상황을 정당 쇠퇴가 지속되어 ‘정당 실패’ 위험성이 가시적으로 커진 국면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때 정당 쇠퇴는 ‘유권자 내 정당’과 ‘조직 수준 정당’과 관련되어 있고, 특히 정당 일체감의 약화, 선거 유동성의 증대, 투표율 감소, 당원 조직의 약화가 ‘지속’되는 경우로 보아 동태적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당 실패는 ‘정부 내 정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선거 결과 이 영역이 크게 축소되어 정치적 영향력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로 보았다. 이때 정치적 영향력은 분석 국가의 제도와 문화에 따라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정당 위기는 이 쇠퇴와 실패의 분기점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정당 위기, 정당 쇠퇴, 정당 실패, 유권자 내 정당, 조직 수준 정당, 정부 내 정당

I. 서 론

정당 위기란 무엇인가? 실제로 우리는 한국 정당을 평가하면서 정당 위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채 기존 정당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것은 그 개념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당에 대한 저평가 및 불만족이 현

* 본고의 문제의식과 연관된 주장이 최근 학술지를 통해 제기되고 있어, 의미 있는 토론을 위해 2015년 저자의 학위 논문, 『한국 ‘정당 위기론’ 비판』의 일부를 수정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E-mail: hasabyek@gmail.com)

실에서 단순히 '위기'와 혼재되어 제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정당 위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표출된 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다. 그러나 실제로 과거에도 위기였고 지금도 위기라고 진단받는 기존 주요 정당들은 현실에서 유권자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정당의 저발전에 대한 불만이 항시 존재해왔기 때문에 한국의 주요 정당은 그동안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으며, 거기서 오는 불신감이 다시 불만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정당은 대의민주주의에 있어 첫째가는 근간 조직이며,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다(Dalton 2006; Sartori 2005; Schattschneider 1960; Ware 2007). 이 때문에 '20세기는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세기일 뿐만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의 세기'라고까지 하였다(Mair 1997, 125). 이에 서구 유권자들은 비록 정당에 대해 불만과 냉소를 보이면서도, 동시에 정당을 민주주의를 위한 도구와 생명력 있는 징표로 간주하는 것이다(Mack 2010, 2).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서구 선진 민주주의 국가 전반에 걸쳐 정당의 약화와 쇠퇴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정당 쇠퇴를 야기한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상정해볼 수 있다. 쇠퇴를 주장하는 이들은 후기 산업사회의 도래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가 집합적 수준에서건 개별 수준에서건 유권자의 성격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것이 정당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변화한 환경에서 정당의 역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에 정당에 대한 불만이 누증되면서 지지의 하락과 무당파층의 증가, 선거 유동성(electoral volatility)의 증가, 당원수 감소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급기야 환경 조건의 변화와 정당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은 투표율의 하락까지 야기했다고 주장한다(Dalton 2006; Drummond 2006; Inglehart 1997; LaPalombara 2007; Van Biezen et al. 2012; Wattenberg 2000). 그런데 이 같은 쇠퇴 현상들은 특정 정당과 국가에 한정되지 않은 전반적 현상이라 하나의 위기로 인식되었다(강원택 2007; LaPalombara 2007).

이와는 별개로, 관찰되는 현상들이 갖는 의미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무당파층에서 인지적 능력을 갖춘 '심의적 공중(deliberative public)'을 발견하고 이들의 존재가 '선거를 좀 더 민주주의의 이상에 접근하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정진민·길정아 2014; Dalton 2006; 2013). 가장 차별적인 접근으로는 '정당이 카르텔 정당(cartel party)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주장에서 나왔다. 이들은 작금의 상황을 정당 쇠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유형과 기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현상으로 이해한다(Katz & Mair 1995; 1997).

우리 정당 역시 위기에 놓여 있다는 지적은 학계와 언론을 통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비판의 요지는 시민 사회와 국가 사이를 연계하는 중요 기능이 우리 정당들 사이에서 특히 취약하다는 점이었다(강원택 2005; 2007; 김용호 2001; 임혁백 2012; 장 훈 2003a; 정진민 1998; 2011; 최장집 2005 등). ‘정치체계가 시민들의 사회적·정치적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할 때 책임성과 민주성을 유지할 수 있다’(마인섭 외 1997, 49)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큰 문제이다.

그런데 달더(Daalder 2002)가 일갈했듯, 면밀하지 못한 정당 위기론은 정당의 실질적 역할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변화들을 분석하도록 하기보다는 정당의 가치를 부인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잘 알려진 ‘천일야화: 40인의 도둑’에서는 마을 모든 집 때문에 같은 식별 표시가 되어 있어 도둑들이 보물을 훔쳐간 주인공 집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마찬가지로 모든 정당에 오랫동안 씌워진 ‘위기’라는 표시는 실상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는 정당에 대한 애초의 비판 목적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당을 단순히 저발전에 머물러 있다고 치부하기보다는 어떤 변화 혹은 노력 속에 지금에 이르렀는지, 개념 정립과 판별 기준부터 다시 세워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정당 위기와 관련된 여러 주장을 뛰어넘어 실효적인 개념과 평가 방법이 없는지를 차례대로 논의할 것이다.

II. 정당 위기론 검토

파네비앙코(Angelo Panebianco)는 정당의 기능을 중심으로 이른바 ‘정당 위기’란 무엇인지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그는 정당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수행하는 전통적인 활동(activities)이 있는데, 특정 용어로서의 ‘정당 위기’를 토론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활동에 주목할 것을 주문한다(Panebianco 1988). 그가 말하는 정당의 대표적 기능 세 가지는 첫째, ‘통합 혹은 표출의 기능’, 둘째, ‘공직 후보자 선출 기능’, 그리고 ‘공공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기능’이다. 그는 바로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 즉 핵심적 기능(functions)에서 정당이 ‘주변화(marginalization)되는 과정’을 정당 위기라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은 선거 전문가 정당(electoral-professional party)의 출현과 함께 발생한다(Panebianco 1988, 267-269).

파네비앙코의 정당 위기론은 역할과 기능의 실패를 이르는데, 사실 이는 정당

의 위상 약화와 맞닿아 있다. 즉, 집합적 정체성이 약해지면서 대중과의 관계가 약해진 정당이 정당 정부(party government)로서의 지위를 상실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대중과의 연계가 약해진 정당이 선거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뒤에서 논할 카르텔 정당(cartel party)의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러한 조건이 옹당 지위 상실로 귀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조심스럽다.

강원택(2007, 125-129)은 '정당정치의 위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가 설명하는 것은 기존 연구와 비교해볼 때 정당 위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는 서구 정치에서 정당을 중심으로 한 대의 민주주의에 큰 변화가 생겨났으며, 기존 주요 정당이 쇠퇴하면서 단일 이슈 그룹이나 시민단체, 신생 정당 등이 그 자리를 대신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정당 정치의 위기라고 명명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 위기는 뒤에서 살펴볼 로슨(Kay Lawson)이 말하는 '정당 실패'와 다르지 않으며, 사실상 정당 약화 현상 전반(全般)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같은 저작에서 그는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작금의 카르텔 정당으로의 변신이 위기를 부추기는 또 다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른바 카르텔 정당은 시민사회와의 연계를 약화시키고 많은 자원을 국가에 의존한다는 특성을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지 그 자체로 변화를 부정하고 고착화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의 연구는 '포스트 카르텔 정당(post-cartel party)'화 경향에 주목하는데, 이는 카르텔 정당이 다시 대중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 일정한 개혁 조치를 실행한다는 것을 시사한다(심지연·김민전 2007; Yishai 2001). 이 지점에서 정당 성격 변화를 다루는 일군의 연구들과 같이 논의해야 할 접합지점이 발견된다.

한편 김윤철(2009)은 개별 정당의 위상과 역할의 약화를 쇠퇴나 실패라고 하기보다는 위기라고 지칭한다. 그는 '쇠퇴'라는 단어가 중장기에 걸친 변화를 의미하고, '실패'는 그 결과가 확정된 듯한 느낌을 준다면서, '위기는 기간의 장단보다는 성장과 쇠퇴, 성공과 실패 사이의 고비나 중대국면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의 연구는 정당 위기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인식론적 논의로 본 연구에도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정당 위기를 정당 쇠퇴와 정당 실패 사이의 분수령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정작 위기가 무엇인지 개념화를 시도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존에 정당 쇠퇴와 정당 실패로 거론되었던 여러 현상들을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것으로 회귀한다. 위기를 '성패 사이의 고비 혹은 중대 국면'으로 개념화한 그의 작업에 비추어볼 때, 정당 위기를 이처럼 포괄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정당 위기를 거론하는 연구들은 이처럼 어느 하나의 공통된 개념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파넬비앙코처럼 기존에 수행하던 핵심적 기능을 정당이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는 경우를 위기라고 보기도 하고, 로손과 메클(Peter H. Merkl)이 정당 실패로 간주했던 현상을 위기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또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정작 정당 위기의 개념을 명료화하는데 이르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 한국과 같은 후발 민주주의 국가의 사례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문제도 있다. 따라서 정당 위기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정당을 정당 쇠퇴와 정당 실패의 분기점으로 이해한다면, 이제 관련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정당 쇠퇴와 실패가 의미하는 바가 각각 무엇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III. 정당 쇠퇴와 실패 논의

1. 정당의 쇠퇴

정당의 약화 현상을 진단하는 연구들은 통상 당원 감소, 정당 일체감 약화, 선거 유동성 증가, 투표율의 하락 등을 지적한다. 이들 연구는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귀속감이나 조직력이 약화되는 것을 정당 쇠퇴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추세에 반론을 제기하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이들 연구들은 미국 대중(mass public) 사이에서 정당 일체감이 강화되고 있음을 실증하기도 하고(Bartels 2000; Lawrence 2001), 정치 엘리트층의 양극성(polarization)이 유권자의 당파성을 자극하여 정당 일체감이 반등하고 있는 경로를 설명하기도 한다(Hetherington 2001). 이 같은 연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지표 하락에 대한 반증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선부르게 쇠퇴를 일반화하기 보다는 개별 국가에서 이의 동태적 변화 추세를 더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분석이 우리 정당 연구에서 외면받아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개별 요소별로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김영태(2009)는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 운영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선입견과 달리 우리 정당의 당원 조직률이 유럽과 비교했을 때 그다지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갑윤(2011)은 우리 유권자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에서 주요 정당 지지도의 시간적 안정성을 제시하고, 일관 투표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점을 들어 당파적 태도가 일정 수준에서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판단 근거로 삼는 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보이거나(전자), 분석 기간을 전국 선거가 있는 해로 한정하고 있어 동태적 변화 추세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당과 유권자에 대한 선입견을 반박하고자 하는 이들 연구는 시도 자체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이런 연구는 정당 쇠퇴 여부를 논하는 여러 요소와 관련하여 우리 정당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통시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증을 통해 정당 쇠퇴 주장을 반박하고자 하는 시도와 달리 쇠퇴 현상이 갖는 함의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입장은 정당 연구의 이후 담론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정당의 각종 지표가 쇠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사회 변화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유형과 기능으로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는 결과물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곽진영 2002; 박경미 2011; Ignazi 1996; Sferza 2002; von Beyme 1996). 캐츠(Richard S. Katz)와 메이어(Peter Mair)가 제시한 카르텔 정당 연구는 이런 입장을 선도한다. 이들은 정당과 유권자와의 관계에서 작금에 쇠퇴가 나타나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들이 보기에 이는 풀뿌리 조직에 국한된 것일 뿐, 당 중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허약해진 토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국가와 정당 간의 상호 침투와 의존'이었다. 결국 정당 쇠퇴 현상은 대중정당(mass party)이라는 특정 유형의 쇠퇴에 한정된 것으로서, 이를 쇠퇴가 아니라 '정당이 달라진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한 결과 및 변화로 볼 것을 주장한다(Katz & Mair 1995; 1997; 2012).

웹(Paul Webb)과 패럴(David Farrell) 등이 서유럽과 북미 국가의 정당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Webb et al. 2002)도 이런 논조를 뒷받침한다. 마찬가지로 정당과 유권자와의 관계가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정당 조직의 복원력(resilience)과 적응성(adaptability)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특징들이야말로 '정당의 어느 한 부분만을 보고 단순하게 쇠퇴하고 있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평가한다(Webb 2002, 3).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 변화를 연구한 달튼과 와텐버그(Martin P. Wattenberg) 등의 연구(Dalton & Wattenberg 2002a)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한다. 이들은 벡과 소러프, 키(V. O. Key Jr.) 등이 제시한 '정당의 세 가지 차원'

을 이용하여 '유권자 내 정당(parties in the electorate)', '조직 수준 정당(parties as organization)', 그리고 '정부 내 정당(parties in government)'으로 분석 수준을 수립한다. 그리고 각각의 정당 영역별로 나누어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서구 민주주의 국가를 관통하는 정당 변화의 특정한 흐름을 일반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유권자 내 정당 차원에서 이들은 서구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계 약화를 발견하고, 립셋(Seymour M. Lipset)과 로칸(Stein Rokkan)의 동결 명제도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한다(Dalton & Wattenberg 2002a). 두 번째 차원에서는 당원 감소가 전반적인 현상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정당 조직의 힘을 축소시키는 것은 아니며 선거 승리를 위한 차원이라면 조직으로서의 정당은 여러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한다(Scarrow 2002). 마지막으로 정당이 의회와 정부에서 여전히 정당성(partyness)을 유지하고 중요한 직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정부 내 정당으로서의 약화 현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한다(Ström 2002). 결국 이들은 정당 쇠퇴 현상이 유권자 내 정당 영역에서만 두드러지게 발견된다고 주장하며, 이것을 쇠퇴로 볼지 변화에 대한 적응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하게 엇갈린다고 평가한다(Dalton & Wattenberg 2002b).

이상의 연구들은 하위 세부 구성 요소를 어느 영역에 배치할 것인가에서 일정한 시각차를 보이지만, 정당을 다면적인 구조로 파악하고 접근함으로써 작금의 정당이 변화하는 양상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정당과 유권자와의 관계를 평가하는 지표들이 명징한 수치로 확인되는데 반하여 정부 내 정당이나 조직 수준 정당의 많은 부분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웹의 표현을 다시 빌리자면 '이는 절반이나 있는 컵으로 볼 것인지, 절반밖에 남지 않은 컵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Webb 2002, 13)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정당의 카르텔 정당화 현상을 분석한 곽진영(Kwak 2003)과 장훈(2003b)의 논문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예를 들어 곽진영은 선거 운동에서 주요 정당이 자체적으로 동원하는 자본의 규모, 정부 보조금의 배분 비율의 비교를 통해 우리 정당 체계의 카르텔 성격을 진단하는데, 이 경우 어느 비율로 집중도가 나타날 때 그것을 카르텔로 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또 내각 중 핵심부서의 장을 집권당이 장악하는 것도 카르텔 현상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여당 출신 인사가 내각에 진입하는 것이 문제인지는 따로 논하더라도 그 핵심부서의 선정 기준도 불분명하다. 이렇듯 카르텔 정당 여부를 평가하는 것도 다분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 논의하더라도 정당과 유권자와의 관계 약화를 정당 쇠퇴로 볼지 아니면 성격 변화로 볼지는 근본적인 입장차가 반영된 것이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듯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현상을 정당 실패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간의 관계 약화를 쇠퇴라고 쉬 단정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이것이 복원되지 않는다면 이는 선거 결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어서 이 경우 쇠퇴가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약화 현상이 어느 정도 지속되어야 쇠퇴로 볼 것인지 그 기준을 객관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실적과 함께 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 정당 위기 개념을 재정립하는 단계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카르텔 정당에서 강화된 정부 내 정당이 유권자와의 관계가 약한 정당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정당 쇠퇴를 주장하는 연구들은 유권자 내 정당과 조직 수준 정당이 축소된 상황을 쇠퇴라고 본다. 그런데 ‘쇠퇴’라는 용어 자체는 동태적인 변화 개념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당의 쇠퇴도 특정 시기의 단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영역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을 의미할 것이다. 티에스(Michael F. Thies)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정당은 정부 내 정당이 확보한 자원을 통해 사회와의 연계에서도 혁신을 도모한다(Thies 2002). 기존 정당 간의 경쟁도 이를 부추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정당만의 노력이든, 아니면 시민과 정치인, 정치 제도 모두의 노력에 의해서든(Dalton & Wattenberg 2002c), 정당은 유권자와의 연계를 확대할 노력도 병행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 정당의 부활을 논한 코헨(Jeffrey E. Cohen)과 칸터(Paul Kantor)도 대중적 요구에 대한 정부와 정치인의 적극적인 대응, 정치 자금이 발휘하는 힘에 주목한다(Cohen et al. 2001).

이 같은 주장을 통해 정당과 대중과의 연계가 약해진 이후에도 다시 소생할 논리적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 확보된 자원과 능력으로 정당이 유권자와의 연계마저 회복시키는 혁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주장을 수용한다면, 우리처럼 후발 민주주의 국가 정당의 경우 원래 척박한 대중적 토대에서 시작했으므로 그러한 노력 속에서 오히려 쇠퇴와는 다른, 정당과 유권자 간 관계에서 개선의 추이를 목격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2. 정당의 실패

정당 실패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은 역시 다양한 시각을 드러내

고 있다. 이갑윤(1988), 로슨과 메클의 연구(Lawson & Merkl 1988)는 기존 정당을 대체하고자 하는 신당이나, 이익표출 수단으로 등장하는 이익 단체를 정당 실패의 단면으로 이해한다. 이들이 보기에 정당의 핵심적 역할은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계(linkage)하는 기능이다. 정당 실패는 바로 이 핵심 기능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 '연계 공백(linkage void)'을 메우기 위해 '대안적 조직(alternative organization)'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정당에 대한 도전 조직이 나타나는 것 자체를 곧 정당 실패로 간주할 수는 없다. 기존 정당이 새로운 이슈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정당이 등장하는 것은 일단 분명해 보인다(Hug 2001; Laver 2005; Meguid 2010). 그러나 신당은 비단 새로운 이슈와 이데올로기에 의해 생기는 것만은 아니며, 단순히 특정 직업군의 이익 추구하고 기존 정당 체계 내에 있는 개별 정치인의 야망에 의해서 생기기도 한다(Sikk 2012). 또 이 같은 조건이 발생해도 동원해야 할 편익 계산에 따라서 신당이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Tavits 2006). 중요한 것은 신당이 출현했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Lago & Martínez 2011; Lucardie 2010; Meguid 2006; 2010; Miller 2007; Selb & Pituctin 2010; Sikk 2012). 결국 로슨과 메클 등 여러 학자들은 20여 년 만에 다시 *When Parties Prosper*를 공동 출간하게 되었다. 이들은 기존 정당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이슈를 수용하여 정책을 수정하였으며, 당 조직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면서 오히려 번성했음을 보인다(Lawson & Merkl 2007). 이 밖에 많은 연구도 신당의 성공을 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존 정당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을 거론한다(Birnir 2010; Lucardie 2010; Meguid 2006; 2010; Miller 2007; Schwartz 2010; Selb & Pituctin 2010; Smith & Gauja 2010).

이익 단체와 시민운동 조직의 부상이 반드시 정당에 위협이 되고 정당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이유도 없다. 정당은 이들로부터 훈련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할 수 있고(Christiansen 2012; Offe 1990; Schwartz 2010), 이 과정을 통해 약한 사회적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이연호 외 2007). 이익 단체나 NGO는 새로운 조직적 중재자로 정당과 유권자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Poguntke 2005). 또 정부는 NGO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이때 집권당에 우호적인 단체를 더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내 우군(友軍)을 강화, 확대하기도 한다(Jalai et al. 2012). 따라서 양자는 상보적 관계일 수 있으며, 정당 이외의 조직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정당 실패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위협이 실제로 기존 정당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에 대한 연구도 있다. 이들이 중시하는 것은 내외의 요구와 변화에 순응하고자 하는 정당 지도

부의 '자발적 행동(voluntarism)'이다. 순응의 성패 여부는 정당이 조직으로서 지속될 수 있느냐, 아니면 사라지느냐를 판가름한다. 이때 정당이 지속된다는 것은 선거 경쟁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경우이며, 사라진다는 의미는 정통성을 간직한 계승 정당조차 남기지 않은 채 다른 도전 정당에 지위를 넘겨주고 소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바로 정당 실패라 보고 있다(Rose & Mackie 1988). 정당 체계에 계속해서 남아 있다는 것이 변화 자체를 부정한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다. 정당 지도부의 순응과 변화에 대한 노력은 정당의 4가지 다른 진로를 만들어낸다. 첫 번째는 온전히 원래대로의 정당을 유지하는 것, 둘째 당명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탈당과 입당이 나오는 부분적인 변화이다. 세 번째로는 당명이 없어지는 경우인데 그러나 분당 또는 합당을 통해 계승 정당을 판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멸과는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서는 정당 체계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로 로즈와 맥키는 바로 이 네 번째 시나리오를 정당 실패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기준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잡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그가 정당 제도화에 논의의 방점을 찍은 나머지 정당의 진로를 단지 '지속(persistence)'과 '소멸(disappearance)'이라는 이분법으로 분류하면서 발생했다. 실제 완전히 소멸하는 정당을 발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지속의 범위도 단일 정당이 당명과 조직을 유지하는 것에 한정시키지 않고, 개명과 재창당을 비롯해 정계개편 상황까지를 포괄함으로써 그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있다. 또 계승 정당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계승이 아닌 것을 '어떤 유산(legacy)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어느 수준의 잔유물부터 유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그 어떤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는 정당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권순미(2002; 2003)가 일본 사회당 연구에서 내린 정당 실패 개념은 상기 이갑윤과 로즈, 맥키의 연구를 포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그녀는 '정당 쇠퇴'와 그 결과로 빚어진 '정당 붕괴(party collapse)'라는 개념을 조합하여, '정당 지지도 저하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그 정당이 더이상 정당 체계의 구성 요소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현상'을 정당 실패라 정의한다. 물론 사회당은 1993년의 선거를 통해 대참패와 극적인 몰락으로 사라지면서 사회민주당이라는 후속 정당을 남겼다. 그러나 사회민주당은 당시 자민당을 견제할 능력을 갖지 못했고, 일본의 정당정치를 움직일 영향력도 상실했다(권순미 2002; 2003).

결국 그녀가 지칭하는 정당 실패는 정당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 이후 완전한 붕괴를 실패라고 규정하기도 하는데, 이는 맥키의 주장

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다만 어떤 유산도 남기지 않는, 즉 정당의 소멸을 실패로 보았던 후자와 달리, 유산으로 남겨진 정당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치적 영향력이 미미한 경우까지를 실패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그리고 이 '정치적 영향력'에 본 연구는 주목한다. 여기서 과제는 그 정치적 영향력의 실체이며,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이다.

기본적으로 정당의 결성 목적과 존재 이유가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이 지향하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참여 기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 기회는 정당이 더 많은 국가 기관을 담당하거나, 적어도 그 기관에 더 많이 진출해 있을수록 확대된다. 정당에게 영향력이란 바로 이 과정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느냐로 표현될 것이다. 집권함으로써 행정부를 책임지거나, 총선에서 가능한 많은 의석을 획득하여 입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주도할수록 영향력은 커지게 된다. 그리고 국회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주요 양당에게는 제3당의 의석 확대가 그 영향력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로써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당 실패가 그 정당의 영향력 감소와 연결되는 것이라면, 결국 정당 실패란 세 차원으로 구성되는 정당의 영역 중 '정부 내 정당'의 규모 문제에 관련된다는 점이다.

IV. 정당 위기 개념의 정립

그렇다면 정당 위기는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인가? 용어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지칭하는 현상에 대한 해석에서 합의가 어려울 때,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도는 용어의 어원에서부터 출발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에 지금부터는 위기가 지칭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당 연구에 적용하는 데 어떤 현상들과 이를 조응시킬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보기로 한다.

정치학 대사전에서 '위기(crisis)'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어서 위급한 상황 또는 위험한 경우'를 이른다. 또, 그 어원인 그리스어 krinein은 '구별짓다(seperate)'라는 뜻으로서 어떤 분기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설명에서 동 대사전은 의학적 상태(medical condition)를 예시하고 있는데, 의학에서 위기란 '건강에 문제가 생겨 죽음과 회복을 구분 짓는 어떤 분기점(turning point)'을 지칭한다(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002; Krieger 2001). 즉 심각한 질병으로 사망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태를 위기라고 보고, 그 고비를 넘겨 건강을 회

복하는 것을 위기의 해소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개념을 고려하자면 현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정 조직의 위기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조직의 위기라면 내외 조건이 악화되어 그 힘이 약해지고, 이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조직 자체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정당에 적용한다면, 전자는 정당의 쇠퇴나 약화와 조응할 것이고 후자는 정당의 붕괴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랫동안 정당 연구의 주요 관심 사항이었던 정당 쇠퇴론과 정당 실패론에 맞닿아 있다. 따라서 '정당 위기'의 개념을 조각하는 두 가지 현상은 정당 쇠퇴와 정당 실패(붕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정당 쇠퇴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면서 정당과 유권자와의 관계 약화를 두고 일군의 학자들은 이를 정당의 쇠퇴로 간주하는 반면, 정당의 성격 변화로 이해하는 흐름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이 간극을 정당 쇠퇴와 정당 실패를 동시에 논할 때 메울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한 바 있다. 후자의 입장에서, 유권자 내 정당과 조직 수준 정당의 약화 현상을 두고 초기에는 정당이 선택한 전략의 결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의 유권자 기반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방치될 때, 이는 결국 선거 결과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면 이 해석의 간극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실사 정당이 카르텔 정당으로 변모했다고 하더라도,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확보한 자원을 활용해 시민사회와의 연계 회복을 일정 정도 도모한다는 점도 앞에서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카르텔을 형성한 정당은 지속적으로 대중 기반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는 선거를 통해 정부 내 정당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로써 사회와의 지속적인 연계 약화를 막을 수 있는데, 반대로 정당이 이에 성과를 보이지 못하여 대중 기반의 축소 상황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되면 이는 곧 정당의 지위에도 부정적 요인이 된다. 따라서 유권자 내 정당과 조직 수준 정당의 위축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는 카르텔 정당론에서 말하는 '새로운 조직 유형과 기능으로의 탈바꿈'을 넘어 결국 정당 쇠퇴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화할 때, 앞서 카르텔 정당론에 제기하였던 판단의 주관성 문제도 어느 정도 극복된다.

그런데 전술한 것처럼 위기를 '실패에 이를 위험에 처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때 정당 실패가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이것이 영향력의 감소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단 정당 실패는 '해당 정당이 그 정당 체계 내에서 가지고 있던 영향력의 심각한 감소'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당의 영향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정당의 존재 이유와 가장 중요한 결성 목적은 자신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전술한 것처럼 이를 위해서라며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영향력이란 바로 이 과정에서 발휘되는 힘의 크기라 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는 특정 정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배타적으로 장악했을 때, 이 정당의 영향력은 최대치가 될 것이다. 결국 정당 체계에서 말하는 영향력이란 국가 기관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가 척도이며, 따라서 정부 내 정당의 크기로 측정되고 표현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거 결과이다.

좋은 예는 정당 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던 일본 사회당과 덴마크의 1973년 총선 사례이다. 한때 자민당과 더불어 일본 정치를 양분했던 사회당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거듭된 의석수 감소 이후 사회당은 사회민주당을 거쳐 민주당과 그 밖의 군소 정당으로 와해되었다. 덴마크는 제1당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s)을 위시해 5개 정당이 의석을 과점하던 체계였다. 그러나 1973년 총선을 통해 이들 정당의 보유 의석은 대폭 축소되고, 새로 5개 정당이 이에 버금가거나 뛰어넘는 의석을 확보하며 의회에 진출하였다. 이로써 기존 주요 정당의 의회 지배 구도는 일대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페테르센(Mogens N. Pedersen)은 바로 이 총선 결과를 정당 실패 사례로 다루고 있다(Pedersen 1988).¹⁾ 그러나 실패가 되었든 패배가 되었든, 새로운 정당이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차지하여야 그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볼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한국의 주요 정당을 대상으로 한다고 가정해보자. 1990년대 이후 대부분 기간에 존재했던 기능적 양당체계에서 영향력이 심각하게 감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체계에서 양당이 어떻게 유지되거나 붕괴하는지를 분석한 웨어의 저술은 본 연구에 시사점을 준다. 그는 양당제에서 '정당이 양대 정당 지위를 상실하고,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서 이를 회복하지 못할 때'를 가리켜 '정당 붕괴'라 정의한다. 물론 웨어도 단언하기를 이런 상황은 쉽사리 벌어지지 않는다. 유리한 선거 제도 와 정치 환경, 지위에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작동하기 때문이다(Ware 2009, 23). 무엇보다도 양당체계의 한 축, 즉 '주역(主役; focal arbiter)'의 자리에 있는 것이 지위 유지에 도움이 된다. 유권자는 어느 한 정당에 불만이 있어도 다음 선거에서 3당이 아니라 다른 하나의 주요 정당을 지지하게 되는 경

1) 다만 그는 실패(fail)가 기능적 결함에 대해 책임을 묻는 용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패배(defeat)'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우가 많고, 정치 지망생도 당선에 유리한 정당을 선택해 엘리트가 두 당에 집중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Ware 2009, 13-23).

웨어가 말한 붕괴 상태는 양당제의 경우라면 사실상 영향력의 상실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기능적 양당체제에서 정당 실패 수준으로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기준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해법은 정치 제도와 문화를 반영하는 가운데 도출될 수 있다. 한국 사례를 예로 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원구성, 의제 설정과 결정 등 의회 정치가 사실상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정당의 영향력을 논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구성 여부가 핵심이 되어야 하며, 도전하는 제3의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기존 영향력에 큰 변화를 가져온 현상이 될 것이다.

특히 거대 정당이 기능적 양당체제를 구성하며 대표하는 진영을 지배하거나 주도하는 상황에서, 해당 진영에서 출현하는 새로운 정당이 각각의 정당에게 도전이 될 것이다. 즉 미래통합당계열 입장에서는 보수 진영에서 도전하는 정당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시킬 정도로 의석을 확보하는 경우가 된다. 같은 논리로 만약 민주당계열에게서 영향력에 변화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진보 진영에서 도전하는 정당에 의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1회의 총선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여 기존 주요 정당의 실패를 논할 수 있을까? 여기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웨어가 양당의 지위에서 밀려난 뒤 향후 '10년의 기간 동안 이를 만회하지 못할 경우'를 정당 붕괴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서 10년이란 기간은 딱히 명확한 근거를 통해 설정된 기준이 아니라 다분히 주관적인데, 사실 관련 논의에서 이는 불가피한 한계로 보인다. 따라서 이 10년 정도의 시간을 받아들여 선거 주기를 기준으로 재설정하여 '특정 총선에서 도전 정당에 교섭단체 구성을 허용하고, 역시 다음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온 경우'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일단 특정한 한 번의 총선에서 새로운 교섭단체를 허용하는 것은 당시 예측 불가능한 대형 사건이나 일시적 정계개편에 의해서도 가능할 법한 일이다. 따라서 이런 결과가 한 번에 그친다면 그것은 일회적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나아 보인다. 그러나 연이은 총선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해당 정당의 영향력에 큰 변화가 생긴, 즉 영향력의 심각한 감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유권자 지지에 어떤 고착화된 흐름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지금까지 다양하게 진행된 논의를 정리해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당 위기관 '정당 쇠퇴 현상이 지속되어 정당 실패에 이를 위협에 처한 경우'라고 조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정당 쇠퇴는 '조직 수준 정당'과 '유권자

내 정당'이 상징하는, 정당의 대중적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경우이다. 그 결과로 선거에서 부진한 결과를 내게 되면 '정부 내 정당'의 축소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정당 실패란 이런 정치적 영향력에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경우이며, 한국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주의적으로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정당이 연속된 두 번의 총선에서 20인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하여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정당의 대중적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부진한 선거 결과로 이 같은 상황을 허용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를 정당 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V. 어떻게 평가하고 판별할 것인가?

정당 위기는 정당 쇠퇴와 정당 실패 현상으로 조각되며, 이를 통합적으로 검토할 때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명된 듯하다. 그런데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정당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의견이 모인다. 차이가 있다면, 당원을 어느 영역의 구성 요소라 간주하고 있는냐에 있다. 캐츠와 메이어는 당원을 '재정 후원자(financial supporters) 및 충성스런 지지자(loyal voters)'와 함께 풀뿌리 정당 영역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Katz & Mair 1995), 벡과 키 등은 당원을 충성스런 지지자와 분리시켜 당 조직을 구성하는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Sorauf & Beck 1988).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더 나은지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심지연·김민전 2007, 261).

캐츠와 메이어의 분류 방식은 정당이 시민 사회의 이해 대변자에서 어떻게 국가 기관화 되었는지를 분석하기에 유리하다. 당원이나 후원자에게 의지했던 정당 운영 자금을 점차 국가에 의존하여 획득하게 됨으로써 카르텔 정당이 출현하는데, 수행하는 역할의 유사성을 고려하고 그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이들을 같은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유용한 것이다. 그래서 이 방식은 특히 서유럽 대중정당의 변화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후발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 진화 및 정당과 유권자 간 관계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벡과 키 등의 모델이 더욱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같은 후발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은 당원 중심 조직의 성장 가능성과 정

당과 일반 유권자 간 연계 수준에 대한 향후 기대나 목표가 확연히 다르다. 또 정당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 등은 기본적 입장에서 당원을 중시하는 흐름과 일반 유권자를 중시하는 축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당에 충성스런 유권자로 구성되는 유권자 내 정당과 당원이 중심이 되는 조직 수준 정당을 구분하는 것이 분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논문의 목적에 따라 정당 쇠퇴 여부와 실패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이를 드러내는 정당의 구성 영역과 표징을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관련 연구에서는 기능주의적 접근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된다(Strøm & Svånsd 1997, 5). 실제로 정당이 쇠퇴하거나 실패한다면, 그것은 정당의 임무 중 일부 혹은 전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포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Webb 2002, 10).

〈표 1〉 정당의 구성 영역과 수행 기능

정당의 구성 영역	수행 기능
유권자 내 정당 Parties in the Electorate	투표자를 위한 선택의 단순화: 일관된 투표 선택 시민 교육: 정보 제공 및 우호적 시민 확대 일체감과 충성심의 표상 창출 인민(people)의 동원: 투표 참여 또는 독려 활동
조직 수준 정당 Parties as Organizations	정치 지도자의 모집과 공직 진출 준비 정치 지망생의 육성 이익 집합과 표출
정부 내 정당 Parties in Government	정책 목표 실현 정부 구성 및 시책에 대한 책임성 강화 야당으로서 정책 결정 과정의 공유 또는 견제

*출처: (Dalton & Wattenberg 2002a, 5-10) 재구성

‘유권자 내 정당’의 핵심 역할은 정당이 일반 시민들로부터 괴리되지 않은 채 이들의 여론을 고려하여 정치적 효능감을 제공하고, 그 결과 유권자를 정당에 귀속시키는 데 있다. 또 지지 정당의 승리를 위해 선거라는 절차적 민주주의에의 참여를 도모한다. 그런 점에서 이 기능은 민주주의의 본령에 해당되며 그 질을 제고한다. 이 영역의 세부 기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투표자를 위한 선택의 단순화(simplifying choices for voters)’ 기능은 정당의 이름 자체가 투표자를 위한 선택 기준이 된다는 의미이다. 현실에서 정

당이 이슈에 관하여 명확하고도 일관된 입장을 취한다면, 유권자는 적어도 후보자의 정책을 일일이 확인하는 비용을 치르지 않더라도 추천 정당을 통해 선택 후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Dalton & Wattenberg 2002b, 6). 특정 정당에 고정된 동조자가 많을수록 향후 선거에서도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이 기능은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을 때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다. 이런 효과를 증대시켜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시민 교육(educating citizens)' 기능이다. 비록 기술 발달에 따라 그 역할이 축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은 미디어를 통해 정책과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여 시민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려 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정당은 유권자의 일체감과 충성심을 고양하고, 그만큼 투표에서 지지자를 동원(mobilization)하기가 쉬워진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 핵심어는 바로 '정당 일체감'과 '동원'이 된다. 정당 일체감을 가진 유권자라면 논리상 선거 때마다 비교적 일정한 정당에 투표하게 되고, 이런 유권자가 많은 정당에게서는 선거 유동성(voting volatility)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권자 내 정당의 기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정당 일체감을 보유한 유권자의 규모와 선거 유동성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투표율의 변화 양상도 동원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조직 수준 정당'은 유권자가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통로이자 수단이 된다. 시민은 자신의 이해를 정책으로 관철할 수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정당에 당원으로 참여하여 그 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당의 관료(party staff)가 되어 정책 수립 및 선거를 준비하는 정당 고유의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고, 정치 엘리트로 성장하여 직접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물론 최근에는 '인재영입'이라는 이름으로 외부 엘리트를 바로 공천하는 경우도 많으나, 여전히 당원은 공직 후보자가 되는데 중요한 요건이다. 따라서 조직 수준 정당의 핵심어는 당원과 정당 조직의 당직자가 된다. 만약 조직 수준 정당의 약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들 지표에서 하락 추세가 발견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당법은 당 관료 규모를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례에서 정당 관료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 당원의 수, 즉 당 조직의 크기가 지표로서 의미를 가질 것이나, 한국을 포함해 후발 민주주의 국가를 연구하는 경우에는 정당사적인 측면에서 이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에서 정당 정치가 정착되어가던 초창기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고전적 의미의 대중정당이 쇠퇴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당 조직이 완비되기도 전에 외부 환경은 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이 어려

운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 따라서 당원 규모를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 단순히 그 규모를 두고 논하기보다 증감의 추세로 해석하는 것이 쇠퇴나 성장이라는 동태적 변화를 판별하는 데 더 적합할 수 있다.

‘정부 내 정당’은 이제 당이 대표하는 유권자들의 요구를 실제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영역이다. 여기서 정부는 행정부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기관 전체를 포괄한다. 입법을 통한 정책 실현을 위해 정당은 국회 의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자 한다. 원내 다수 의석은 의회제(parliamentarism)에서 집권을 의미하기도 하며, 대통령제(presidentialism)에서는 원만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 집권에 성공한 여당은 다양한 공공 기관을 운영하는데 참여할 수 있으며, 이렇게 획득한 공식 자체가 집권의 목표일 수도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정책을 견제하고 지지자들의 이해를 최대한 정책화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 영향력은 역시 의석수에 좌우된다.

그런데 이들 정당의 행태/성과(performance)는 책임성(responsibility)을 수반한다. 만일 집권당의 정책과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면, 유권자는 차기 선거에서 해당 정당에 대한 회고 투표로 야당을 지지하게 된다(Dalton & Wattenberg 2002b). 만일 야당의 정부 내 정당 성과에 모두 불만족을 느낀다면 유권자는 선거에서 도전하는 제3당에 투표하는 것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것이다. 불만족이 클수록 도전 정당이 획득하는 의석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기존 양당의 영향력이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 내 정당의 규모는 공식 선거에서의 당선인 수와 점유율로 표현된다. 또 각종 공공 기관 경영을 집권 정당이 많이 수입할수록 이 역시 정부 내 정당 규모를 표현하는 간접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당 쇠퇴를 대중 기반의 지속적인 약화라고 했을 때, 이에 해당하는 영역이 바로 유권자 내 정당과 조직 수준 정당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쇠퇴하는 정당에서 발견할 수 있는 표징은 ‘정당 일체감 약화, 높은 선거 유동성, 투표율 감소, 당원 수 감소, 당 관료 조직의 축소’가 될 것이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당원 수와 당 관료 조직의 축소 부분은 분석 대상 국가에 따라 면밀한 해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정당 실패는 바로 정부 내 정당 문제이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유권자의 불만이 누증되면 결국 해당 정당 지지자들의 이탈을 부른다. 이러한 상황이 수습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정당은 선거에서 이전 성적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정부 내 정당’의 축소라는 현실에 맞닥뜨릴 수 있다. 신당으로 이동하는 유권자는 새로운 정당의 ‘유권자 내 정당’을 구성하게 되고, 크지 않았던 ‘정부

내 정당의 규모가 다음 선거를 통해 성장하게 되면 주요 정당의 영향력에 큰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같은 상황이 기존 주요 정당에게 '실패'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당 위기는 전자의 쇠퇴가 지속되면서, 후자의 실패 위험이 매우 커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VI. 결 론

후발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 정치를 오랜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를 남긴다. 20세기 중·후반부터 서구 정당 정치를 두고 '정당 위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이들 서구 정당을 위기로 판명하는 데 활용되는 각종 지표와 비교할 때, 정당 정치의 역사가 짧은 후발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 지표는 정량적 수준에서 거기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위기'라는 것이 변화 국면에서 나타나는 동태적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후자의 정당들은 태생부터 위기였다고 보는 논리적 결점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 정당의 저발전은 위기로 혼동하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들 정당은 오히려 점차 성장하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모든 정당을 두고 반복하여 위기라고 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현실에서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당 위기라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엄밀한 개념과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를 위한 이론적 논의를 목적으로 하였다. 무엇보다도 소위 정당이 위기라고 판단하는 현상들을 두고, 카르텔 정당론을 제시하는 일군의 학자들은 정당이 외부 조건에 적응하여 변화한 결과로 해석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이런 간극을 메울 수도 있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의 한계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당 위기를 '쇠퇴'라는 동태적 변화가 '실패'를 초래할 위험성이 현저하게 커진 경우로 정의 내린다. 이를 개념화하기 위해 정당 분석에서 주로 제시되는, 정당의 세 가지 구성 영역을 활용하였다. 이 중 쇠퇴는 '유권자 내 정당'과 '조직 수준 정당'에 해당하는 현상으로 정당 일체감 하락, 선거 유동성 증대, 투표율 감소, 당원 수 감소로 판명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지표의 일시적 증감이 아니라 전반적인 추세를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쇠퇴가 반등 노력 없이 계속되면, 해당 정당은 선거에서 점차 좋은 실적을 내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신당이나 이익 집단의 출현을 정당 실패의 표징으로 삼던 기존 연구를 비판하고, 선거를 통해 '정부 내 정당' 위

축이 크게 벌어져 정치적 영향력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이 영향력은 분석 대상 국가의 정치 제도나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한국의 예시로 이 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정당 위기란 바로 지속적인 정당 쇠퇴 현상으로 말미암아 정당 실패 가능성이 농후해진 시점으로 정의 내리고 이를 판별 기준으로 삼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 연구는 1차적으로 이론적 논의에서 마무리되고 있다. 또 이 논문에서 말한 여러 지표, 특히 선거 결과 등은 당선자 결정 방식이나 선거구 크기와 같은 제도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통시적 변화를 논하는 경우 이 역시 고려해야 한다. 추후 한국과 같은 후발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념과 평가 방법의 적실성을 입증하려 한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강원택. 2005.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서울: 인간사랑.
- _____. 2007. 『인터넷과 한국정치: 정당정치에 대한 도전과 변화』. 경기 파주: 집문당.
- 곽진영. 2002. “정당쇠퇴론에 대한 대안적 설명 틀로서의 거버넌스: 이론적 논의.” 『한국정당학회보』 1(1), 65-88.
- 권순미. 2002. “일본 사회당 실패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03. “일본 사회당의 실패와 조직 노동과의 관계.” 『한국정치학회보』 37(3), 311-332.
- 김영태. 2009. “정당발전과 내부개혁.” 『한국과 국제정치』 25(1), 119-147.
- 김용호. 2001. 『한국 정당정치의 이해』. 서울: 나남신서.
- 김윤철. 2009. “개별 정당의 위기 분석을 위한 이론적 모색: 리더십과 유인정치의 문제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0, 6-38.
- 마인섭, 장 훈, 김제한. 1997. “한국에서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등장과 사회적 균열구조의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13(3), 29-52.
- 박경미. 2011. “서구 중심주의적 정당위기의 비판적 소고.” 『비교민주주의연구』 7(1), 95-125.
- 심지연, 김민진. 2007. 『한국 정치제도의 진화경로: 선거, 정당, 정치자금제도』. 서울: 백산서당.
- 이갑윤. 1988.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서울: 오름.
- _____. 2011. 『한국인의 투표 행태』. 서울: 후마니타스.
- 이연호, 임유진, 박태용. 2007. “거버넌스 등장의 국내 정치적 요인.” 『21세기정치학회보』 17(3), 169-198.
- 임혁백. 2012. “대의민주주의와 소셜미디어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19대 총선과 한국정치’ 발표논문.
- 장 훈. 2003a. “정당의 위기와 대안적 조직의 등장: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사례.” 『국제·지역연구』 12(3), 113-134.
- _____. 2003b. “카르텔 정당체제의 형성과 발전: 민주화 이후 한국의 경우.” 『한국과 국제정치』 19(4), 31-59.
- 정진민. 1998. 『후기 산업사회 정당정치와 한국의 정당발전』. 서울: 한울아카데미.

- _____. 2011. 『한국의 정당정치와 대통령제 민주주의』. 경기 고양: 인간사랑.
- _____, 길정아. 2014. "18대 대선에서 나타난 한국 무당파 유권자의 특성과 행태-인지적 동원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20(3), 135-162.
-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 2001.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서울: 아카데미아리서치.
- 최장집. 2005.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영문 자료

- Bartels, Larry M. 2000. "Partisanship and Voting Behavior, 1952-1996."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1), 35-50.
- Birnir, Jóhann Kristín. 2010. "Where Are the Disgruntled Voters?: Voter-Party Relations under Cartelizing Conditions." *Party Politics* 16(1), 29-49.
- Christiansen, Flemming J. 2012. "Organizational De-integra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Interest Groups in Denmark." *Party Politics* 18(1), 27-43.
- Cohen, Jeffrey E., Richard Fleisher and Paul Kantor, eds. 2001. *American Political Parties: Decline or Resurgence* Washington D.C.: CQ Press.
- Daalder, Hans. 2002. "Parties: Denied, Dismissed, or Redundant?" in *Political Parties: Old Concepts and New Challenges*, edited by Richard Gunther, José Ramón Montero, and Juan J. Linz, 39-5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alton, Russell J. 2006. *Citizen Politics: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Par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4th ed. Washington D.C.: CQ press.
- _____. 2013. *The Apartisan American: Dealignment and Changing Electoral Politics*. Thousand Oaks, CA: CQ Press.
- _____, and Martin P. Wattenberg, eds. 2002a. *Parties without Partisans: Politic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2b. "Unthinkable Democracy: Politic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in *Parties without Partisans: Politic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edited by Russell J. Dalton and Martin P. Wattenberg, 3-16.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2c. "Partisan Change and the Democratic Process." in *Parties without Partisans: Politic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 Democracies*, edited by Russell J. Dalton and Martin P. Wattenberg, 261-285.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Drummond, Andrew J. 2006. "Electoral Volatility and Party Decline in Western Democracies: 1970-1995." *Political Studies* 54, 628-647.
- Hetherington, Marc J. 2001. "Resurgent Mass Partisanship: The Role of Elite Polariz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3), 619-631.
- Hug, Simon. 2001. *Altering Party Systems: Strategic Behavior and the Emergence of New Political Parties in Western Democracie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Ignazi, Piero. 1996. "The Crisis of Parties and the Rise of New Political Parties." *Party Politics* 2(4), 549-566.
-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alali, Carlos, Patrícia Silva and Sandra Silva. 2012. "Givers and Takers: Parties, State Resources and Civil Society in Portugal." *Party Politics* 18(1), 61-80.
- Katz, Richard S. and Peter Mair. 1995. "Changing Model of Party Organization and Party Democracy: The Emergence of the Cartel Party." *Party Politics* 1(1), 5-28.
- _____. 1997. "Party Organization, Party Democracy, and the Emergence of the Cartel Party." in *Party System Change: Approaches and Interpretations*, edited by Peter Mair, 93-11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2. "Parties, Interest Groups and Cartels: A Comment." *Party Politics* 18(1), 107-111.
- Krieger, Joel, ed. 2001. *The Oxford Companion to Politics of the World*,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wak Jin Young. 2003. "The Party-State Liaison in Korea: Searching for Evidence of the Cartelized System." *Asian Perspective* 27(1), 109-135.
- Lago, Ignacio and Ferran Martínez. 2011. "Why New Parties?" *Party Politics* 17(3), 3-20.
- LaPalombara, Joseph. 2007. "Reflections on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Development, Four Decades Later." *Party Politics* 13(2), 141-154.

- Laver, Michael. 2005. "Policy and the Dynamics of Political Compet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9, 263-281.
- Lawrence, David G. 2001. "On the Resurgence of Party Identification in the 1990s." in *American Political Parties: Decline or Resurgence*, edited by Jeffrey E. Cohen, Richard Fleisher and Paul Kantor, 30-54. Washington D.C.: CQ Press.
- Lawson, Kay and Peter H. Merkl, eds. 1988. *When Parties Fail: Emerging Alternative Organiz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7. *When Parties Prosper: The Uses of Electoral Success*.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 Lucardie, Paul. 2010. "Prophets, Purifiers and Prolocutors." *Party Politics* 16(2), 175-185.
- Mack, Charles S. 2010. *When Political Parties Die A Cross-National Analysis of Disalignment and Realignment*. Santa Barbara, California: Praeger.
- Meguid, Bonnie M. 2006. "Competition Between Unequals: The Role of Mainstream Party Strategy in Niche Party Succ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9(3), 347-359
- _____. 2010. *Party Competition Between Unequal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ller, Geoffrey. 2007. "Why Small Parties Fail: A Case Study of ACT New Zealand." *Political Science* 59(2), 79-95.
- Offe, Claus. 1990. "Reflections on the Institutional Self-Transformation of Movement Politics." in *Challenging the Political Order: New Social and Political Movements in Western Democracies*, edited by Russell J. Dalton and Manfred Kuechler, 232-25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anbianco, Angelo. 1988. *Political Parties: Organization and Powe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dersen, Mogens N. 1988. "The Danish Folketing Election, 1973." in *When Parties Fail: Emerging Alternative Organizations*, edited by Kay Lawson and Peter H. Merkl, 257-281.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oguntke, Thomas. 2005. "Party Organizational Linkage: Parties Without Firm Social Roots?" in *Political Parties in the New Europe: Political and Analytical Challenges*, edited by Kurt Richard Luther and Ferdinand

- Müller-Rommel, 43-6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ose, Richard and Thomas T. Mackie. 1988. "Do Parties Persist or Fail?" in *When Parties Fail: Emerging Alternative Organizations*, edited by Kay Lawson and Peter H. Merkl, 533-55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rtori, Giovanni. 2005. *Parties and Party Systems: A Framework for Analysis*. Colchester, UK: ECPR Press.
- Scarrow, Susan E. 2002. "Parties without Members? Party Organization in a Changing Electoral Environment." in *Parties without Partisans: Politic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edited by Russell J. Dalton and Martin P. Wattenberg, 79-101.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Schattschneider, E. E. 1960. *The Semisovereign People: A Realist'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Schwartz, Mildred A. 2010. "Interactions between Social Movements and US Political Parties." *Party Politics* 16(5), 587-607.
- Selb, Peter and Sandrine Pituctin. 2010.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Study of New Parties' Entry and Electoral Success." *Party Politics* 16(2), 147-170.
- Sferza, Serenella. 2002. "Party Organization and Party Performance: The Case of the French Socialist Party." in *Political Parties: Old Concepts and New Challenges*, edited by Richard Gunther, José Ramón Montero, and Juan J. Linz, 166-19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ikk, Allan. 2012. "Newness As a Winning Formula for New Political Parties." *Party Politics* 18(4), 465-486.
- Smith, Rodney and Anika Gauja. 2010. "Understanding Party Constitutions as Responses to Specific Challenge." *Party Politics* 16(6), 755-775.
- Sorauf, Frank J. and Paul A. Beck, eds. 1988. *Party Politics in America*, 6th ed. Boston: Sco, Foresman & Company.
- Strøm, Kaare. 2002. "Parties at the Core of Government." in *Parties without Partisans: Politic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edited by Russell J. Dalton and Martin P. Wattenberg, 180-207.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and Lars Svåsnad. 1997. "Political Parties in Norway: Facing

- the Challengers of a New Society." in *Challenges to Political Parties: the Case of Norway*, edited by Kaare Strøm and Lars Svåsnad, 1-32.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Tavits, Margit. 2006. "Party System Change: Testing a Model of New Party Entry." *Party Politics* 12(1), 99-119.
- Thies, Michael F. 2002. "On the Primacy of Party in Government: Why Legislative Parties Can Survive Party Decline in the Electorate." in *Parties without Partisans: Politic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edited by Russell J. Dalton and Martin P. Wattenberg, 238-257.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Van Biezen, Ingrid, Peter Mair and Thomas Poguntke. 2012. "Going, Going,....Gone? The Decline of Party Membership in Contemporary Europ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51(1), 24-56.
- von Beyme, Klaus. 1996. "Party Leadership and Change in Party Systems: Towards a Post-Modern Party State." *Government and Opposition* 31, 135-159.
- Ware, Alan. 2007. *Political Parties and Party System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9. *The Dynamics of Two-Party Politics: Party Structures and the Management of Compet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attenberg, Martin P. 2000. "The Decline of Party Mobilization." in *Parties without Partisans: Politic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edited by Russell J. Dalton and Martin P. Wattenberg, 64-76.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Webb, Paul. 2002. "Political Par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in *Political Par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edited by Paul Webb, David M. Farrell and Ian Holliday, 1-1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David M. Farrell and Ian Holliday. 2002. *Political Par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Yishai, Yael. 2001. "Bringing Society Back in: Post-Cartel Parties in Israel." *Party Politics* 7(6), 667-687.

Abstract

A Suggestion for Establishment of 'Party Crisis' Concept and Effective Measurement

Jinwung Jung | Dankook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define the theoretical meaning of 'party crisis' and suggest how to measure it. This paper illuminates two main dimensions of 'the crisis of political parties': the decline and failure of political parties. The crisis of political parties occurs when political parties are in imminent danger of total failure with the consistent decline of people's support for those parties. Specifically, the decline of political parties is mainly about people's approval of parties whereas a certain party's real influence on politics is a good measurement of party failure. With regard to 'decline,' this paper takes into account two dimensions of parties: 'political party as organization' and 'party in the electorate.' By the same token, number and influence of party figures in the cabinet were used to operationalize 'party failure.'

Key Words: party crisis, party decline, party failure, party in the electorate, party as organizations, party in government

한나 아렌트의 3층위 연방제에 관한 연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해결을 위한 평화구상

박명림 ■ 연세대학교*

강효인 ■ 연세대학교**

〈국문요약〉

본고는 20세기의 정치사상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독특한 3층위 연방제 평화구상에 관한 연구이다. 아렌트는 이스라엘 건국 전후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가올 혹독한 분쟁을 예견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연방을 제도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혼성적인 민족들이 공존하는 장구한 인종·문명·종교 간 충돌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본고는 그동안 아렌트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그의 평화사상, 특히 연방(federation) 개념과 구상을 일차 저작들에 바탕하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사례로 분석하고 있다. 자신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렌트는 안팎을 함께 보는 아르키메데스적인 사유전환을 통해 국민국가 체제 및 주권 개념에 대한 예리한 비판 위에서 유대 국민국가-이스라엘 건설 노선을 비판한다. 동시에 아랍과 유대의 공동체 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바람직하면서도 현실적인 안으로서 아랍인-유대인 지역 공동체 평화회의, 지역연방(지중해연방/신영연방), 유럽연방으로 이어지는 아랍-유대 3층위 연방안을 제시한다. 그가 보기에 이 3층 연방안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다민족·다종교·다문화의 융합과 충돌로 혼합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역에 평화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정치체인 것이다.

*주제어: 한나 아렌트, 연방, 연방제, 평화구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 주저자.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 협동과정 교수 (E-mail: mlpark@yonsei.ac.kr)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 인간평화와 치유연구센터 연구원
(E-mail: irin.hyoin@gmail.com)

I. 문제제기

“유대인, 그리스도인, 무슬림의 예언자들, 곧 비전과 인간성을 지닌 자들이 존재하는, 신성의 세계로 향하는 지상의 관문”(Nusseibeh & David 2007, 550)이면서, “지구상의 어느 곳보다 많은 거룩한 살인, 강간, 약탈”(몬티피오리 2012, 618)이 일어난 곳, “세상에 남아있는 기록들 중 가장 인상적이면서도 엄청난 사건들의 극장”(Barclay 1858, xii).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이 묘사들은, 성지(Holy Land)를 둘러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역의 역사를 압축 설명하고 있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거대 대륙 간의 경계이며, 문명사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헬라문명의 교차지이고, 종교적으로는 세계 3대 일신교인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발원지이다. 따라서 문명과 종교 간의 오랜 긴장과 충돌의 무대인 동시에, 혼성적인 인종과 민족들이 혼용하며 공존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1948년 이스라엘의 근대국가 건립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은 투쟁과 갈등의 역사를 보여주는 표본이었다. 중동 전체와 유럽, 미국, 소련(러시아)까지 휘말렸던 4차례에 걸친 중동전쟁과, 1987년 이스라엘군 주둔에 저항하는 인티파다(Intifada)¹⁾, 2017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서 발발한 제3차 인티파다, 그리고 계속되는 무력분쟁과 역내 테러는 아직도 이 지역이 극도의 위험지대임을 보여준다.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1920년 이래 양측 간 전쟁 및 테러에 의한 사망자수를 보면 유대 측 2만 5천여 명, 아랍 측 9만 1천여 명으로 총 11만 6천여 명에 달한다(<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total-casualties-arab-israeli-conflict.2020/01/15> 검색). 또한 중동전쟁 이후로 연속된 역내 정정불안과 레바논 전쟁, 이라크 전쟁, 시리아 전쟁, 최근의 이란-미국 간 분쟁까지 고려한다면 중동지역은 ‘사실상의 상시 분쟁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세기의 탁월한 정치사상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는 1940년대 이스라엘 건국을 전후로 한 긴박한 상황에서 이러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하 이·팔분쟁)의 전조를 일찍이 예견한 바 있다. 1943년과 44년, 시온주의자들의 유대국가 건설안을 비판하며 아랍인들의 이등시민화를 우려했고(Arendt 1943b, 337; Arendt 1944c, 343), 1947년 UN의 팔레스타인 분할안(United

1) 아랍어로 ‘봉기’라는 의미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점령지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 의한 민중봉기를 의미한다.

Nations Partition Plan for Palestine; United Nations, 29 November 1947)이 공표되자 아랍인들의 권리가 조직적으로 침해될 것이며 유대 공동체에 위협을 가하는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 보았다(Raz-Krakotzkin 2011, 111-113).

본인이 나치의 혹독한 피해를 받은 유대인인 아렌트는 왜 유대국가의 건설을 비판했던 것일까? 그는 이를 반대하며 무엇을 이에 대한 해법과 대안으로 제안했는가? 그가 팔레스타인 역내 평화를 위한 해법으로 제시한 연방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과연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고질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나아가, 이 지역을 넘어 다인종·다민족·다문화·다종교 간 갈등을 안고 있는 다른 경계지역들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함의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본고는 아렌트의 저작들로부터 그가 이·팔 분쟁의 해법으로 제시한 ‘연방제(federation)’구상을 새롭게 발굴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동안 아렌트에 대해서는 ‘행위(action)’ 및 ‘공공성(res publica)’(김선욱 2001; 김선욱 2015; 서유경 2014; 홍원표 2004), ‘탄생성(natality)’(공병혜 2017; 박혁 2009), ‘악의 평범성(the banality of evil)’(김선욱 2007; 장원석 2014; 홍원표 2005), ‘권리를 가질 권리(a right to have rights)’(김민수 2019; 서유경 2018; 임미원 2019; 홍태영 2018)등 그의 핵심 이론과 개념 및 주장을 둘러싼 수준 높은 연구들이 다수 제출되었다. 그러나 아렌트의 연방개념과 구상은 아직 국내의 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않은 동시에 깊이 분석되지도 못해온 주제였다. 반면 국외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각도에서 아렌트의 연방 개념이 다루어져 왔다. 아렌트의 주권비판 논의와 연방제안 탐구(Klusmeyer 2010), 1940-1946년 아렌트의 유럽연방 구상의 분석(Selinger 2016), 아렌트가 유대국민국가 건설을 반대하고 연방안을 주장하다 1국가 2민족안(binationalism)으로 변경한 경로(Jacobson 2013; Rubin 2015), 아렌트 연방제 원리의 평화유지의 역할(Heuer 2019)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그의 연방제 평화구상이 당대 뿐 아니라 현재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상황에도 실효성이 있는가에 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고는 아렌트의 유대문제 관련 일차 저작들에 바탕하여 그의 연방안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분석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핵심 분석대상으로 삼은 아렌트의 텍스트들은 Jewish Writings(2007)에 포함된 관련 저술들이다. 특히 “The Minority Question(1940),” “Can the Jewish-Arab Question Be Solved?(1943),” “The Crisis of Zionism(1943),” “The End of a Rumor(1944),” “The Jew as Pariah: A Hidden Tradition(1944),” “Zionism Reconsidered(1944),” “The Failure of Reason: The Mission of Bernadott(1948),” “To Save the Jewish

Homeland(1948)," "Peace or Armistice in the Near East?(1950)"를 핵심 전거 삼아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Jewish Politics(1942)," "We Refugees(1943)," "The Assets of Personality: A Review of Chaim Weizmann: Statesman, Scientist, Builder of the Jewish Commonwealth(1945)," "The Jewish State: Fifty Years After, Where Have Herzl's Politics Led?(1946)," "Magnes, the Conscience of the Jewish People(1952)," "Single Track to Zion: A Review of Trial and Error: The Autography of Chaim Weizmann(1949)" 를 참고하였으며, 『인간의 조건』을 포함한 관련 저작들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아렌트의 연방구상의 내용을 발굴·소개하고, 그것이 제로섬(zero-sum)게임에 가까운 이·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하고도 현실적인 경로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그 구상이 이·팔 분쟁을 넘어 만성적 분쟁지역의 갈등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보편적 해법으로 고려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론적 차원에서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해왔던 아렌트의 연방 개념과 구상에 대한 소개를 통해 아렌트 연구의 지평이 평화와 화해의 영역으로 까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논의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후의 참극과 혼돈 속에서도 시온주의와 유대국가 건설을 비판할 수 있었던 아렌트적 사유의 근거점으로서 일종의 아르키메데스의 균형점을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근대 이·팔 분쟁의 역사 속에서 양 국가론(Two-State Solution)과 일 국가론(One-State Solution)이 등장·전개·쇠퇴되는 과정을 살펴보려한다. 이는 영국과 국제사회라는 한 축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내부라는 다른 한 축을 상호 교차해가며 직조하려한다. 이어서 주권과 국민국가 위주의 접근과 해결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아렌트의 주장과 견해를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유대-아랍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의 이론 및 경로들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아렌트의 3층위 연방제 구상이, 평화와 화해를 위한 매우 설득력 있는 대안이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한나 아렌트의 아르키메데스 점에서의 사유

한나 아렌트는 전형적인 아르키메데스적 인간이었다. 아렌트는 지구라는 환경과 관찰자인 인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지구는 우주의 관점으로 관찰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Arendt 1998, 257-280; Holland & Landgraf 2014; Yaqoob 2014; 박명림 2015). 지구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지구 밖 우주의 보편 관점을 취하면서부터 인간은 지구적 존재가 아닌 우주적 존재로 확립되었으며, 지구를 당연하게 주어진 인간 거주 조건이 아닌 하나의 사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아르키메데스는 지구 밖 한 점이라는 가설적 지점을 설정해 그곳으로부터 지구를 바라보는 우주적·보편적 인식론을 시도한 사상가였다. 이러한 아르키메데스의 균형점은 보편적 회의를 시작하게 하는 거리두기의 지점이자, 근대과학, 나아가 근대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생시킨 혁신적 사유의 지점이었다.

아르키메데스의 균형점은 아렌트 본인의 사유의 노력에서 엿볼 수 있는, 일종의 인식의 근거지와도 같았다. 아렌트는 인간이 자신이 연관되어 있는 것들로부터 거리두기(*distanz/distance*)를 행할 때 비로소 균형감 있는 측정능력, 사유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Arendt 1998, 251). 아르키메데스의 균형점은 바로 아렌트가 평생 취하고자 했던, 자신이 존재하는 곳으로부터 벗어나 전체를 볼 수 있게 하는 사유의 지점이었다. 이는 아렌트가 “바깥에서 상황을 본다”고 말한 것에서도 드러난다(아렌트 2016, 54). 이로써 아렌트는 항상 양 극단을 거부하는 균형감으로 나아갔다. 그렇기에 “무모한 낙관주의에도, 분별없는 절망에도 반대”할 수 있었다(아렌트 2006, 34). 이러한 아르키메데스의 점은 아렌트 개인의 의지적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 자신이 홀로코스트 피해로 대표되는 유대민족에 속했음에도, 또한 나치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겪었음에도 학살에 대한 ‘유대인들의 책임’을 주장했다는 점이다. 그는 현실에 주의 깊게 맞서서 당대가 인간에게 부여한 짐을 의식적으로 떠맡는 책임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2천년 동안 모든 정치적 행위를 피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정치 경험이 없었다. 또한 자신들의 실존을 반유대주의자 혹은 파르뉴(*parvenu*)의 양 쪽에 의존하려 했다(번스타인 2009, 39-46). 따라서 19세기 말 정치적 반유대주의가 돌출했을 때 그들은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점에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정치적 책임’에서 피해갈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번스타인 2009, 99-100).

실제로 그는 이 주장 때문에 자기 민족으로부터 격렬한 비난 뿐 아니라 살해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이처럼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집단을 비판했으며, 자신이 유대인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로부터 거리를 두었던 아렌트는 실제로 끝까지 아르키메데스의 균형점에서의 사유와 행위를 실현하려 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렌트는 ‘상투적인 틀’이나 ‘유추와 일반화’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거부했다

(아렌트 2006, 34). “당신은 보수주의자인가? 아니면 당신은 자유주의자인가?”라는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의 물음에 대한 아렌트의 답변은 이를 잘 보여준다. “나는 모른다. 나는 실제로 모르며, 결코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어떤 위치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좌파들이 나를 보수주의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보수주의자들은 때때로 나를 좌파라고 생각하거나 독립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이 세기의 실질적인 문제들이 이러한 종류의 일로 어떠한 형태의 해명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영브릴 2007, 727) 이처럼 그는 기존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이분법을 거부했으며, 전체를 사유할 뿐 자신의 입지나 정체성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다.

그런 그가 거의 유일하게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패리아(pariah)였다. 패리아는 천민족속(pariavolk)이라는 단어에서 비롯한 것으로 저주 받은 민족을 의미한다. 베버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사회 계층을 연구하면서 유대교를 “파리아인들의 종교”라 언급했던 바 있으며(Weber 1958, 13), 야스퍼스는 2차대전 후의 독일인의 상황을 패리아에 비유하기도 했다(야스퍼스 2014, 75). 패리아는 곧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이들(social outcasts)이며, 유대인 패리아는 계몽과 유대인 해방 이후의 서유럽 유대인들, 즉 추방당한 유대인의 지위를 묘사하는 용어이다. 아렌트는 베르나르 라자르(Bernard Lazare)와 같이 유대인 문제를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온 의식적 패리아(conscious pariah)로 깨어나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에 따르면 의식적 패리아란 “그 자신의 위치를 깨어 의식하며, 이에 저항하여 억압받는 자들의 챔피언이 된” 자들로, 사회의 구성원이면서도 사회의 지배적 가치에 저항하는 자들이다(Arendt 1944b, 283). 이는 곧 지구 안에서 지구 밖의 관점을 취했던, 그리고 국가 내에서 국외자로서 국가와 세계를 사유한 아르키메데스적 인간과도 통하는 말이다. 이러한 독특한 사유의 지점에서 아렌트는 유대아랍,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전체적 조망을 시도하여 기존의 국민국가를 비판하면서도 연방제안을 구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III. 평화안: 일 국가론과 양 국가론의 전개와 한계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은 왜 현재까지도 이토록 심각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가? 또, 우리는 왜 지금, 그동안 묻혀있던 아렌트의 연방제 구상을 발굴하여 소

환하려하는가? 이는 1948년 건국 이후, 특별히 중동전쟁 이후 확립된 기존의 이스라엘 정치체가 지닌 법률상(de jure) 위상과 사실상(de facto)의 위상의 중대한 차이 때문이며, 이러한 차야말로 끊임없는 논쟁과 무력분쟁을 낳는 근본원인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여 이의 발생과 현 체제 상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만 아렌트 논의를 발굴하고 소환하는 이론적이며 현실적인 적실성을 납득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유대국가(Jewish State)이다. 2019년 이스라엘 의회 크네세트(Knesset)는 “민족국가법(Jewish Nation-State Law)”을 통과시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역사적 조국이며 그들은 배타적 자결권을 지닌다(<https://main.knesset.gov.il/EN/activity/Pages/BasicLaws.aspx>. 2020/01/15 검색)”고 명명했다. 따라서 법률상 이스라엘의 국민은 유대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은 무국적자이자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나 1967년 6일 전쟁(Six Day War; Al Nakba)이라 불리는 제2차 중동전쟁 이후, 동예루살렘(East Jerusalem), 서안지구(West Bank), 가자지구(Gaza District)에 존재하는 다수는 스스로를 팔레스타인인 혹은 아랍인으로 인식한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가 및 점령지역(Occupied Territories)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유대인, 이스라엘 시민권을 지닌 아랍인, 팔레스타인 아랍인 등 단일민족 혹은 단일국민 정체성만으로 규정할 수 없는 혼성적 배경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듯 법과 현실 간의 현격한 괴리가 바로 이·팔 분쟁의 근원인 동시에 난점이다.

이러한 괴리를 해소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그간 제기되었던 평화의 안들은 일 국가론과 양 국가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 국가론은 그 형태나 양상이 세분화될 수 있어 하나로 통칭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²⁾ 궁극적으로 일 국가안이 의미하는 바는 인종·민족·종교의 구분 없이 영토 내 거주하는 개개인의 단일한 시민권을 인정하는 것을 가정한다. 반면, 양 국가안은 팔레스타인의 독립과 자결권을 인정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혹은 아랍과 유대가 각각 따로 주권국가를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안 모두 큰 틀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승인하는 국민국가 체계를 따르고자 한다는 특징이 있다. 본 절에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갈등의 발생 및 전개와 더불어 영국위임통치 시기부터 등장한 일 국가론과 양 국가론의 발생·전개·쇠퇴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

2) 일 국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As'ad & Bavly 2016 참고. 해당 논문의 제목은 “The Recent Debate about Binationalism”이지만, 전반적으로 1국가 안을 포괄하여 관련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다루고 있다.

제까지 안들의 특징과 한계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이·팔 분쟁의 시작인 20세기 초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인구 비율의 변화가 발생한 시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보자. 제1차 세계 대전의 초기인 1915년, 영국은 오스만 제국 중심의 중동 질서를 재편하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당시 영국은 아랍인과 유대인에게 각기 다른 전략으로 환심을 사려했다. 같은 해에 메카의 군주였던 후세인(Sayyid Hussein bin Ali)에게는 독립국가 설립을 약속하는 서한(Hussein-McMahon Correspondence)³⁾을 보내고, 한편으로는 1917년 영국의 외무부 장관 벨푸어(Arthur James Balfour)가 유대인을 대표하는 로스차일드(Walter Rothchild)에게 “팔레스타인 내 유대인을 위한 민족 고향의 건설에 호의를 표한다”는 선언(이른바 벨푸어 선언, Balfour Declaration)⁴⁾을 발표했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본심은, 전쟁이 끝난 후 오스만 제국을 분할하고 지역패권을 확보하고자 1916년 프랑스와 체결했던 비밀협정, 즉 사이크스-피코 협정(Sykes-Picot Agreement)에 있었다. 그리하여 1920년 전쟁에서 승리한 프랑스와 영국은 산레모 회의(San Remo Conference)에서 각각 시리아와 레바논, 그리고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을 통치한다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팔레스타인 내 영국 위임통치가 1948년까지 이어지게 된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유대인 박해로 인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 인구 유입이 급증하면서 아랍-유대 간 갈등이 본격화된다. 그전까지만 해도 팔레스타인은 유대인, 기독교, 무슬림들이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1933년 이래 유대인 이주민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 불만을 품은 아랍 토착민들이 무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영국의 위임통치 기간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소요사태(Arab Riots)가 발생했다. 특히 1936년은 홀로코스트를 피해 13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였던 절정기였다. 이에 위협감을 느낀 아랍인들은 1936년 4월 나블루스(Nablus)에서 툭카름(Tulkarm)으로 가는 수송대의 유대인 두 명을 살해했고, 유대인 희생자 장례식에서 소요사태가 진행되었으며, 동시에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총기소유자에 의해 두 명의 아랍 노동자들이 살해되었다. 전국적인 아랍봉기로 확산되는 시점이었다.

계속되는 폭력 사태를 관망할 수만 없었던 영국은 유대-아랍 간 갈등의 해결

3) 1915년 7월부터 1916년 1월에 걸쳐, 메카의 군주 후세인과 카이로의 고등관무관 사이에 주고받은 서한 모음 (Smith 2017, 87-92). 아랍독립에 대한 요구와, 전쟁 이후 프랑스의 영토권 영유에 대한 아랍의 반대를 담고 있다.

을 위해 고심했다. 이에 1937년 필 위원회(Peel Commission)의 보고서를 통해 최초의 양 국가안을 발표한다. 팔레스타인의 20%에 해당하는 지역, 갈릴리의 북쪽 지역과 나사렛의 남쪽에 해당하는 제즈릴 평야(Jezreel Plain), 그리고 레바논 국경부터 야파(Jaffa)의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대국가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성지이므로 위임통치 하에, 이외 나머지 영토는 아랍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이었다(Peel et al. 1937, 380-386). 보고서는 아랍과 유대인들이 단일 국가에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두 민족 사이에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 아랍 공동체는 아시아적 성향이 우세하고, 유대 공동체는 유럽적 성향이 우세하다. 그들은 종교, 언어, 문화 및 사회적 삶의 양식, 사고와 행동방식 모두가 양립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아랍인과 유대인의 국가적 동질화는 불가능해 보인다(Peel et al. 1937, 370).” 아랍봉기가 격화되는 한편 시온주의자들과 후세이니(Mufti al-Hajj Amin al-Husayni)가 각각 독립된 국가 건설을 요구하자, 필 위원회는 팔레스타인을 분할하여 각각 독립국가, 즉 양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여겼던 것이다. 또한 기독교 성지인 베들레헴과 나사렛은 영국의 위임통치를 받을 것을 권장했다. 그러나 이 안대로라면 유대국가가 수립될 지역에 거주하는 25%의 아랍인들의 권리가 박탈될 것이었다. 이에 아랍은 반발했고, 같은 해 9월 영국 고위관리가 봉기 참여자에 의해 암살당하기에 이르렀다. 이 일로 유대-아랍 간 폭력과 복수의 고리에 영국군경이 가세하여 아랍인들을 진압하기 시작하면서, 1936-39년 동안만 415명의 유대인과 5,000여명의 아랍인들이 목숨을 잃었다(<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total-casualties-arab-israeli-conflict>. 2020/01/15 검색).⁵⁾

1939년, 영국정부는 『백서』(White Paper)를 발표해 10년 내에 두 민족이 이원화된 정부로 통일국가를 세울 것을 제안했다. “팔레스타인 내 아랍인과 유대인들이 각자의 본질적 이해관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의 권위를 공유하는... 독립된 팔레스타인 국가(MacDonald 1939)”였다. 필 보고서 후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은 독립된 아랍과 유대 국가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었기 때문이다. 최초의 일 국가안이었다. 『백서』는 총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첫째 헌법(The Constitution), 둘째 이민(Immigration)의 제한, 셋째 영토(Land), 즉 유대인들의 영토구매에 제한을 둔 것이다. 특기할 것은 벨푸어 선언이 팔레스타인을 유대국가화하겠다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

5) 1936-39년 영국이 아랍 봉기를 진압했던 행태에 대해서는, 여러 1차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한 Hughes 2009참고.

다. 또한 5년 후인 1944년부터는 아랍인들이 받아들여야만 유대인 이주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시온주의자들로부터 격렬히 비판받았다. 아랍 최고 위원회 역시 팔레스타인의 즉각적 독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Smith 2017, 143).

이처럼 몇 년 새에 양 국가안과 일 국가안을 번갈아 내놓은 것을 보면 영국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목표로 한 정치체 설립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팔레스타인은 이집트, 아프리카, 이라크, 인도,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안보와 소통의 고리로 여겨져 그 지정학적 중요성이 컸기 때문이다. 1935년 10월 이탈리아가 아비시니아(Abyssinia, 현재의 에티오피아)를 침략한 사건 때문에 영국은 향후 중동 지역의 해상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이집트와 이라크에서 득세하던 민족주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에 근거지를 두고자 했다(Smith 2017, 139-140). 그러나 필 위원회의 분할안이나 『백서』의 일 국가안 모두 유대·아랍 양측으로부터 거부당했으며, 계속되던 아랍봉기와 이에 따른 혼란으로 인해 어느 안도 현실화되기란 불가능했다.

결국 2차 대전이 종결된 후인 1947년, 영국은 더 이상 팔레스타인에서 군대를 주둔시키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팔레스타인 문제를 유엔에 이양한다. 이에 유엔 총회는 팔레스타인의 장래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할 유엔 팔레스타인 특별위원회(UNSCOP: United Nations Special Committee for Palestine, 이하 UNSCOP)를 수립하였다. UNSCOP의 일부 위원은 이원화된 정부를 세우고 예루살렘을 공동수도로 삼는 일 국가안을 구상하기도 했으나, 이를 포기하고 유대국가와 아랍국가로 분리하고 예루살렘을 유엔의 관할 하에 두자는 양 국가 분할안이 승인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유엔 총회에서 이루어져 회원국 중 33개국의 찬성표를 받고 의결에 성공한다. 1947년 유엔 분할 결의안을 통해 유대인들은 실제로는 영토의 6.6%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국제사회로부터 56.47%라는 과반의 영토를 차지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낸 것과 다름이 없었다(홍미정 2006, 3-4). 이는 이스라엘 국가 건설의 결정적인 전거가 되었다.⁶⁾

결의안 발표 직후 중동은 분노한 팔레스타인과 국가수립에 필사적인 유대인

6)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을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라 부르며, 이날의 선언을 이스라엘 건국 선언 (Declaration of Establishment of State of Israel)이라 칭한다. 또한 제1차 중동전쟁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전쟁(Independence War)이라고 명명한다. 이스라엘은 건국과 독립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팔레스타인 측 학자 및 민족주의자들은 건국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여기서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보다 이스라엘 국가건설의 의미에 방점을 두어 “건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들 간의 전란에 휩싸였다. 나아가 이스라엘은 서구의 지지와 무기지원을 통해 1967년 6월 전쟁 이후 요르단 강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을 점령했다. 이후 차례로 1979년 이집트와의 협정을 통해서도 가자지역을, 1994년 요르단과의 평화협정을 통해 서안지역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공인받았다. 물론 이스라엘의 영토 합병과 점령지역화는 국제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UN 역시 여러 번의 결정을 발표하며 불법임을 경고했다.⁷⁾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전 영토를 차지하고자 했던 당초의 계획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굳이 양 국가안을 고수할 이유는 없었다.

한편,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1918년 이래 영토 분할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들은 1920년대에 영국에 의해 제기된 아랍-유대 간 대의기구 건설안도 거절했으며, 필 분할안에도 분노했다. 이에 따라 1937년 9월 아랍 측의 봉기 참여자가 영국 고위관리를 암살하여 제2차 아랍봉기가 발발했던 것인데, 당시 영국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영국의 위임통치 및 뱌푸어 선언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⁸⁾ 그들에게 유일한 대안은 오직 '독립국가 수립'이었다. 또한 아랍 연맹(Arab League)은 유엔 결의안에 앞서 UNSCOP과의 교섭도 거부했다. 벤구리온은 이렇게 협상 대상의 부재로 인한 힘의 공백이 발생했으니 국경선은 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며 정당화의 논거를 마련했다. 이스라엘 건국 이후 4차례의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이 고착화되자 팔레스타인은 점차 영토를 잃어가는 현실을 직시하고, 1988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Palestinian Liberation Organization)의 입법기관인 팔레스타인 민족평의회(PNC: Palestinian National Council)에서 이스라엘의 국가 생존권을 최초로 인정함과 동시에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선포하여, 이전까지와는 달리 양 국가 해결안에 긍정적 태도로 선화했다. 현재까지도 PLO는 서안과 가자, 동예루살렘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건설하자는 양 국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첫 평화협정인 오슬로 협정(Oslo Accords)은 양 국가안을 국제사회의 준칙으로 확립시킨 기점이었다. 오슬로 협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당사자들이 직접 논의한 평화협정으로, 당시 전 세계적으로 이·팔 지역의 평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냉전이 끝나면서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라빈(Itzhak Rabin) 정부는 대화와

7) UN Resolution 478(UNSCR 1980)과 UN Resolution 497(UNSCR 1981) 참고.

8) 팔레스타인 지도부 내의 갈등은 항존했다. 지도자인 알 후세이니 가문(al-Husayni)은 영국의 어떤 제안에도 협력하기를 거부했으나, 예루살렘 시장인 라히브 알 나샤시비(Raghib al-Nashashibi)는 위임통치 지도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했다(Smith 2017, 190).

협상의 기초 하에 ‘Land for Peace’, 즉 평화를 위해 영토를 할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한 팔레스타인 측 지도자 야세르 아라파트(Yasser Arafat)는 이러한 공격적인 이스라엘의 제안을 받아들여 역내 평화를 위한 주축으로 삼으려 시도했다. 1차 협상을 통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안지구 예리코(Jericho)의 행정권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이동했고, 2차 협상으로 서안지구 7대 도시인 헤브론(Hebron), 나블루스, 라말라(Ramallah), 예닌(Jenin), 툴카렘, 카킬라(Qalqilya), 베들레헴(Bethlehem)의 자치권이 이양되는 등 성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1995년 이즈하크 라빈 수상의 암살, 또한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하마스(Hamas)의 지속적인 테러행위, 아라파트 정부의 부정부패 등이 이어져 오슬로 협정은 결국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장되었다. 그 이유로 애초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점령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불공정한 협상이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나,⁹⁾ 핵심은 협상과정이 지난해질수록 결국 협상 당사자들이 ‘평화’를 뒤로 하고 국민국가 제도 하에서의 영토 및 주권 문제에 천착했기 때문이다.

협정 이후 26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양자 간 무력충돌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는 양 국가론은 더 이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회의감이 팽배하고 있다. 2019년 9월 총선 이후로 더욱 극우화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정치계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양국가론을 지지하는 듯하나 실상 현상유지(status quo)를 고수하고 있다. 양 국가론을 통해 독립국가의 수립을 도모하던 팔레스타인 역시 회의적이기는 마찬가지다. 마누엘 하사신(Manuel Hassassin)을 포함한 다수의 팔레스타인 전문가들은 최근 벤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가 총선에서 재선을 거두고, 미국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언한 현실 앞에서 양 국가 해법은 수명을 잃었다고 본다(Hassassin 2019; Rosner 2019; Cashman 2019).

이처럼 갈등의 시초부터 현재까지 여러 평화안들이 국내외적으로 다양하게 제기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평화안들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현실상황은 크게 유리되어 여전히 양자 간 갈등과 살육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아렌트의 독특한 이-팔 평화 구상을 소환하려는 현실적인 이유다. 그로부터 기존 평화안들이 지닌 한계를 넘어 3층 연방이라는 대안을 통해 실질적인 평화의 단초를 찾아내보고자 한다.

9) 대표적인 연구는 Roy 2006 참고.

IV. 한나 아렌트의 3층위 연방제안

1. 한나 아렌트의 주권 및 국민국가 관념 비판

아렌트는 유대국가 건설을 비판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전후 팔레스타인에 유대 연방국가(Jewish Commonwealth)를 건설하자는 내용의 ‘빌트모어 프로그램(Biltmore Program)’이 체결되면서부터였다. 1942년 5월, 시온주의자들은 미국 뉴욕의 빌트모어 호텔에서 유대연방국가의 건설, 그리고 유대기구(Jewish Agency)의 관장 하에 유대 난민들의 팔레스타인으로의 무제한적 이주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안을 발표하였다. 아렌트는 이를 선언한 유대인들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영국과 세계 정치의 일반적 경향을 무시했다며, 현실감각 없이 빈 공간 위에서 외치는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다고 “The Crisis of Zionism(1943)”에서 신랄하게 비판했다(Arendt 1943b, 337). 아렌트의 비판이 더 거세진 것은 1944년 10월 미국 애틀랜틱시티에서 열린 국제시온주의연합의 집회 이후의 일이다. 집회에서는 “분할되지도 축소되지도 않고 팔레스타인 전 영역을 포함하는……자유롭고 민주적인 유대연방국”을 포함하는 애틀랜틱시티 결의안(Atlantic City Resolution)을 좌파에서 우파에 이르기까지 만장일치로 채택했다(Arendt 1944c, 343).

아렌트가 비판했던 유대연방국가는 그가 언급한 바 있던 “진정한 연방(Genuine Federation)”과는 전혀 달랐다. 진정한 연방이란 명확히 식별가능한 국적(nationality) 또는 정치적 요소들이 함께 모여서 국가(state)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 연방 안에서는 그간 풀리지 않았던 소수-다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민족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Arendt 1943a, 195). 그러나 유대연방국이란 세계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한 곳으로 이주하여 형성한 국가, 유대라는 민족 단위에 기반한 국가, 즉 단일민족국가를 의미했다. 다시 말해 아렌트의 연방이 인간의 복수성(plurality)에 대응하며 공화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공화적 연방(republican federation)이라면, 유대연방은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미 거주하는 다수의 아랍인을 무시하는 민족적 연방(national federation)이었다.

당시 아렌트가 유대국가의 건설을 비판했던 이유는 인간의 복수성을 충분히 체험하지 못하는 주권 개념 및 국민국가 체계를 비판했던 그의 사상의 원류로부터 통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아렌트는 야스퍼스(Karl Jaspers), 말리노프스키

(Bronislaw Malinowski), 라스키(Harold Laski) 등과 함께 “공화국이라는 정치체 내의 주권의 지속적인 폐지(아렌트 2004, 257)”를 주장했던 혁신적인 사상가였다 (Sheehan 2006, 11-12). 또한 아렌트는 “주권과 전제정이 동일하다(아렌트 2004, 257)”는 표현을 사용했을 정도로 주권 개념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아렌트가 비판하는 주권 개념은 기본적으로 홉스(Thomas Hobbes)가 주창했던 주권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홉스 2009, 173-358). 홉스는 국가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권력을 위임하는 사회계약과 절대주권을 옹호했다. 그가 주장하는 주권이란 정치권력의 주체와 정치권력을 서로 분리하는 데에서부터 그 전능성을 확보한다. 홉스적 세계에서의 개인은 자기중심적이며, 사적 부를 확대하고 개인의 도구적인 합리화하기 위해 움직이는 존재이다. 국가는 이렇듯 개인이 축적하고 독점한 권력에 기반을 두는 한편, 인간을 권력 축적 기계의 한 부품으로 강등시켜버린다. 주권을 위임한 개인은 “전제정치에 대항하여 봉기할 권리도 없는 불쌍하고 온순한, 하찮은 사람(아렌트 2006, 300)”¹⁰⁾으로 전락한다.

아렌트는 주권과 자유는 정반대라고 보았다. 이는 주권이나 국가의 자주 독립이 곧 자유라고 본 서구의 전통적 견해를 뒤집는 것이다(Klusmeyer 2010, 36-37).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인간의 조건을 제시했던 아렌트의 입장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아렌트가 제시한 인간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복수성이다. 지상에 존재하는 개별 인간들이 모두 다 다르며 유일하며 독립적인데, 이런 개인들이 다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복수성을 지닌 개인들은 사회적 관계의 망에 존재하므로, 그 누구도 완전한 자기지배를 달성하는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애초에 전제했던 주권의 전능성은 개인이 곧 유일신일 때만 가능한 상상 속의 시나리오다. 또한 인간은 어떤 행위를 자유로이 시작할 수 있으나, 결국 취소할 수 없고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환원불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자유는 주권과 공존하는 게 아닌, 비주권(non-sovereignty)과 공존한다. “주권과 자유가 동일하다면 어떤 인간도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완고한 자기충족과 자기지배의 이상인 주권은 다원성의 조건에 모순되기 때문이다(아렌트 2017, 330).”

그렇다면 집단이 상호작용하는 정치체에서의 주권은 가능하며, 바람직한 것일까? 아렌트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주권은 다소 마법적으로 사람들을 복돋우는 동일한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타당하고 구속력 있게 하는, 모두가 동의한 목적에 의해 제한되고 유지된다(아렌트 2017, 342)”며, “개별 인격이라는 독

10) 홉스에 대한 아렌트의 비판적 이해는 아렌트 2006, 289-301 참고.

립체나 집단적인 민족이라는 독립체(아렌트 2017, 342)가 아닌 정치체 내에서 “약속하는 힘”, 보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이라는 체계 하에 공적 공간을 확보한 정치체 내에서의 주권은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절대군주의 주권적 의지를 국민의 일반의지로 대체한 프랑스 혁명의 사례와는 명백히 다른 주권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베스트팔렌 체제는 집단적 민족이나 단일국민의 주권을 상정하고 있어 영토 내 소수민족을 배제할 수밖에 없다. 유럽적인 의미에서 국민국가라는 공통의 언어와 역사적 경험을 소유한 동질적인 주민들의 정치공동체를 의미했다. 그러나 아렌트는 전쟁과 이주의 발발로 인해 유럽의 어느 국가도 단일한 민족으로 구성되지 않게 되었음을 깨달았다(Selinger 2016, 423). 그럼에도 국민국가는 국민들에게만 시민권을 인정했으며 출생이나 혈통의 권리로 인해 국가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만 온존한 시민권과 정치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소수민족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아렌트 2006, 431).

특히 그는 유럽의 베스트팔렌 체제가 세계적 표준으로 확산·이식된 기점인 1차대전 이후, 다민족국가에서 주민족(state peoples)과 소수민족(minorities)이 분리되어 주민족들에게 정부를 위탁하여 지배권과 주권이 주어지고, 소수민족에게는 소수민족조약이라는 예외적 법체계를 적용하여 예속되는 형태를 지적했다. 그 결과 이들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 진정한 주권은 완전한 민족 해방과 함께 쟁취할 수 있다.”고 믿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아렌트 2006, 496-497). 국가가 부분적으로 법의 도구로부터 국민의 도구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는 국민국가의 정치적 편협성과 단견은 전체주의라는 재앙으로 귀결되기까지 했음을 지적했다(아렌트 2006, 54).

그런데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단일민족 기반의 국민국가를 건설한다면 결국 영토 내에서의 한 정치주권과 단일한 민족성이 지배하게 된다. 또, 만일 주민들이 권력의 공유를 거절하거나 소수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려 한다면, 소수민족은 영토 안에서 어떤 정치체에도 의지할 수 없다(Selinger 2016, 422). 따라서 아렌트는 결국 유대 국민국가의 수립은 곧 소수인 팔레스타인의 이등 시민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았다(Arendt 1944c, 343). 이러한 방식은 반유대주의적 억압의 뒤집힌 재현이었다. 팔레스타인에서 소수민족이었던 유대인이 식민주의적인 방법을 재현하여 다수자인 아랍에게 소수자의 위치를 부여하게 되는 셈이었다. 이로써 아랍에게는 자발적인 이주 또는 이등시민의 선택만이 주어지게 된다. 이 대목에서 아렌트는 아마도 자신이 이등시민으로 머물고 싶지 않아 독일에서 떠나게 된 경험을 상기했을 것이다(아렌트 2016, 29).

또한 아렌트는 “Peace or Armistice in the Near East?(1950)”를 통해 유대 국민국가 건설로 인해 아랍이 발칸화(Balkanization)될 것을 우려했다(Arendt 1950, 446-450). 주목할만한 통찰이었다. 발칸화란 원래의 지리적 위치를 의미하는 발칸(Balkan)에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용어이다.¹¹⁾ 메스트로비치(1994)에 의하면 발칸화란 본래 하나였던 정치 단위가 서로 적대하는 작은 단위로 분할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단지 발칸지역에만 적용되는 용어는 아니며, 동맹이 분열되고 연합이 붕괴되는 현상이나 역내 소수자나 종족에 대한 적대감이 심화되는 현상을 뜻한다(Mestrovic 1994, viii). 앞서 아렌트가 국민국가 비판의 사례로 체코슬로바키아나 유고슬라비아를 언급하였던 것에서도 보듯, 그는 1차 대전 이후 소수민족조약이 적용된 발칸지역의 결말과 그 원인을 탐색하며 반면교사로 삼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민족이 공존하던 지역에서 민족의 자주독립을 지향하는 국가체계가 당연시될 때, 독립국 간 갈등의 해결방식은 전쟁 이외의 다른 최후방책은 없다는 점 또한 당연한 듯 전제된다(아렌트 2016, 152). 아렌트는 이렇듯 발칸지역 및 발칸화에 대한 역사적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아랍의 소국들인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트랜스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가 민족주권을 주장한다면 결국 아랍지역은 민족 이익을 해하는, 강대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전쟁터가 될 것을 우려했다(Arendt 1950, 446).

또한 아렌트에 의하면 러시아나 발칸 국가에서는 서구의 국민국가와 달리 국경이 계속 변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상태에 있어 자신들의 뿌리가 없다는 박탈감에서 비롯된 종족 민족주의가 발현되었다. 이로써 발칸은 민족의 신적 기원을 찾게 되면서 다른 민족을 배제하고 민족국가를 설립하려 투쟁하며 분열되었다. 이러한 발칸의 범민족 운동과 유대민족의 뿌리 없는 실존은 아렌트가 보기에는 매우 유사한 점이 있었다(아렌트 2006, 434-435). 비교를 통해 그는

11) 용어의 기원은 19세기 말 발칸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오스만 제국 내에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반란 등 민족 단위의 반란이 발생하자, 이 지역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열강들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결렬되면서 발칸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전쟁의 결과로 그리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독립 및 분할하면서 이들이 발칸지역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후 발칸화는 이전의 지정학적 단위가 민족 중심으로 새로이 소국으로 분할되는 현상을 의미하기 시작했다. ‘발칸화’라는 용어는 1차대전 이후 합스부르크 및 로마노프 제국이 분할되면서 폴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가 등장하게 되어 더욱 많이 사용되었다. 보다 자세한 발칸 및 발칸화의 어원과 역사에 대해서는 Simic 2013; Todorova 2009, 21-37 참고. 서부 아프리카의 발칸화는 한양환 2006, 라틴 아메리카 및 아프리카의 발칸화는 Bates et al. 2007 참고.

다민족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민족주의에 기반한 국가설립의 위험성을 경고하고자 했던 것이다.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아랍인들을 강제로 몰아내고, 유대인의 존립을 위협하는 전쟁의 서막을 예견했던 아렌트의 우려는 1948년 4월 18일 이스라엘 국가 설립 선언과 함께 현실화되었다.

2. 한나 아렌트의 3층위 연방제안

아렌트가 하나의 독립적인 논문에서 연방제 구상에 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제안한 바는 없었다. 그러나 그의 저작 곳곳에 산견된 연방에 대한 깊은 사유와 구상들을 모아보면 아렌트의 연방제는, 정치에 대한 자신의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하나의 통합적이며 정교한 대안으로서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간기의 소위 연방적 계기(페더럴 모멘트, federal moment)¹²로부터 이스라엘 국가 건설 전후에 이르기까지, 아렌트는 지속적으로 중동지역의 발칸화를 막기 위한 대안은 연방임을 강조했다. 연방제는 자기민족의 밖에서 전체를 조망했던 아렌트의 아르키메데스적 사고가 낳은 이론과 지혜의 정수인 것이다.

그가 보기에 팔레스타인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자 대안 역시 국가의 개념으로부터 민족자결권이 분리된 연방제였다. 그에게 연방은 자발성과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소위 이소노미(isonomy)를 실현할 수 있는, 그리하여 공화적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였다. 이소노미란 자유와 평등을 의미하는 고대 폴리스의 속성으로 아렌트가 중시했던 개념이다. 첫째, 지배받지 않는 조건 하에서 시민들이 함께 생활하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구분하지 않는 자유의 정치 조직이다. 군주정(monarchy), 과두정(oligarchy), 민주정(democracy)의 “cracy(지배)”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이다. 둘째,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평등하지 않으므로 법을 통해 평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념이다(아렌트 2004, 97-98). 이처럼 아렌트는 연방을 통해 이소노미, 즉 각 공화정 간 공적 대화의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인간의 복수성에 대응하는 연방적 평화를 위한 체제를 구상했던 것이다. 아렌트의 구상은 작은 단위의 유대-아랍 공동체 평의회(Jewish-Arab Community Council, Arendt 1948b, 400)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역연방, 나아가 유럽연방을 아우르는 3층위의 연방제라는 점에서 소위 확장된 연방체계라는 독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12) 페더럴 모멘트를 전간기로 보는 입장(Loughlin 1993)과, 1945년 이후인 2차대전 이후로 보는 시각(Collins 2013)이 있다.

아렌트가 연방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차대전 후 유럽 국민국가가 쇠락하는 현실 속에서 대안을 구하면서부터였다(Selinger 2016, 418-419). 전간기에는 유럽인이든 아니든, 진보적 지식인들 대다수가 국가 주권을 연방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해야 했을 정도로 유럽연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었다. 이는 알투스우스(Johannes Althusius)와 그로티우스(Hugo Grotius)의 고전적 연방주의 사상으로부터, 오토 바우어(Otto Bauer)나 칼 레너(Karl Renner)가 제시한 온 연방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 위에서 진행된 것이었다.¹³⁾ 당시 유럽에서는 다민족국가인 합스부르크, 로마노프,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면서 많은 국민국가들과 소수민족들이 등장했다. 이 중 소수자들은 오로지 조국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만 국가에 의한 보호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돌아갈 수 있는 조국이 없었기에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무국적자에 불과했다. 이대로라면 유대인은 전후에도 마찬가지로 국가 없는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었다. 이러한 유대인의 정치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이 연방임을 증명하고자 아렌트는 매우 이른 시점인 1940년에 “The Minority Question”이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이 글에서 그는 유대인의 곤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먼저 동화와 인구이동을 검토한다. 동화는 이미 19세기 이후 당시에는 효용이 없으며, 인구이동은 조국이 없는 유대인에게는 국외추방의 수단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연방제 안에 유대가 포함될 경우, 조국이 없던 유대인들이 유럽의 연방 체계에 기대어 보호받을 수 있었다. 유대는 여타 유럽의 다른 소수민족과 동등한 입지에서 같은 운명을 공유하게 될 것이었다. 장기적으로는 연방제의 도입으로 영토에의 소속을 강조하던 이전의 인식에서, 유럽 연방에의 소속으로 인식이 전환될 것을 기대했다(Arendt 1940, 133). 이처럼 아렌트는 유대 문제는 유럽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렌트는 당시 존재하였던 세 가지의 연방 사례를 제시하며 연방의 현실가능성에 대해 입증하고자 했다.

첫째는 소비에트 연합(Soviet Union, 이하 소련)이다. 소련은 아렌트가 나치

13) 당시 유럽의 연방주의는 하나의 이념 또는 사회구성의 원리로서, 제도나 국가 구조보다는 형성 원리로서 제시되었다. 레너와 바우어는 사회주의적 제안을 했는데, 민족의식을 영토로부터 분리해 개인지위로 만들어, 국가를 영토적 통일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연합으로 조직하자는 것이었다(Nimni 1999). 또한 이 시기, 즉 이스라엘 건국기 키부츠 운동의 사상적 흐름을 정립한 구스타프 란다우어(Gustav Landauer) 역시 사회주의의 이론 하에 개인들의 결합에 주목했다. 그는 국민국가의 전체주의화를 우려하고, 지역 공동체의 자생적 형성과 이들의 연방을 옹호하는 연방주의를 제시했던 바 있다(김영일 2001).

독일에 버금가는 전체주의 국가로 간주했을 정도로 체제의 본질과 운영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비판할 점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련의 구성원리와 역사상의 입지에 주목했다. 소련은 근대 역사상 처음으로 인민들과 민족들의 연방을 대표하는 정부를 만들어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었다.

두 번째는 영국연방(The 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이다. 이는 대영제국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영국이라는 모국과 영국인들이 정착한 세계 각국이 연결되어 있는 조직을 구상한 것이었다. 이러한 지배의 형태를 통해서만 영국의 섬들이 영국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렌트의 설명이었다(Arendt 1943a, 196).

세 번째는 미국이다. 미국은 아렌트가 예찬했던 연방의 궁극적 형태이므로 그 구조와 원리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아렌트 2004, 239-338). 미국의 국부들은 공화주의적인 헌법에 입각한 권력으로서의 연방을 구성하고자 했다. 그들은 열세 개 공화국의 주권을 지속적으로 폐지하고 권력의 중심을 확립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매디슨(James Madison)은 각 주들이 중앙정부에 권력을 양도하지 않고, 또 중앙정부의 권력이 주정부의 권력을 통제하는 방식을 구상하면서 연방과 주 정부 권력 간의 균형, 권력 속의 권력이자 주권 속의 주권을 실현하는 공화적 연방(republican federation)을 구성해 냈다. 이는 몽테스키외의 ‘연방 공화국(confederate republic)’ 논의에서 그 근간을 찾을 수 있다(해밀턴 외 2019, 75-77).

아렌트의 연방주의는 공화주의의 원리와 분리되지 않는다(아렌트 2004, 281). 이는 제퍼슨(Thomas Jefferson)에 대한 그의 이해에서 더욱 명료해진다. 제퍼슨은 소규모 공화국이 대규모 공화국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았다. 이로써 소규모 기구들을 연방이라는 정부 구조에 통합하고자 하였으며, 각기 법에 기초하여 각 공화국이 권력의 몫을 유지케 하며, 진정 통치를 위해 근본적 균형과 견제의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렌트 2004, 389). 작은 공화국들은 각각 내부적 행복을 향유할 뿐 아니라, 한 국가가 불법을 저지르거나 봉기 등의 혼란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이를 제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연합체로서 대규모 국가의 이점까지 보유할 수 있다. 미국의 기원에서 보자면 이민자들이 구성한 시민적 정치체라는 자치체들로부터 시작되어, 이 작은 공화국들의 권력이 연방 속에 지속적으로 결합됨으로써 광대한 규모의 영토에도 공화주의적 원리를 실현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다양성과 복수성을 갖는 각 개인들, 그리고 공화국들의 자치와 권력을 보장하면서도, 이것이 공화적 자유와 공존하여 궁극적인 공화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인류가 지상에 만들어낸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 중 하나였다.

또한 아렌트는 미국이 영토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는 연방주의로서 민족연방에 근접할 정도의 이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보았다. 심지어 미국은 소련과는 달리 어떤 혁명도 거치지 않고 자연스러운 단계를 거쳐 소련의 연방주의와 매우 유사한 정치체를 구축해냈다. 단일한 혹은 우세한 미국 민족이라는 실체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미국 내에서는 다양한 민족범주와 민족 각각의 정치적 지위가 존중된다. 연방은 민족들이 아닌 법에 의한 권력 하에서 자유를 누리는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다음의 로시터의 글을 인용한다. “여러분이 잉글랜드인이든 아일랜드인이든 독일인이든, 아니면 스웨덴인이든, 영국인들이 향유한 모든 시민적 자유와 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적 자유를 누릴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Rossiter 1956, 20, 아렌트 2004, 249에서 재인용)”.

물론 이상의 사례들이 연방의 완전하고 이상적인 모델인 것은 아니다. 아렌트는 이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해 연방이 현실 불가능한 대안이 아닌, 현실적이며 역사적으로 검증된, 가장 평등한 정치체제임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가장 독특하고 주목할만한 것은, 아렌트의 연방제안이 동심원적 구조로 형성되는 3층위의 연방제라는 점이다. 1층위는, 전술한 바 있는, 도시와 지방 단위에서의 유대인-아랍인 공동체 평의회이다. 아렌트는 평의회가 19세기 민족 국가와 20세기 전체국가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민주적 대안이라고 여겼다. 또한 평의회야말로 근대의 혁명 정신을 담고 있으며, 근대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자유’의 ‘섬’으로 비유하였다. 평의회는 이소노미를 구현한 형태로, 평의회 내에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아닌 평등한 존재로 만나게 된다. 구성원들은 당 체제에 의해 선발되지 않고, 개인적 자질을 기반으로 동료들에 의해 선택된 자들이다. 이러한 평의회야말로 아렌트가 생각하기에 팔레스타인의 정치적 해방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정치적 수단이었다(번스타인 2018, 191-193). 이렇듯 평의회로 이루어진 국가는 권력이 수직이 아닌 수평적으로 구성되어 연방제에 적합하다.

지역 평의회를 디딤돌로 하여, 각기 독자적인 유대연방이나 아랍연방이 아닌, 보다 더 큰 단위의 지역연방에 팔레스타인이 소속될 수 있다. 제 2층위의 연방이다. 아렌트가 제시한 안은 지중해 연방과 영연방 두 가지 형태였다(Arendt 1943a, 196-197). 첫째, ‘지중해 연방(Mediterranean Federation)’이다. 지중해 연방에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북아프리카가 모두 포함된다. 유럽 국가인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의 경우 북아프리카 없이 경제적으로 존속될 수 없으므로, 식민지 문제에 공정하고 정당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아랍의 대표성은 중동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유대인 역시 지중해

에서의 자존심과 장소성을 회복하고, 팔레스타인을 유대조국으로 남겨두면서도 아랍과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둘째, 새로운 영연방(a new British Commonwealth)으로의 편입이다. 영연방은 인도의 경우처럼 비영국출신의 인민들도 포함된 거대 연방체이다. 이 경우 유대-아랍 연방을 이룬 팔레스타인이 영연방의 하부 지역으로 포함되어, 다른 영연방 하 인민들처럼 동등한 정치적 지위를 획득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며, 민족의 이익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이다.

3번째 층위는 유럽 연방(Federation of European Countries)에의 포함이다 (Arendt 1943a, 197). 이때의 유럽연방이라 함은 근동과 북아프리카를 모두 포함한다. 이로써 유대는 유럽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되어 유럽 내 국가들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고, 이러한 우호적 조건으로 극단적 반유대주의가 제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아랍 역시 유럽인으로 포함될 것이며, 아랍의 봉건·낙후·극빈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범아랍주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유럽과 세계 유대인들의 고향으로서 남을 수 있게 된다.

아렌트는 유럽연방이 유럽을 위할 뿐 아니라 유대민족을 위한 최선의, 최고의 안이라고 보았다. 유럽연방은 영토와는 관계없이, 민족(nationality)에 기초해 정치적 권리와 대표성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아렌트가 민족을 구성단위로 설정한 이유는 민족에 의한 분류가 식별(identification)을 위한 안정적인 분류 체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Selinger 2016, 425). 그리하여 유럽에 산재하여 존재하는 무국적자 유대인들은 유럽 의회 안에서 대표권을 갖고 자기의 발언을 할 수 있게 된다. 연방 내에서 유대민족은 유럽의 민족들과 동일한 정치적 목소리와 힘을 가진 민족이다. 그렇게 된다면 정치적 경험이 부족하여 반유대주의에 대처하지 못했던, 중국에는 홀로코스트라는 파국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던 유대인의 정치적 무능력은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던 다수민족 대 소수민족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되고,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의 사례처럼 구성원 수가 아닌 민족 단위로 대표하게 되므로 국가 내 소수-다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 각 구성원들은 "한 영토에 소속되었던 소속감에서 벗어나 연방(commonwealth) 전체에 의해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민족들의 연방'에의 소속감"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연방구조 안에서 민족은 영토와 결부된 지위가 아닌 개인적인 지위가 될 것이다. 결국 민족정체성, 민족소속감으로부터 비롯한 민족 갈등은 이제 상위의, 공동의 연방정부 수준으로 상승되고 갈등이 중화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아렌트는 연방제가 유대인들의 오랜 귀환소망, 본향의식에도 배치되지 않음을 설명한다. 팔

레스타인이 연방으로 통합됨으로써 팔레스타인 지역은 유대인의 민족적 조국, 고향의 이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Arendt 1943a, 196-197).

아렌트는 이러한 3층위가 결합된 연방제안을 고수하는 입장이었음에도, 1948년을 기점으로 히브리 대학교 초대 총장 유다 마그네스(Judah Magnes)가 이끌던 이후드(Ihud, 통합) 당의 1국가 2민족 안(4)을 지지한 바 있다.¹⁵⁾ 이는 이스라엘 국가 독립이라는 급박한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른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마그네스 안의 세부는 다음과 같다. 1943년 마그네스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영국이 구상한 아랍연방의 일부가 될 팔레스타인 연합(Union for Palestine)을 제안했다. 이 연합은 첫째, 팔레스타인 내의 아랍과 유대의 2민족으로 구성된 국가(binational state), 둘째, 팔레스타인, 트랜스요르단, 시리아, 레바논과 경제 및 정치적 연방의 구상, 셋째, 자유 진영의 일부로서의 앵글로-아메리칸 연방의 연합이었다(Magnes 1943). 또한 팔레스타인이 지닌 국제적 배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건에서 팔레스타인을 국제연합의 신탁통치 하에 둘 것을 제안했다. 이 신탁통치안은 팔레스타인 통치정책 및 안보가 보장되는, 보다 넓은 범위의 지역 연방을 의미했다. 그리하여 기독교 세계를 대표하는 영국, 아랍 세계를 대표하는 아랍연맹, 유대세계를 대표하는 팔레스타인 내의 유대연합(Jewish Agency)을 모두 포함하려 했다. 이때 영국은 식민통치국가가 아닌 행정적 권위체를 담당할 수 있다. 이 협의체에는 유대와 아랍의 고위 관료가 포함된다. 나아가 팔레스타인은 아랍 연방에 포함되고, 앵글로-아메리칸 동맹(Anglo-American Alliance)의 보호를 받게 된다.

아렌트의 안은 마그네스의 안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안은 모두 유대와 아랍 간 협력을 중시한다. 이는 팔레스타인 내

14) 바이내셔널리즘(binationalism, binational approach)은 그간 “두 민족 국가(파페 2017, 77)”, “2민족 국가(영-브릴 2007, 383)”, “이중 민족 국가(번스타인 2009, 181)”, “1국가 2민족 공존(인남식 2017, 20)” 등으로 번역되어 왔다. 한편 오늘날의 바이내셔널리즘은 거칠게는 1국가 안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바이내셔널리즘의 어원적 의미나, 그 주장하는 바의 내용이 두 민족이 한 국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아 1국가 2민족안으로 칭한다.

15) 마그네스는 1923년부터 25년까지 지속되었던 ‘평화의 계약(Brit Shalom)’이라 이름한 지식인들과 대학교수들로 조직된 소집단을 이끌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벨푸어 선언에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시온주의의 배반자로 비난 받았다. 1942년 5월 시온주의 그룹이 영국의 연방안을 의식하여 빌트모어 계획을 공개하자, 이에 반발한 유대 지식인 몇명이 모여 마그네스를 주축으로 통합(unity)이라는 의미의 이후드(Ihud) 당을 설립했다.

아랍인의 존재를 무시하는, 빌트모어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수정주의자들의 견해와는 상충된다. 둘째, 과정 면에서 신탁통치를 지지한 것이다. 아렌트 역시 신탁통치는 평화 조약을 달성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현실적인 안이자, 차후 연방제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경로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마그네스의 신탁통치안에도 적극적 지지를 보내면서, 신탁통치안이 이루어진다면 유대-아랍 간 분쟁을 냉각시키고 팔레스타인의 분할을 연기하고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Arendt 1945b, 240; Arendt 1948b, 399-400). 그러나 신탁통치안은 유대인 기구(Jewish Agency)와 아랍 최고 동맹(Arab Higher League)에 의해 즉각적으로 거부되었다.

마그네스의 안과 아렌트 안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중요한 차이는 지역 단위 연방의 형태였다. 아렌트는 지중해 연방과 영연방에로의 포함을 주장했던 반면, 마그네스는 아랍연방안을 구상했다. 아렌트는 유대와 아랍이 어느 한편의 정체성에 국한되지 않고 범민족적인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마그네스가 구상한 아랍연방으로의 소속으로는 유대-아랍 간 소수다수의 위계질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었다. 시온주의자협회는 현재의 다수인 아랍에게 소수의 권리를 부여하려 하는 것이었다면, 이후드는 보다 더 큰 아랍연방에서 유대인을 소수자로 위치한다는 설명이다(Arendt 1943b, 336). 둘째, 연방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다. 아렌트는 일찍이 마그네스가 1민족 2국가를 “연방”이라 칭한 것을 두고, 연방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어를 사장시킨다고 보았다. 마그네스안은 여전히 민족국가의 틀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의 1민족 2국가는 복수성의 동등한 권리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Arendt 1943b, 336). 이에 따라 마그네스 안을 지지하고 있는 그의 글에서도, 아렌트는 마그네스 안을 “Confederation”, 즉 두 독립된 정치적 실체 간의 연합이라 하여 한 정치체 내 복수의 정부로 구성된 “Federation”과의 차이를 명시하고 있다. Confederation은 결국 Federation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라는 것이다(Arendt 1950, 446).

한편, 유엔 결의안 181호가 통과된 직후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은 계속되는 게릴라전과 테러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돌입했다. 유대인들은 원래의 국제연합의 결정을 고수했으며, 아랍인들은 국제연맹이 정했던 자결권을 굽히지 않았다. 이렇듯 첨예한 유대-아랍 간 대립 가운데서도 이들 간 전쟁을 막으려는 외부 당국자는 부재했다(번스타인 2018, 188). 당시의 상황을 조망하던 아렌트는 유대와 아랍 간 전면전을 우려하여, 결국 아랍과 유대의 협력에 집중하는 것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홀로 제3의 안을 주장하기보다 대세를 이루던 두 대안 중 하나를 택

하여 정치적 지지자를 모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Rubin 2015, 412). 실제로 아렌트는 이스라엘 국가건설 이후인 1948년 6월 마그네스와 그의 지지자들에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마그네스와는 4개월 간 20통이 넘는 서신을 교환하였고, 마그네스의 초안에 조언 및 수정을 가하기도 했다(영브 웰 2007, 386-395). 또한 아렌트는 이후드야말로 유대인 집단들 중에서도 아랍과 유대 간 협력이라는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집단이라고 칭송했다. 또한 아렌트와 마그네스는 UN으로부터 중재 역할을 맡게 된 베르나도테(Folke Bernadotte greve af Wisborg)의 평화의 안(UNSCR 1948)을 함께 지지했다. 해당 안은 트랜스요르단 전역에 아랍과 유대의 연합(union) 구성, 양자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의 구성을 담고 있었는데, 아렌트는 이것이 트랜스요르단 지역 내 아랍-유대의 연합을 일찍이 언급했던 마그네스의 안과 다르지 않다고 여겼다(Arendt 1948a, 408).

이처럼 아렌트가 자신의 연방구상에서 마그네스안 및 베르나도테안을 지지했던 이유는, 당시 대두되던 분할안을 저지하기 위한 현실적·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태도전환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아렌트가 평소 강조했던 바, 정치란 이상적·영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Arendt 1948b, 400), “현실에 주의 깊게 맞서는(아렌트 2006, 34)” 이해가 중요하다고 보았다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납득가능한 전환이다(빈스타인 2018, 188).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렌트안과 마그네스안은 유대-아랍 간 협력 구도를 지향한다는 면에서 유사할 뿐이며, 마그네스안으로는 소수 대 다수 정치의 구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아렌트가 마그네스안을 지지하는 한편, 결국 평의회가 연방구조의 핵심임을 재차 강조하였던 것을 보면 아렌트의 3층위 연방안 구상의 본질은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Arendt 1948b, 400).

V. 결 론

이상에서 본고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렌트의 연방구상을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오늘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는 복잡함을 넘어 해결이 난해한 인류사적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유대와 아랍은 강렬한 배타적 민족주의 정념에 기반하여 그동안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의 입장 차이는 이스라엘 국가가 설립된 이래 무려 70년 가까이 전쟁과 테러로 점철된 살육의 역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강대국의 개입 혹은 방기로도 쉽사리 풀기 힘든 난제가 되었다.

실제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이 요원해지는 동안 정착촌의 주민도, 난민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이스라엘 정착촌의 문제와 팔레스타인 난민 귀환 문제는 갈등의 핵심 쟁점이다.¹⁶⁾ 특히 정착촌은 이스라엘의 6일 전쟁 이후 극단주의자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대거 이주해온 지역으로, 2019년 4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총선 공약으로 “서안지구에 이스라엘 정착촌을 병합하겠다(Holmes 2019)”라고 선포했던 바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에게도 중대한 사안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Hamas)의 거점이 된 가자지역을 반면교사 삼아, 안보적 이유에서라도 서안지구에서의 정착촌 유지 및 건설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며, 2017년 추산 62만 명의 이스라엘인이 점령지 내 정착촌에 거주하고 있다 (<https://www.btselem.org/settlements>, 2020/01/15 검색). 또한 1948년 1차 중동 전쟁 이래 현재까지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서안 및 가자 지구 등지에 분포된 541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귀환하게 될 경우, 이스라엘의 현재 인구 비율인 677만 유대인 대 191만 아랍인, 즉 74%대 21%의 비율에서 677만 대 732만, 즉 46% 대 50%로 아랍인 비율이 유대인을 상회하게 된다.¹⁷⁾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난민도 귀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악화되는 문제의 교착 속에서 우리는 매우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이론적·현실적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과 유대·아랍 간에 영토와 민족이 지닌 실체, 즉 이 두 요소들 간의 비분리성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에게 둘은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근대 국가형성(state-making)이나 국민형성(nation-building)으로 이 지역을 분획하는 것은 둘 모두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다민족·다인종·다종교로 점철된 이 지역의 역사적 실체를 무시하여 오히려 충돌을 재생산할 뿐이다. 따라서 일 국가론과 양 국가론 등 국민국가에 기반한 해법으로는 이 지역의 갈등해결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 문제를 돌파할 제도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을 아렌트의 연방제 안에서 찾아보려하였다. 나아가 아렌트의 구상이 바람직한 동시에 현실적인 대

16) 정착촌 문제와 난민 귀환문제를 지적하여 분석한 글은 안승훈 2016; 인남식 2017 참고.
 17) 유대와 아랍을 제외한 인구는 약 44만명이다. 팔레스타인 난민 인구는 The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UNRWA), <https://www.unrwa.org/where-we-work/gaza-strip>, 2020/03/14 검색. 팔레스타인 및 이스라엘 인구 추산은 <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latest-population-statistics-for-israel>, 2020/01/15 검색.

안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아렌트는 유대인 문제와 팔레스타인 문제는 양자 사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유럽문제이며, 따라서 유럽적 차원에서만 풀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아렌트는 주권 개념과 국민국가 체제가 지닌 본질적 문제를 날카롭게 간파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스스로를 아르키메데스의 균형점에 위치시켜 유대국민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삼는 시온주의자들을 비판했으며, 동시에 아랍과 유대의 평화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균형적이면서도 적절한 방법으로서, 유대-아랍 공동체 평의회로부터 시작하여 지역연방(지중해연방/신(新) 영연방), 그리고 유럽연방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아랍-유대 공존안인 3층위 연방안을 제시했다.

그의 연방구상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다민족·다종교·다문화의 융합과 충돌로 혼합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역에 적합한 정치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민족·종교·문화의 구분에서 비롯되어 집단 정체성의 기반 위에서 배타적 독점적 주권이 지배하는 국민국가 체계는 발칸화와 독립 국가 간 전쟁의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다. 그러나 아렌트의 3층위 연방제는 개인의 복수성에 바탕해 정치행위를 수행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 위에서 구성된 정치체도로서, 자발적이며 자율적으로 의견을 형성하는 평의회, 그리고 평의회가 결성한 지역연방, 나아가 보편에 포함될 수 있는 유럽연방까지 확장되어 궁극적인 공화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한 최선의 정치체인 것이다. 아렌트의 연방구상은 아렌트 연구와 아렌트 사유의 새로운 영역이자 이팔문제의 현재에 유효한 대안이며, 나아가 보편적으로 다민족·다문화·다인종으로 구성된 지역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보편평화의 안이 될 수 있다.

1948년 이스라엘 국가 설립의 전과 후,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기회의 순간 아렌트가 절실히 요청했던 연방제안이 이루어졌더라면, 그리하여 아랍-유대 간 연방구축에 성공했더라면, 내부 갈등은 중화되고 강대국에의 의존도를 낮추어 평화로의 도약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현재의 이팔 갈등은 곧 아렌트의 연방안을 재탐구하기보다는 여전히 국민국가론의 틀 안에 머무르고 있다. 아렌트를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공동 평화를 지향하는 몇몇 학자와 실천가들로부터 이스라엘-팔레스타인-요르단 연방안(confederation)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점은, 아렌트 구상의 이론적 부활로 볼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¹⁸⁾ 아렌트의 구상에 바탕한 실질적 협력과 실천이 좀 더 진척되기를 소망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이론적 검증과 비교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18) 최근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연방안에 대해서는 Avesar 2007; Lakoff 2016 참고.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공병혜. 2017. “탄생철학과 아렌트의 시작의 의미.” 『철학탐구』 46, 95-127.
- 김민수. 2019. “한나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에 내재된 행위 개념의 의미와 논란.” 『민주주의와 인권』 19(2), 295-323.
- 김선욱. 2001. “한나 아렌트의 정치 개념: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관계를 중심으로.” 『철학』 67, 221-239.
- 김선욱. 2007. “근본악과 평범한 악 개념: 악 개념의 정치철학적 지평.” 『사회와 철학』 13, 31-50.
- 김선욱. 2015. 『아모르 문디에서 레스 푸블리카로: 한나 아렌트의 공화주의』. 서울: 아포리아.
- 김영일. 2001. “구스타프 란다우어의 연방주의.” 『한국정치학회보』 35(1), 43-63.
- 몬티피오리, 사이먼 시백. 유달승 옮김. 2012. 『예루살렘 전기』. 서울: 시공사.
- 박명림. 2015. “한나 아렌트와 정치철학 소묘-개인과 세계의 평화.” 『네이버 열린연단: 문화의 안과 밖, 철학/사상 8강』 2015년 5월 20일 발표논문.
- 박혁. 2009. “사멸성, 탄생성 그리고 정치: 한나 아렌트에게 있어서 사멸성과 탄생성의 인간조건이 갖는 정치적 함의.” 『민주주의와 인권』 9(2), 251-279.
- 박혁. 2014. “활동적 삶과 정치: 한나 아렌트에게서 다원성과 인간활동양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 『글로벌정치연구』 7(1), 5-43.
- 번스타인, 리처드 J. 김선욱 옮김. 2009. 『한나 아렌트와 유대인 문제』. 서울: 아모르문디.
- 번스타인, 리처드 J. 김선욱 옮김. 2018. 『우리는 왜 한나 아렌트를 읽는가』. 파주: 한길사.
- 서유경. 2014. “공연(公演)의 정치에서 심의(審議)의 정치로?: 한국 참여민주주의 진화과정에 대한 아렌트 정치행위론적 성찰.” 『대한정치학회보』 22(2), 19-45.
- 서유경. 2018. “한나 아렌트 정치사상과 오늘의 글로벌 폴리틱스 : 인권, 유목적 폴리스, 그리고 수행성의 정치.” 『한독사회과학논총』 28(2), 27-62.
- 아렌트, 한나. 윤철희 옮김. 2016. 『한나아렌트의 말-정치적인 것에 대한 마지막 인터뷰』. 서울: 마음산책.
- 아렌트, 한나. 이진우 옮김. 2017. 『인간의 조건』. 파주: 한길사.

- 아렌트, 한나. 이진우, 박미애 옮김. 2006. 『전체주의의 기원 1』. 파주: 한길사.
- 아렌트, 한나. 홍원표 옮김. 2004. 『혁명론』. 서울: 한길사.
- 안승훈. 2016.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두 국가 해결론(Two-State Solution)’에 대한 고찰.” 『한국과 국제정치』 32(1), 105-136.
- 야스퍼스, 카를. 이재승 옮김. 2014. 『죄의 문제: 시민의 정치적 책임』. 서울: 엘피.
- 영브뤼, 엘리자베스. 홍원표 옮김. 2007. 『한나 아렌트 전기: 세계 사랑을 위하여』. 고양: 인간사랑.
- 인남식. 2017.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의 현황과 전망: ‘양(兩)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의 한계와 대안 논의.”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3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임미원. 2019.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 개념의 기초적 고찰.” 『법철학연구』 22(1), 203-234.
- 장원석. 2014. “한나 아렌트의 정치이론과 근본악의 문제.” 『평화학연구』 15(5), 31-49.
- 파페, 일란. 유강은 옮김. 2017. 『팔레스타인 비극사』. 파주: 열린책들.
- 한양환. 2006. “불어권 서부 아프리카의 발간화-주변부화-세계화 과정 분석.”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3, 243-280.
- 해밀턴, 알렉산더,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 박찬표 옮김. 2019. 『페더럴리스트』. 서울: 후마니타스.
- 홉스, 토마스. 최공웅, 최진원 옮김. 2009. 『리바이어던』. 서울: 동서문화사.
- 홍미정. 2006.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KNSI 현안진단 25호.
- 홍원표. 2004. “언어행위와 공공영역: 대화, 논쟁, 이야기하기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2(1), 91-115.
- 홍원표. 2005. “한나 아렌트 정치철학에서 선악의 문제.” 『정치사상연구』 11(2), 179-201.
- 홍원표. 2007. “한나 아렌트의 ‘새로운 시작’ 개념과 그 변형.” 『정치사상연구』 13(1), 79-102.
- 홍태영. 2018. “타자의 윤리와 환대 그리고 권리의 정치.” 『국제지역연구』 27(1), 87-112.

영문 자료

- Arendt, Hannah. 1940. "The Minority Question." in *The Jewish Writings*(2007). edited by Jerome Kohn and Ron H. Feldman, 125-133. New York: Schocken.
- Arendt, Hannah. 1942. "Jewish Politics." in *The Jewish Writings*(2007). edited by Jerome Kohn and Ron H. Feldman, 241-243. New York: Schocken.
- Arendt, Hannah. 1943a. "Can the Jewish-Arab Question Be Solved?" in *The Jewish Writings*(2007). edited by Jerome Kohn and Ron H. Feldman, 193-198. New York: Schocken.
- Arendt, Hannah. 1943b. "The Crisis of Zionism." in *The Jewish Writings*(2007). edited by Jerome Kohn and Ron H. Feldman, 329-337. New York: Schocken.
- Arendt, Hannah. 1943c. "We Refugees." in *The Jewish Writings*(2007). edited by Jerome Kohn and Ron H. Feldman, 264-274. New York: Schocken.
- Arendt, Hannah. 1944a. "The End of a Rumor." in *The Jewish Writings*(2007). edited by Jerome Kohn and Ron H. Feldman, 206-208. New York: Schocken.
- Arendt, Hannah. 1944b. "The Jew as Pariah: A Hidden Tradition." in *The Jewish Writings*(2007). edited by Jerome Kohn and Ron H. Feldman, 275-297. New York: Schocken.
- Arendt, Hannah. 1944c. "Zionism Reconsidered." in *The Jewish Writings*(2007). edited by Jerome Kohn and Ron H. Feldman, 343-374. New York: Schocken.
- Arendt, Hannah. 1945a. "The Assets of Personality: A Review of Chaim Weizmann: Statesman, Scientist, Builder of the Jewish Commonwealth." in *The Jewish Writings*(2007). edited by Jerome Kohn and Ron H. Feldman, 402-404. New York: Schocken.
- Arendt, Hannah. 1945b. "Jewish Chances: Sparse Prospects, Divided Representation." in *The Jewish Writings*(2007). edited by Jerome Kohn and Ron H. Feldman, 238-240. New York: Schocken.
- Arendt, Hannah. 1946. "The Jewish State: Fifty Years After, Where Have Herzl's Politics Led?" in *The Jewish Writings*(2007). edited by Jerome Kohn and Ron H. Feldman, 375-387. New York: Schocken.

- Arendt, Hannah. 1948a. "The Failure of Reason: The Mission of Bernadott." in *The Jewish Writings*(2007). edited by Jerome Kohn and Ron H. Feldman, 408-413. New York: Schocken.
- Arendt, Hannah. 1948b. "To Save the Jewish Homeland." in *The Jewish Writings*(2007). edited by Jerome Kohn and Ron H. Feldman, 388-401. New York: Schocken.
- Arendt, Hannah. 1949. "Single Track to Zion: A Review of Trial and Error: The Autography of Chaim Weizmann." in *The Jewish Writings*(2007). edited by Jerome Kohn and Ron H. Feldman, 405-407. New York: Schocken.
- Arendt, Hannah. 1950. "Peace or Armistice in the Near East?" in *The Jewish Writings*(2007). edited by Jerome Kohn and Ron H. Feldman, 423-450. New York: Schocken.
- Arendt, Hannah, 1952. "Magnes, the Conscience of the Jewish People." in *The Jewish Writings*(2007). edited by Jerome Kohn and Ron H. Feldman, 451-452. New York: Schocken.
- Arendt, Hannah. 199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rendt, Hannah. 2005. *Essays in Understanding, 1930-1954: Formation, Exile, and Totalitarianism* New York: Schocken.
- As'ad, Ghanem and Dan A. Bavly. 2016. "Seeking an Egalitarian State in Palestine/Israel: The Recent Debate about Binationalism." *Constellations* 23(3), 329-339.
- Avesar, Josef. 2007. "The Israeli-Palestinian Confederation Proposal." *Palestine - Israel Journal of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14(2), 52-57.
- Barclay, James Turner. 1858. *The City of the Great King* London: Trubner & Co.
- Bates, Robert H., John H. Coatsworth, and Jeffrey G. Williamson. 2007. "Lost Decades: Postindependence Performance in Latin America and Africa."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67(4), 917-943.
- Collins, Michael. 2013. "Decolonisation and the "Federal Moment"". *Diplomacy & Statecraft* 24(1), 21-40.
- Hassassian, Manuel. 2019. "A Paradigm Shift from Two-State to One-State

- Solution." *Palestine - Israel Journal of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24(1/2), 120-128.
- Heuer, Wolfgang. 2019. "The Peacekeeping Role of the Federal Principle." Paper presented at the Special Lecture of the Center for Human Peace and Healing, Yonsei University, Seoul, February 27, 2019.
- Holland, Jocelyn and Edgar Landgraf. 2014. "The Archimedean Point: From Fixed Positions to the Limits of Theory." *SubStance* 43(3), 3-11.
- Hughes, Matthew. 2009. "The Banality of Brutality: British Armed Forces and the Repression of the Arab Revolt in Palestine, 1936-39." *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124(507), 313-354.
- Jacobson, Eric. 2013. "Why did Hannah Arendt Reject the Partition of Palestine?" *Journal for Cultural Research* 17(4), 358-381.
- Klusmeyer, Douglas. 2010. "Hannah Arendt's Case for Federalism." *Publius* 40(1), 31-58.
- Lakoff, Sanford. 2016. "One Way to Resolve the Israeli-Arab Conflict: a Three-State Confederation." *The Wilson Quarterly* Winter (1).
- Loughlin, John. 1993. "Federalism, Regionalism and European Union." *Politics* 13(1), 9-16.
- Magnes, Judah L. 1943. "Toward Peace in Palestine." *Foreign Affairs* 21(1), 239-249.
- Mestrovic, Stjepan G. 1994. *The Balkanization of The West: The Confluence of Postmodernism and Postcommunism*. London & New York: Routledge.
- Nimni, Ephraim. 1999. "Nationalist Multiculturalism in Late Imperial Austria as a Critique of Contemporary Liberalism: The Case of Bauer and Renner." *Journal of Political Ideologies* 4(3), 289-314.
- Nusseibeh, Sari & Anthony David. 2007. *Once upon a Country: A Palestinian Life*.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Raz-Krakotzkin, Amnon. 2011. "Exile and Binationalism-From Gershom Scholem and Hannah Arendt to Edward Said and Mahmoud Darwish." Paper Presented at the Carl Heinrich Becker Lecture der Fritz Thyssen Stiftung, Berlin, June 14.
- Rossiter, Clinton. 1956. *The First America Revolution*. Boston: Mariner Books.
- Roy, Sara. 2006. *Failing Peace Gaza and the Palestinian-Israeli Conflict*. London:

Pluto Press.

- Rubin, Gil. 2015. "From Federalism to Binationalism: Hannah Arendt's Shifting Zionism." *Contemporary European History* 24(3), 393-414.
- Schneer, Jonathan. 2010. *The Balfour Declaration: The Origins of the Arab-Israeli Conflict*. New York: Random House.
- Selinger, William. 2016. "The Politics of Arendtian Historiography: European Federation and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Modern Intellectual History* 13(2), 417-446.
- Sheehan, James J. 2006. "The Problem of Sovereignty in European History." *American Historical Review* 111(1), 1-15.
- Simic, Predrag. 2013. "Balkans and Balkanisation: Western Perceptions of the Balkans in the Carnegie Commission's Reports on the Balkan Wars from 1914 to 1996." *Perceptions* 18(2), 113-134.
- Smith, Charles D. 2017. *Palestine and the Arab-Israeli Conflict(9th Edition)*. MA: Bedford/St. Martin's.
- Todorova, Maria. 2009. *Imagining The Balka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eber, Max. 1958. *The Religion of India: The Sociology of Hinduism and Buddhism* transl. and ed. by Hans H. Gerth and Don Martindale. Illinois: The Free Press.
- Yaqoob, Waseem. 2014. "The Archimedean Point: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Thought of Hannah Arendt, 1951-1963." *Journal of European Studies* 44(3), 199-224.

인터넷 및 기타자료

- B'Tselem. 2017. "Settlements." <https://www.btselem.org/settlements> (2020/01/15 검색).
- Cashman, Greer F. 2019. "Hope Fading for the Two-State Solution, says Friedrich Ebert Foundation Director." *The Jerusalem Post*, <https://www.jpost.com/Arab-Israeli-Conflict/Hope-fading-for-two-state-solution-to-Israeli-Palestinian-conflict-592985> (2020/01/15 검색).
- Holmes, Oliver. 2019. "Netanyahu vows to annex Jewish settlements in occupied West Bank."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

- world/2019/apr/07/netanyahu-vows-to-annexe-jewish-settlements-in-occupied-west-bank (2020/01/15 검색).
- Jewish Virtual Library. <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latest-population-statistics-for-israel> (2020/01/15 검색).
- Jewish Virtual Library. <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total-casualties-arab-israeli-conflict> (2020/01/15 검색).
- Knesset. <https://main.knesset.gov.il/EN/activity/Pages/BasicLaws.aspx> (2020/01/15 검색).
- MacDonald, Malcom. 1939. "British White Paper of 1939." Yale University, http://avalon.law.yale.edu/20th_century/brwh1939.asp, retrieved 02/07/2014. abbr.: Yale University 1939(2020/01/15 검색).
- Peel, William Robert Wellesley et al. 1937. "Report of the Palestine Royal Commission" UNISPAL, <http://unispal.un.org/pdfs/Command5479.pdf> 7 (2020/01/15 검색).
- Rosner, Shmuel. 2019. "Israel's Election Shows How Dead the Two-State Solution Really Is."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19/02/27/opinion/israel-election-two-state-solution.html> (2020/01/15 검색).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947. "Resolution 181(II): Future Government of Palestine (1947) of 29 November 1947." A/RES/181(II). <https://unispal.un.org/DPA/DPR/unispal.nsf/c17b3a9d4bfb04c985257b28006e4ea6/7f0af2bd897689b785256c330061d253?OpenDocument> (2020/01/15 검색).
-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https://www.unrwa.org/where-we-work/gaza-strip> (2020/03/14 검색).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UNSCR). 1948. "Text of Suggestions Presented by the United Nations Mediator on Palestine to the Two Parties on 28 June 1948."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70499> (2020/01/15 검색).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UNSCR). 1980. "Resolution 478: Territories Occupied by Israel (1980) of 20 August 1980." <http://unscr.com/en/resolutions/478> (2020/01/15 검색).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UNSCR). 1981. "Resolution 497: Israel-Syrian

Arab Republic (1981) of 17 December 1981.” <http://unscr.com/en/resolutions/497> (2020/01/15 검색).

Abstract

**A Research on the Three-layered Federation of
Hannah Arendt : A Peace Initiative for the Resolution
of the Conflict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Park, Myung-lim ■ Yonsei University

Kang, Hyoin ■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is on the unique three-layered federal peace initiative of Hannah Arendt, the 20th-century political thinker. Arendt had foreseen the upcoming conflict in the urgent situation before and after the foundation of the State of Israel and introduced a federation of Israel-Palestine as an institutional alternative since Palestine has been a region of multiple nations and ethnicities, and of frequent tensions and conflicts among civilizations. Based on her writings, this paper analyzes Arendt's peace initiative for Israel and Palestine, especially the idea of federation, which has never come to the fore by Arendtian academy. Even though she was a Jew, Arendt criticized the construction of the Jewish Commonwealth and Israel with a keen criticism of the nation-state system and the concept of sovereignty through Archimedean ideological transformation—the viewpoint from inside and out. At the same time, Arendt proposes the three-layered Arab-Jewish federation, as a desirable and realistic way to establish peace regimes between Arab and Jewish, including Arab-Jewish community councils, regional federations(Mediterranean Federation/New British Commonwealth), and a federation of European countries. In her view, this three-layered federation is the most suitable political body to create peace in the Israeli-Palestinian region, which has been an amalgam of multiethnic, multi-religious, and multiculturalism in its long history.

Key Words: Hannah Arendt, Federation, Federalism, Peace Initiative, Israel-Palestine Conflict

□ 논문접수일: 2020년 1월 20일, 심사완료일: 2020년 2월 12일, 게재확정일: 2020년 2월 14일

CSV 활성화를 위한 ICT 플랫폼 프레임워크 제안 연구

장윤희 ■ 단국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는 CSV 활동영역을 외부로 확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공개와 참여, 공유, 협력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CSV 실행의 범위와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최신 디지털기술 기반의 CSV 플랫폼 구현을 제안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생산과 소비, 소통 활동은 ICT 오픈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ICT 플랫폼은 그 전략적 의미와 가치에 비해 확산이 쉽지 않은 CSV 활동성과의 시너지를 내는 효과적인 도구와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에 국내·외 유사활동 플랫폼 사례들을 찾고 분석하여 CSV 플랫폼에 필요한 기능들을 활동 프로세스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현재 국내·외 플랫폼들은 다양한 지원메뉴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프로세스 관점에서 실제 CSV 활동을 디지털 공간에서 끊임없이 진행하도록 구현하지는 못해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ICT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 민간 및 공공조직은 CSV 비전과 전략, 실행로드맵, 성과지표 등을 수립하여 이를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공간에서 최신의 스마트 기능들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으로 중단하는 일이 없이 지속적인 CSV 활동을 수행하고, 성과를 높여나갈 수 있다. 집단지성 기반의 아이디어 및 지식창출, 저장, 게시 기능, 다양한 소통활동 및 투표기능, 빅데이터 분석으로 이슈도출 및 토론 기능, 평가기능, 보고서 및 각종 템플릿 제공 기능, 그리고 학습콘텐츠 도출 및 게시, 운영기능 등을 통해 CSV 활동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플랫폼은 운영을 통해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향후 실무적 관점에서 CSV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해나가며,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활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되기 기대한다.

*주제어: CSV, ICT 플랫폼,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지속가능경영, CSV 플랫폼

I.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 둔화와 실업률 증가, 경제격차의 심화, 자국 보호주의와 배타적 무역분쟁, 악화되는 자연환경 등, 자본주의 경제로부터 파생된 제 문제들이 정치, 경제, 사회 전 영역에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미래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가능하게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영방식,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기업의 성장은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근간으로, 진실되고 정당한 기업활동 수행 요구에 부응하여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수년전부터 기업의 관행적인 사회적책임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서 나아가 공유가치창출활동(Creating Shared Value: CSV)에 관심을 가지고 도입하려는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크게 활성화되며 기업전략 활동으로 자리매김 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 물질 및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가능한 CSR은 단기간에, 단편적으로 수행하여 조직을 홍보하고 사회적 의무감을 다했다는 면책의식을 가질 수 있었으나 사회의 필요와 문제에 도움과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기업의 경제적 가치 또한 산출할 수 있다는 개념의 CSV(Porter and Kramer 2011)는 매력적인 개념이지만 그 실천방법을 찾고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 부서의 관행적인 일회성 활동이 아닌, 전사적 관점으로 CSV 비전을 이해하고 제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반에서 조직의 핵심역량을 투입하고 사회의 협력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경제적 기회를 발굴한다는 생소하고 혁신적인 관점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CSV를 시도하고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일이 용이하지 않아 다수의 기업들이 개념적 수준에서 계속 논의만 하거나 CSR 단계에 담보될 수 있음이 우려된다. 그러나 CSR 활동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미래지향적인 발전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CSV의 효과적인 실행방안에 대하여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윤각 외(2014)는 CSR 활동과 CSV 활동의 효과를 비교한 실증연구를 통해 사회적책임성 인식, 브랜드 태도, 기업-소비자 동일시, 진정성 등의 항목에서 CSV 활동의 효과를 더욱 높게 평가하고, 향후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CSV 활동 위주로 발전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CSV 활동과 관련한 국내 추이를 보면 산업정책연구원이 2014년부터 Porter 교수와 공동으로 'Porter Prize for Excellence in CSV'를 제정하여 국내기업의

CSV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www.csvplatform.net. 2019/09/10 검색). 한국 경영학회에서도 2013년, 공유가치창출 소사이터티를 제안하며 기업, 정부, 학계, 언론 등이 협력하여 대한민국 사회의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을 호소하였고 매해 CSV 기업 대상을 시상하고 있다(https://kasba.or.kr/48. 2019/09/10 검색). SK 그룹은 '사회적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는 문구를 정관에 새로 넣고 2019년부터 핵심성과지표에 사회적 가치창출 비중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16개 계열사마다 사회적가치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만들었다(김우용 2019). 그 외, CSV에 일찍 관심을 둔 포스코는 SK와 사회적가치 측정기준을 공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CJ, 삼성전자, 유한킴벌리 등 여러 민간 및 공공기관들도 CSV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CSV 활동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찾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수행방식으로서의 진화가 요구되므로, 주체 대상 뿐 아니라 경영환경 생태계 내의 많은 이해관계자들 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기민한 협력활동, 프로젝트 수행방식으로서의 전환,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SV 활동의 영역을 한 조직 안에서 조직 밖으로 확대하여 공개와 참여, 공유, 협력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실행 가능성과 확산의 범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ICT 기반의 CSV 오픈플랫폼 구현을 제안한다.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생산과 소비, 소통 활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양상이다. ICT 플랫폼은 주도자와 참여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할수록 그 기능과 역할의 범위, 활동내용들이 풍부해지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성과의 시너지를 내는 도구와 수단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CSV 활동의 활성화와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방법과 도구로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생태계 내의 이해관계자들이 CSV 활동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ICT 플랫폼 프레임워크와 핵심기능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사례분석을 통해 수행되었다. 사례분석은 국내·외 CSV 및 유사활동 플랫폼들을 찾아 현황을 파악하고, 그 장점과 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서론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하고 2장에서 본 연구의 근거가 될 선행연구를 파악한다. 선행연구는 CSV의 일반적인 개념과 내용을 두루 살펴보기 보다는, CSV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의 요구조건과 이해관계자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ICT 플랫폼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는 플랫폼의 유용성 측면에 한정한다. 3장에서는 연구의 목적인 CSV 플랫폼 프레임과 기능들을 제안

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 사례들을 찾아 사이트 페이지마다의 구성과 메뉴기능들을 분석하고 비교한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제안내용으로서, 디지털 기반 플랫폼의 주요 기능들을 제시한다. 플랫폼은 CSV 활동의 본질적 특성에 근거하여 가치를 공유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니즈의 필요성과 경제적 가치의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각기 역량을 제공하고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논의 및 학습하고, 도출된 성과를 평가하고 다시 피드백을 통해 성장, 발전시키도록 기능하는 메뉴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한계점을 기술한다. 본 연구는 탐색적 성격의 연구로서, 이는 CSV 기업사례나 성공요인, 성과에 관한 연구들은 수행되고 있지만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CSV 실천방안에 관한 유사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민간, 공공조직들이 CSV 활동은 조직의 한 부문에서 단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님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기존과 다른 혁신적인 접근방안들을 마련하여 사회적 니즈와 경제적 수익을 발굴하는 기회들을 갖기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CSV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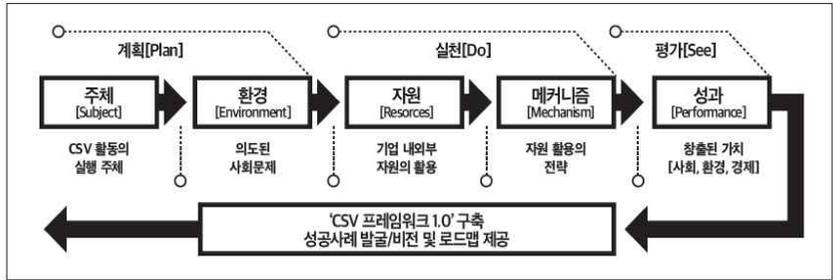
CSR 개념은 '기업이 직면하는 직접적 이해관계와 법이 정한 규제요건의 충족을 넘어,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업의 바람직한 행동'으로 확대 정의되었다(McWilliams & Siegel 2011). 그러나 CSR은 여전히 기업의 잉여자원 일부를 기부하거나 환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 사회적, 경제적 혁신과는 차이를 가진다(Carroll 2008). 이에 포터와 크레이머(Porter & Kramer 2006)는 사회, 경제적 목표달성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전략적 사회공헌, 기회, 혁신, 경쟁우위 원천으로서의 CSV를 바라보도록 제안하였다. 이후 포터와 크레이머는(Porter & Kramer 2011)는 CSV 개념을 제시하며 기업이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를 사회적 문제와 필요성, 가치와 합치시켜 새로이 극대화된 시너지 성과를 도출하도록 독려했다. 그들이 제시하는 CSV 활동이란 전사적, 전략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실행하라는 것으로, FSG(Foundation Strategy Group) 설립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2. CSV 실행방안

포터와 크레이머(2006)는 CSV 실행방식을 '상품과 시장에 대한 재인식', '가치 사슬 혁신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그리고 '지역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3가지로 제시하였다. 문휘창(2011)은 그 실천방안을 더욱 확장하여 '핵심역량의 명확한 정의', '가치사슬의 생산성 제고', '상품과 시장의 재정의', '지역 또는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 등 4단계로 제시하였고, 배병한 외(2012)는 기업의 변화된 환경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핵심 성과지표로서 CSV를 제시하여 실행하도록 제안하였다. 따라서 작금의 기업들은 향후 지속가능 경영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방식과 유형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수행할 것인지, 보다 실효성 있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기업의 선택은 무엇인지, 효과적인 실천방법은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하여 새로운 안목으로 숙고할 시점이다. 포터 등(Porter etc. 2013)은 민간과 공공조직들이 CSV 실천방법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이 필요한 부분을 찾으려할 때 일반기업과 비영리기업, 기술기반 기업과 농부조합 등의 긴밀한 관계가 가능해진다고 하였다. 더불어 기업들이 자신의 목표를 이윤에서 목적으로 설정하는 순간 파트너십과 시장저변은 과거와 달라질 수 있으며, 단지 매출만을 생각할 때보다 사회적 문제를 같이 고려할 때 파트너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필수적으로 보았다. 이는 오늘날 고객중심, 조직 생태계 중심, 친환경 중심으로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을 볼 때 쉽게 이해하고 수용할 부분이다.

박광오(2019)는 공급사슬 내 파트너기업과의 장기적 동반성장을 위해 힘의 불균형에 따르는 장애요소들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며, CSV 활동과 비구속적 파워 모두 정보공유와 파트너십 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SCM 참여기업 상생을 위한 변인으로 CSV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산업정책연구원(2014)은 『공유가치창출포럼 사례집』에서 CSV 공유가치창출의 기준요건을 크게 계획, 실행, 평가의 3단계로 구분하였고, 구체적인 실행방식으로는 ①법적 기준을 초월하여 가치를 만들어내는 주체에 의해, ②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③기업의 핵심역량 및 전문성, 인재, 자금 등을 활용하여, ④혁신적인 시장기반의 해결책으로, ⑤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CSV 프레임워크 1.0 프로세스로 제안하였는데, 그 과정과 실행방안을 <그림 1> 과 같이 보이고 있다.

〈그림 1〉 CSV 프레임워크 1.0 프로세스



출처: 산업정책연구원, CSV 플랫폼, http://www.csvplatform.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12 (2019년 10월 2일 검색)

3. CSV 성과관리

CSV 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성과를 도출하고 공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Porter 등(2011)은 인도지역 고용창출로 매출증대 또한 이룬 (주)유니레버의 조이타(Joyeeta) 프로젝트, P&G의 친환경 에너지를 지향하는 가치 사슬 프로세스 개선과 혁신제품 개발에 따른 기업 이미지 제고, 네슬레의 국가별 보건/교육 당국 및 소아영양 전문가 등과 협력한 전 세계 어린이건강프로그램의 구동 성과, 환경보호를 위한 포장재 감축정책으로 공급업체 원가절감, 매장 효율성 증가, 물류비용 감소, 긍정적 소비자 인식 등, 월마트의 유의미한 경영성과 등, 다양한 사례의 성과를 소개하며 CSV의 지속가능경영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과관리 활동이란 성과목표치를 설정하고 사업을 시행한 후 산출된 결과들이 목표수준에 달성되었는지 점검하고, 이를 미래 의사결정에 환류시키는 것이다. CSV 성과 또한 조직의 CSV 전략목표를 명확히 하고 CSV 성과목표와 지표를 구조화해야 하는데, CSV 활동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동력으로서 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달성된 결과치를 측정하고 이를 공유 및 공개하여 확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포터 등(2011)이 제안한 CSV 측정방법과 과정을 보면 CSV 측정은 비즈니스 전략과 통합되어 수행되는 반복적인 과정을 요구하는데, 전략 활동 단계에서 목표 대상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파악하여 비즈니스 사례를 발굴하고, 측정활동 단계에서는 사례결과들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새로운 가치를 계속 창출해나갈 수 있는 통찰력을 학습하고 나누도록 한다.

최다운 외(2015)의 연구에서는 CSV 동기와 CSV 성과평가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CSV 동기와 CSV 성과에 대한 지각이 일치할 경우 CSV 성과에 대한 평가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즉, 기업의 CSV 동기와 CSV 성과가 경제적 차원이든 비경제적 차원이든,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CSV 성과에 대한 결과가 높게 평가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해자들을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CSV 동기가 수익적 동기로 인식되어 동기와 성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게 되어 역효과가 발생하고 부정적 평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현재 기업들이 CSV 활동을 통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보면 왜, 어떻게 CSV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보다는 투자한 금액이나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리는데 급급해 CSV 활동 또한 CSR 과 구분없이 사회공헌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포함하는 CSV 활동성과는 관련된 정보를 통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형성 및 소통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업이 CSV 활동 초기부터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이행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조직 외부에 오픈하며 협력하는 것은 사회, 고객, 다양한 집단들과의 관계에서 호의적인 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4. Co-Creation 기반의 CSV

체스브로(Chesbrough 2011)는 소비자들 스스로 필요로 하는 해결책을 찾는 '플랫폼 기반의 사업모델', 모든 가치사슬 단계에서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Co-Creation', 고객, 외부 전문가, 지역사회 등의 아이디어, 기술,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익모델, 창의적인 기술을 창출하는 접근방식으로서의 '오픈 이노베이션' 등, 세 가지 관점에서 개방과 소통의 새로운 역할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홍순구 외(2015)는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과 발전을 위한 정책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되는데 이들의 요구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실행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Co-creation 모델을 통해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정책을 펼치기에 시간적, 비용적인 제약이 있고,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Co-creation 기반 지역혁신 모델을 적용하기에 현실적으로 생소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역혁신 모델 이용을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IT 기술을 활용한 정보시스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현중 외, 2017). 이에 홍순구 외(2016)는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체계적인 관리와 활동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이 플랫폼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온라인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정책개발 및 실행의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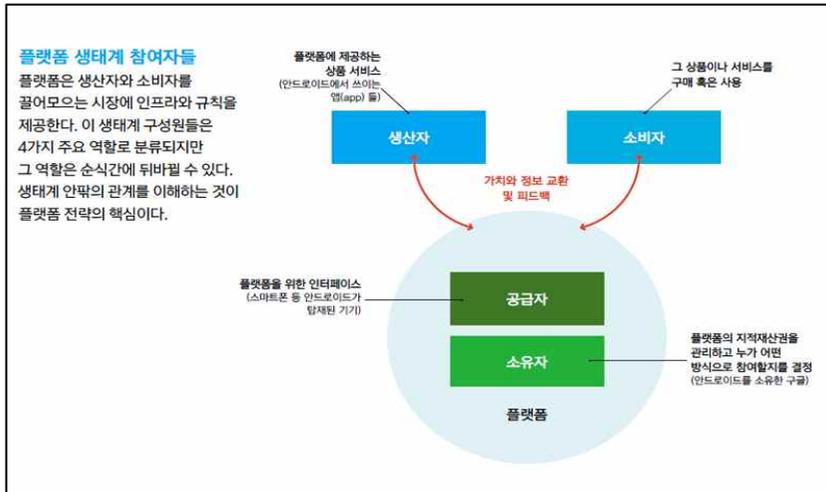
또한 코트라(KOTRA 2017)의 'CSV와 비즈니스 기회'보고서에 따르면 CSV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강화 및 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하였다. 이는 기관, 소비자, 직원, 투자자,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간 신뢰형성이 중요하고 함께 만들어간다는 관점에서 Co-creation 개념과 동일하며, CSV 프로세스에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윈-윈 하는 결과는 CSV의 핵심이라 하였다. 조영연 등(2019)은 CSV 사례분석을 수행하며 CSV 활동과정에 수혜자인 소비자의 유기적인 참여가 발생하지 못하는 점, CSV가 단기에 치우쳐서 장기적인 정책화가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CSV의 올바른 실천을 위해 조직내부 간 및 소비자와의 Co-Creation을 바탕으로 한 CSV 조직가치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정기 등(2016)은 활동방향 측면에서 기업과 사회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쌍방향적 활동인 CSV는 기업의 일방적 사회활동으로의 CSR과 차이가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최근 CSV 개념을 포괄하는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 2016)는 저소득층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에 투자함으로써 공급자 혹은 생산자로서의 저소득층 자질과 기술부족을 극복하게 하고, 수혜자들이 상품과 서비스가 어떻게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인식하게 하여, 불신하지 않고 윈-윈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상호이익을 창출함으로써 BOP(Bottom of Pyramid) 잠재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하였다.

5. CSV 활동 도구로서의 ICT 플랫폼

플랫폼은 활성화될수록 자연스럽게 시스템, 즉 '목적달성을 위하여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상호연관된 부분들의 집합'으로 구조화되며 생태계를 갖추게 된다. 이상규(2010)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플랫폼을 '서로 다른 사용자 그룹이 거대한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된 물리적, 가상적, 또는 제도적 환경'이라고 정의했다. ICT 플랫폼 생태계는 조직

내·외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발전하는데(조신, 2013),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류활동의 대부분은 디지털기반 오픈 플랫폼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되며 기대성과의 시너지를 증폭시키고 있다. <그림 2>는 플랫폼 생태계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 플랫폼 생태계 구성요소들



출처: 황혜정. 2018. 『탈규모시대의 제조업, 플랫폼 비즈니스로 도약한다』. LG경제연구원 보고서; 마셜 W. 반 엘스타인, 제프리 G. 파커, 상지트 폴 초더리. 2016. '플랫폼 생태계 부상'에 따른 새로운 전략' HBR Korea에서 재인용

현재 ICT 기반 플랫폼은 기존의 오프라인 플랫폼에서 온라인과 모바일로,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기반의 플랫폼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서비스 플랫폼, 커뮤니티 플랫폼, 공동 기술개발 플랫폼, 사회망 플랫폼, 콘텐츠 기반 플랫폼 등, 다변화하면서 비즈니스 활동의 주요 사업지배 작동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 ICT 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활동은 이제 의료, 교육, 금융, 에너지 등, 타 산업으로 확산되어 산업의 수행방식,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협력과 소통채널의 관점에서 파괴적 혁신을 진행시키고 있다. 마셜 등(Marshall etc. 2016)은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는 다양한 이종의 이해관계자 및 플랫폼 간의 복잡한 관계를 통해 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서 파괴적 혁신을 가능하게 하며 비즈니스 활동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을 플랫폼

으로 유입시키고, 유입된 이해관계자들의 욕구와 필요를 살피고, 그들이 함께 능동적으로 활동하도록 유인해야 한다. 오늘날 플랫폼 가치사슬은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인 사용자의 주도적인 활동과,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공생을 통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사용자와 공급자가 증가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 이는 개방형 생태계로서 자율적 참여와 공정한 경쟁환경에 기초한 공생, 동반성장을 가능하게 하는데, CSV가 지향하는 가치관과 맥락을 같이 하므로 효과적인 가치창출 도구로서의 개방형 ICT 플랫폼을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CSV 활동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Co-Creation’은 기업과 고객이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한다는 개념이다 (Prahalad, Ramaswamy 2004a, 2004b). 김현중 외(2017) 연구에서는 ‘Co-Creation’ 기반의 지역혁신 활동을 위해 ICT 플랫폼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플랫폼의 기능은 단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1단계는 과제 발굴 단계로서 이슈 제기,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시각화된 이슈의 공유 및 전파, 의제 및 과제설정 기능이다. 2단계는 공감 및 문제이해 단계이다. 이해관계자의 설정, 관찰 및 문제공감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지도, 교육 및 정해진 기준에 따른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 요구된다. 3단계는 문제정의 단계이다. 자료탐색, 문제정의, 목표설정 활동이 수행되는데, 문헌 및 웹 자료 탐색, 전문가 인터뷰, 도표 및 설문조사 등과 화상회의 기능, 공지 기능 등이 유용하다. 4단계는 아이디어 도출 단계이다. 구체적인 아이디어 발의, 아이디어 수렴 활동이 이루어지며, 전자 브레인스토밍 기능, 게시판 기능, 그리고 아이디어 평가 기능, 전문가 평가 및 회의 기능 등이 필요하다. 5단계 아이디어 구체화 단계에서는 실행계획 초안, 실행안 개선, 정책 범제화 및 예산 결정 등의 활동이 수행된다. 각종 포맷 제공, 회의 기능, 투표 기능, 산출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수정 기능을 제공한다. 6단계 실행에서는 과제실행, 실행과정 모니터링 및 피드백 활동 단계로서 모니터링과 현장에서의 업로드 기능, 오피니언 마이닝 기능 등이 유효하다. 7단계 평가 및 피드백 활동에서는 목표달성 평가, 만족도 평가, 개선의견 수렴, 피드백 및 지식 저장소 저장을 위해 계량목표 평가 및 분석기능, 설문조사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기능, 지식관리 기능 등이 요구된다. 그 밖에 프로젝트를 위한 SNS 및 메일링 기능, 각종 템플릿이 쉽고 빠르게 제공되어야 하며, 모듈 관점에서는 관리모듈, 서비스모듈, 지식저장소 모듈, 외부연동 모듈 및 플랫폼 DB 등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III. 국내·외 CSV 및 유사활동 플랫폼 사례분석

3장에서는 CSV 및 유사활동을 위해 운영되는 8개의 다양한 국내·외 플랫폼 사이트들을 꼼꼼하게 찾아 2차 자료를 통한 사례분석을 하였다. 운영주체, 참여자,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자원 및 메뉴기능, 주요 운영활동 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4장에서 제안하는 CSV 플랫폼 프레임워크의 도출 기반으로 삼는다. CSV 플랫폼의 이상적인 모습은 CSV 활동을 주관하는 민간 혹은 공공기관과 경제적 및 사회적가치의 수혜대상, 협력과 지원역할이 가능한 민·관·학 영역의 전문가 그룹, 그 밖의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등, 사회적 가치창출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디어와 경험, 자원을 나누고 동참하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CSV의 참여와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유용한 지원도구로 기능화하며 발전해나가는 것이다.

1. FSG 컨설팅 플랫폼

FSG 컨설팅(www.fsg.org)은 비영리 CSV 컨설팅 조직을 표방하고 있다. FSG는 오랜기간 사회에 축적되어 온, 풀기 어려운 문제에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여 성과를 모색하고자 한다.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전통적 사고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리더들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아이디어 제안도구, 네트워크를 위한 포럼 및 학습 커뮤니티를 결합하여 전 세계 재단, 기업, 비영리단체 및 정부가 사회변화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한다. 설립자들은 CSV를 하나의 경영전략으로 강조하는데, CSV 활동의 가장 큰 동기는 성장, 경쟁 우위, 이윤발생 가능성으로서 소외되었던 BOP (Bottom of Pyramid) 90% 시장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성장동력 가능성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영리와 비영리기업, 정부와 기업, 타 업종 기업들과 협력하고 관계를 맺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창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FSG가 운영하는 플랫폼(www.fsg.org)의 모습을 소개하면, FSG 플랫폼의 상위 메뉴는 첫째, FSG 조직소개이다. CSV 활동을 이해시키고 해당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자료들을 제시하며 FSG 활동의 투자자들과 파트너들을 소개한다. 둘째, 컨설팅 메뉴에서는 기업전략으로서 CSV 활동에 어떻게 접근하나갈 수 있는지 제시하는 방법론적 도구와 자료들을 제공한다. 셋째, 블로그 메뉴에서는 사

회적 변화와 영향력에 대하여 발표된 FSG 및 외부 연구자들의 다양한 논문과 사례자료들을 제공한다. 넷째, 아이디어와 실습 메뉴에서는 학습공동체에 참여하도록 정보들을 제공하며, 전 세계 컨설턴트 및 기업 관계자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학습 프로그램을 심화해나가도록 한다.

컨설팅 메뉴를 구체화하면, CSR 및 CSV 관련하여 진행된 교육, 청소년 지원, 국제보건, 박애, 경제개발, 시스템적 사고 등 다양한 영역의 기업 사례들과 관련 정보들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학습할 수 있다. 아이디어와 실천영역에서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도구들은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로 유용하며, FSG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도구들을 자기 조직에 맞게 개선하고 로드맵에 맞추어 사용함으로써 실행을 용이하게 지원한다. 플랫폼의 다양한 내용들을 리뷰한 후 회원으로 가입하여 세부 영역에서 FSG 컨설턴트들의 오프라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다. FSG의 커뮤니티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FSG와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교육 및 정책 연구기관 AI(Aspen Institute), SVI(Shared Value Initiative)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다양한 자료와 도구들을 사용해볼 수 있고 담당자와 연결할 수 있다. 현재 FSG 플랫폼의 주요 참여자들은 CSV 활동에 관심을 가진 기업 및 공공기관, 연구자들, 그리고 전문 컨설턴트 등, 다수이다.

2. Kopernik 플랫폼

Kopernik(<https://kopernik.info>)는 NPO(Non Profit Organization)로서 2010년, 국제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한다는 비전으로 설립되어 인도네시아에 본사를 두고 있다. 조직은 4개의 법인으로 구성되어 전략수립과 컨설팅 및 자문 서비스, 자금모금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지구변방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직면한 영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아이디어와 잠재적 솔루션을 테스트하고, 그 성과를 입증하는 노력들을 확산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핵심활동은 영향력 있는, 더 나은 프로그램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실험과 적용이며, 더 많은 참여자들이 동참하도록 호소한다. Kopernik의 사회적 기부활동 방식은 등록된 NGO 조직들이 기부목표와 분배방법을 설명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Kopernik 승인 후 제안서가 웹 사이트에 게시되면 기부자들이 리뷰 후, 선택하여 돕는다. 가난한 지역공동체에 제공되

는 기부제품은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적용한 것들이 다수이며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가능하게 지원한다.

최근 사회 양극화 현상의 심화 및 ICT 기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에 의해 적정 기술은 계속 조명받고 있는데, 옥수수심으로 만든 무연 바이오매스 난로, 태양전지를 이용한 제등 제품, 검안사 도움 없이 시력교정이 가능한 안경, Q 드럼과 물방울 관개 시스템 등의 제품들이 개발되고 생산되어 해당지역 NGO와 여성들에 의해 배포되고 있다. 'Tech Kiosks'는 다양한 일상용품과 함께 간단한 적정기술 제품을 판매하는 가족운영 소형상점으로, 키오스크 소유자는 위탁으로 적정기술 제품을 받아 판매하여 커미션을 받고, 재고는 Kopernik에 반환하며 수요가 가장 많은 기술에 관한 정보들을 피드백 해주는 역할을 잘 수행한다.

Kopernik의 프로젝트 프로세스는 플랫폼에서 파악할 수 있다. Kopernik는 웹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여 연구자들과 기업들이 정보를 교환하며 적정기술을 개발하도록 독려하고, 개발된 적정기술 제품과 수요자들을 연결해주는 거래소로서 서비스도 제공한다. Kopernik 플랫폼의 기본메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소개이다. 조직의 활동과 연혁, 구성원, 재무상태, 조직문화 및 연차보고서와 프로젝트들의 의미와 성과들을 제시하여 관련 활동들이 소외지역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둘째, 프로젝트 메뉴에서는 Kopernik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시하고, 개인과 기업의 가치관에 적합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셋째, 참여메뉴에서는 Kopernik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 정보들을 제공한다. 펀딩, 봉사지원, 펠로우로 지원, Kopernik 구성원으로 참여, 혹은 Kopernik 구성원을 초대하여 강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참여로 활동을 확산시킨다. 넷째, Kopernik에 참여하며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 기업들을 알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유도한다. 파트너들은 적정기술을 개발, 배포, 자금지원, 네트워킹과 컨설팅 등을 하는 조직 등 다양하며, 서로 자료들을 리뷰하고 소통 및 협력할 수 있다.

다섯째, Kopernik의 활동 내역들을 볼 수 있는 아카이브이다. 여섯째, 기부메뉴에서는 적극적으로 기부활동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프로세스를 제시하는데 프로젝트 진행상황들을 시각적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고, 다양한 동참방식들을 쉽게 인지도시켜 독려한다. 특별히 Kopernik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서 요구되는 혁신적인 적정기술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독창적인 컨설팅 활동을 통해 기업 및 정부기관에 전문적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공동체에서 활동하는 NGO 등, 이해관계자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돕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도구들을 플랫폼에서 제공한다.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 현지에서의 제품평가

와 반응, 문제점들에 대하여 소통하고 영향력을 측정하여 활동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적절한 제품개발과 배포, 피드백에서 성과를 도출하도록 한다. 따라서 Kopernik 웹 플랫폼은 세계의 흩어진 지역에서 적정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관계자들이 적정기술을 보완, 발전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공간, 수단의 역할을 한다.

3. Yunus sb 플랫폼

20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누스(Muhammad Yunus)는 빈민들에게 무담보 소액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그라민(Grameen) 은행을 설립하였고, 사키아(Saskia Bruysten)와 소피(Sophie Eisenmann)는 2011년, Yunus sb 소셜비즈니스 벤처펀드(www.yunus sb.com)를 창안하여 전 세계 소셜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자금을 조달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창업가들의 가치관은 ‘비즈니스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들의 사명은 소셜비즈니스를 비즈니스와 단순자선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Yunus sb 펀드는 전 세계적으로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고용, 교육, 건강 관리, 깨끗한 물과 청정에너지를 제공하는 소셜비즈니스 투자로 사용한다. 펀드는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지 팀들은 현지 기업가를 위한 정기적인 워크숍 및 소셜비즈니스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Yunus sb 플랫폼에서는 소셜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돕는 다양한 자료들과 유누스 사업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리뷰할 수 있다. 플랫폼에서는 돕는 자들과 도움을 받는 자들을 위한 메뉴들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점이 긍정적이다. Yunus sb는 자선 사업가들에게 파트너로 재무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본 활용방법과 소셜비즈니스를 지원하도록 독려하는 메뉴들을 제공하고 컨설팅한다. 또한 벤처캐피털 투자의 규정과 절차를 소셜비즈니스의 소싱, 엄격한 재무관리, 기술실사를 통한 선정, 자금조달 프로세스 등에 적용함으로써 기부금이 소셜비즈니스에 장기 투자되어 소셜 기업가가 성장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확산되도록 활동을 가이드 하는 메뉴들을 제공한다. Yunus sb 플랫폼에서는 취약한 여성에게 직업과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한 제품과 서비스에 가난한 회원들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하여 건강과 복지, 삶을 개선할 새로운 기회를 갖도록 해준다. 플랫폼을 통해 담당자들과 오프라인으로도 연락하여 지원받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활동에 대한 명확한 상황자료들은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4. CSV 플랫폼

CSV Platform(www.csvplatform.net)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운영하는 국내 CSR·CSV 전문 포털로서, CSV 오프라인 포럼 활동을 통해 산출되는 양질의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여 CSV 인식 확산 및 참여의 장으로 운영한다. 2014년 처음 실시된 CSV 기업현황 조사는 국내 기업의 CSV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기업의 니즈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는 한편,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을 통해 CSR 기업문화를 전파한다. CSV 플랫폼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CSV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IPS CSV 자가진단 도구를 제공하는데, 기업의 일반현황, CSV 사업모델, CSV 사업 혁신성, 사업의 경제·사회적 영향력, 성장 잠재력 등, 5개 섹션과 정책반영을 위한 5개 질문을 포함한 28개 질문들로 현재 사업의 진행단계와 보강이 필요한 항목을 확인해볼 수 있다.

그 밖의 CSV 플랫폼에서의 기능들은 대부분 정보를 제공하고 오프라인 담당자와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CSR, CSV 전문가과정 교육은 교육대행을 수행하는 임팩트스퀘어(www.impactsquare.com) 담당자에게 오프라인으로 문의하도록 되어있다. CSV 플랫폼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플랫폼 내에서 실제 활동하도록 다양한 메뉴로 기능하기 보다는 CSV 포럼 활동을 소개하고 오프라인 접촉을 유도하는 매체로서의 성격이다.

5. 임팩트스퀘어 플랫폼

임팩트스퀘어(www.impactsquare.com)는 '임팩트'와 '비즈니스'간의 매커니즘에 대해 연구하고 시범 프로젝트를 실제 사업으로 구현해온 임팩트 비즈니스 전문 조직이다. 2010년부터 기업 사회공헌, CSV, 비영리 프로젝트 등을 자문 및 연구해오고, 다양한 소셜벤처들과 사업협력, 연계, 공동 창업, 운영, 투자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임팩트스퀘어는 3가지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플랫폼에서 각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담당자와 연결하도록 안내한다. 첫째 서비스 영역은 소셜벤처 엑셀러레이션으로, 2011년 이후 소셜벤처 성장에 기여하는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임팩트 엑셀러레이터 콘텐츠를 더해 해마다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다.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활동의 이해를 돕는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세한 내용은 오프라인에서 문의하고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영역은 임팩트 비즈니스에 대한 자문과 연구활동이다. 관련하여 임팩트 생태계의 지식 촉매제로서 변화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IBR(Impact Business Review: <http://ibr.kr>)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다. IBR은 임팩트 비즈니스를 위한 전문 콘텐츠를 제공하며 임팩트를 추구하는 기업가들의 창조적 혁신과 임팩트 투자가 만나 비즈니스로 확장되고 임팩트 이코노미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는 미션과 비전을 추구한다. IBR은 이슈, 솔루션, 그리고 섹션이라는 메뉴를 통해 임팩트 비즈니스를 위한 국내외 정보와 리서치들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마지막 메뉴 영역은 임팩트 비즈니스 구현을 위한 임팩트스퀘어의 인프라와 네트워크 정보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플랫폼의 주된 기능은 정보의 제공과 오프라인으로의 연결채널 역할이다.

6.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http://sehuh.net/consulting institution](http://sehuh.net/consulting_institution))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도록 2013년 1월 23일 설립된 민·관 거버넌스 기관이다. 서울시와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사회적 경제로의 정책통합 및 지속가능 기반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현장 및 민간지원 조직들의 허브로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의 미션은 중앙부처의 개별적인 행정으로 인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온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지원조직들의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통합적 정책환경 조성 및 사회투자, 공공구매, 윤리적 소비 등을 통한 기업과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서울시의 정책 기획·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 활성화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여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플랫폼에서는 센터의 경영지원, 인재양성, 판로지원, 지역화 기반의 지원, 협동화·규모화, 재정지원, 홍보 및 연구지원 등의 영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활동에 대한 소개와 담당자와의 오프라인 연결을 안내한다. 플랫폼에는 캠페인과 이벤트 메뉴 및 알림마당, 아카이브 등의 메뉴를 포함하고 있으나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조직들을 지원하는 다수의 활동에 비해 이해관계자들의 활발한 소통과 참여, 제안 등은 보이지 않아 오프라인 활동을 위한 정보의 게시 매체 역할에 머물러 있다고 파악된다.

7. SK 행복나눔재단 플랫폼

SK 행복나눔재단(<http://skhappiness.org/index.jpg>)은 나눔의 방법을 혁신하고 나눔의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공헌 전문재단이다. 함께 성장하는 행복의 가치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간다는 철학, 소셜혁신가 양성 및 소셜혁신 모델을 개발한다는 사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재단 플랫폼은 수행하는 사업전반에 대한 간략한 소개정보를 제공하고, 관련한 사업수행 조직으로 링크 기능을 제공하는 허브 플랫폼이다. 연결되는 몇 개의 사이트들은 다음과 같다. 행복얼라이언스(<http://happyalliance.org>)는 기업, 기관, 학교가 각각의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함께 집중하기 위해 구축한 국내 최초 사회공헌 네트워크 플랫폼이다. 그들은 개별적으로 전개했던 사회공헌활동과 자원, 역량을 결합하여 영향력 있고 효과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자 웹 플랫폼에서 캠페인을 통해 기업과 개인들의 후원 참여를 독려하고, 활동 서포터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인 후원금과 물품은 공공급식 <행복도시락>과 사회적 기업 <행복한 학교>에 기부된다. 그러나 플랫폼에서 관련 자료들과 보고서들을 자세하게 볼 수 없다.

세상(www.se-sang.com)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를 발굴하고 성장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육성을 통하여 각 기업들의 사업역량 확대와 성장의 기초를 지원한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모두 고려한 임팩트 투자를 통하여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시키며, 사회적 협업 및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장을 지원하고 있다. 플랫폼에서는 활동에 참여하는 많은 협력기업들을 소개하고 활동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채널 역할을 수행한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자신의 전문 역량을 발휘하여 자원역할을 수행하는 자원봉사활동 수행 플랫폼인 SK 프로보노(www.skprobono.com)는 일정 기간, 특정 사회적기업들을 지정하여 사업기획 및 개발, 디자인 등의 지원활동을 수행하고자 이해관계자들을 독려한다.

SK 행복나눔재단과 KAIST 경영대학은 교육 및 학술활동 지원,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창업지원, 국내외 사회적기업 네트워킹 활동 및 지식공유를 통해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SK 사회적기업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사회적 기업가 경영대학원 교육과정을 리뷰하고, 센터 내의 인큐베이션 지원 내용을 파악한다. 연구, 활동 참고자료들을 제공받고 MBA 졸업생들의 사회적기업 사례들을 간략하게 확인해볼 수 있다. SK 행복나눔재단 사이트는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행복한 학교 등의 사회적 협동조합 플랫폼과 행복 전통마을 사회적기업 사이트 등과도 링크된다.

8. 지속가능경영재단 플랫폼

지속가능경영재단(www.sefund.kr/wp)은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 환경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2년 발족한 비영리 민간재단이다. 웰페어노믹스(Welfarenomics)를 기본정신으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만족하는 지속가능 경영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등이 파트너십을 통해 동반성장을 추구하고자 소셜비즈니스 플랫폼을 운영한다. 그들의 비전은 기업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경영 지원과 생태계 확산, 다양한 섹터들의 협력을 통한 전문 파트너십 구축이다. 플랫폼에서는 조직과 사업활동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정보를 볼 수 있으며 대부분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므로 플랫폼에서는 역동적인 활동 프로세스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표 1〉 사례분석 기업 플랫폼 주요 제공기능과 시사점

사례 플랫폼	주요 제공 기능	연구의 플랫폼 제안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
FSG	방대한 CSV 정보 제공, 컨설팅, 블로그 연계/ 아이디어 제안 및 실습 메뉴/ 학습 및 커뮤니티/ 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전 세계 네트워크로 신속하고 방대하게 업데이트되는 방법론적 도구와 사례/ 자료들 제공/ CSV 실행도구들은 각 기업이 개선하여 사용/ 오프라인 연계 교육기관들과 연계하여 학습가능
Kopernik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의 성과를 소개하고 참여방법 제시하면 후원자들이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참여함/ 파트너들 연계시키고 협력하도록 매개 역할/ 활동내역 아카이브, 시각적 현황 제시/ 적정기술 컨설팅 기능/ 이해관계자 업무지원 어플리케이션 제공	플랫폼에서 프로젝트 프로세스 상황 파악 용이/ 연구자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플랫폼에서 정보를 교환, 적정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적정기술 제품과 수요자들을 연결해주는 거래 서비스 제공/ 이해관계자들의 적정기술 보완, 발전에 유용한 공간, 수단 역할
Yunussb	정기적인 오프라인 워크숍/ 소셜비즈니스 촉진 프로그램을 지원 하는 다양한 자료, 학습콘텐츠 제공/ 투자익사를 가진 자본, 파트너들에게 참여 컨설팅, 방법 제공/ 투자상황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 취약층 여성에게 직업, 교육 제공/ 오프라인 서비스와의 연결 매개체 기능/ BOP 대상 생필품 구매, 판매 기능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를 위한 메뉴를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각자 필요한 활동에 효율적이고 용이하게 접근하여 활동수행/ 소셜비즈니스의 소싱, 재무관리, 기술 실사를 통한 선정, 자금조달 프로세스의 진행을 기능화하여 소셜기업가의 성장과 사회적 영향력 확산, 촉진되도록 하는 활동 가이드 메뉴 제공

사례 플랫폼	주요 제공 기능	연구의 플랫폼 제안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
CSV	CSV 오프라인 포럼 활동으로 산출되는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여 CSV 인식 확산, 참여의 장으로 기능/ CSV 실태점검 가능한 IPS CSV 자가진단 도구 제공하여 수준점검, 보완내용 도출 지원/ 오프라인 담당자와 연결하는 매개체 기능	CSV 관련 교육을 대항하는 임팩트스퀘어 사이트로 연계 기능/ IPS CSV 자가진단 도구 제공으로 기업들이 간단한 CSV 활동 진단을 하도록 함
임팩트 스퀘어	조직의 3가지 영역 서비스인 소셜 벤처 액셀러레이션, 임팩트 비즈니스 자문과 연구, 임팩트스퀘어 네트워크와 인프라 연결제공에 대한 정보 제공/담당자와 오프라인 연계	IBR(Impact Business Review) 미디어 사이트의 이슈, 솔루션, 섹션이라는 메뉴를 통해 임팩트 비즈니스 국내외 정보와 전문 콘텐츠들을 제공/ 오프라인 활동 정보제공과 연계채널 역할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센터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활동 소개 / 담당자와의 오프라인 연결을 안내하는 공간/ 캠페인과 이벤트 메뉴, 알림마당, 아카이브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사회적 조직들을 지원하는 활동에 비해 이해관계자들의 활발한 소통과 참여, 제안 등은 보이지 않아 오프라인 활동을 위한 정보 게시, 매개체 역할에 머물러 있음
SK 행복 나눔재단	사회적사업 전반에 대한 간략한 소개정보를 제공하고 행복 얼라이언스, 세상, SK 프로보노, SK 사회적기업가 센터 등, 다수의 각 사업 수행 조직 사이트로 링크 기능/ 각 사이트들은 이벤트, 현재 활동 간략정보 등의 메뉴로 참여자들의 관심 유도 가능	재단의 후원을 통해 수행하는 다양한 사회적 책임활동 수행조직으로 링크하는 허브 플랫폼 역할/ 링크된 각 사이트들은 활동 보고서, 자료 등을 플랫폼에서 충분히 오픈하여 제공하지는 않음/ 각 사이트들은 이벤트 게시 등을 통해 유인력을 가진 홍보채널 역할
지속가능 경영재단	조직과 사업 활동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정보제공/ 오프라인으로의 담당자 연계 채널 기능	대부분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므로 플랫폼에서는 각종 활동의 프로세스와 프로젝트 상황 정보들을 확인하는기 어려움

이상 다양한 국내, 외 플랫폼들을 살펴보았다. <표 1>에서는 사례 플랫폼들의 주요 제공기능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플랫폼 프레임워크에 참조할 유용한 시사점들을 정리하였다. 해외 플랫폼은 수혜 대상자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단체 및 기관들이 플랫폼에서 참여방법을 찾고 연속적인 다음 활동으로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한 관련활동에 대한 다양한 학습자료와 실천도구 포맷, 애플리케이션

이선, 리서치 사례들이 최신의 것으로 신속히 업데이트되며, 커뮤니티 참여 기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특별히 Kopernik 플랫폼의 경우, 현지에서 활동하는 NGO, 적정기술 개발 기업, 후원자, 수혜자인 지역 키오스크 운영자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플랫폼을 통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웹 플랫폼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반면 국내 플랫폼들은 수혜자는 물론이고 참여자들이 오프라인으로 연결하여 문의하고 오프라인을 통해 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플랫폼은 여전히 정보제공과 오프라인 연결을 위한 매개 채널로의 기능에 치중되어 있는 점이 아쉽다.

IV. CSV 활성화를 위한 ICT 플랫폼 제안

본장에서는 CSV와 ICT 플랫폼 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외 플랫폼 사례분석을 통하여 디지털 기반에서 CSV 활동을 활성화시킬 효과적인 실천도구로서의 ICT 플랫폼을 제안한다. 오늘날 CSV에 대한 민간 및 공공조직의 관심이 증가하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으나 전사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혁신적인 관점으로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이 요구된다는 특징 등으로 쉽게 실행하고 성과 또한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CSV 활동은 조직 내부에서, 특히 과거 CSR 활동을 맡아하던 단일부서나 팀에서 주도해서는 유의미한 목적활동과 성과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된다. 오늘날 ICT 기반의 플랫폼은 다양한 복수의 그룹이 시, 공간의 제약 없이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가치와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과 도구로 자리잡았다. 플랫폼에서는 자원의 소유보다는 공유와 활용이 중요하며, 플랫폼의 성공은 그룹 간 활발한 교류가 네트워크 효과로 이어지고 생태계 내에서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를 통해 시너지가 발휘될 때이다. CSV 활동은 물리적으로 흩어져 있으나 목적을 같이 하는,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부 및 지역사회, 전문가 그룹, 수혜 대상자들이 ICT 플랫폼에서 서로의 필요를 제시하고 상호작용하며 실행하는 체계를 갖출 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에 ICT 기반 플랫폼의 목적과 가치는 CSV에 뜻과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이해관계자들을 플랫폼에 유인하여 조직 내부에 한계를 두지 않는 창의적인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발의하고,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도구들을 공유하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활동을 진행하며, 함께 학습하며 발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CSV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핵심요건을 필요로 한다. 첫째, CSV 플랫폼은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Yunussb 플랫폼은 세계 각지의 참여자들을 적합한 투자 및 후원 활동으로 연계시켜 명확한 소통으로 소셜비즈니스 활동과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한다. SK 행복나눔재단 사이트 또한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행복한 학교, 행복 전통마을, 사회적 기업가센터 등으로 링크되는 허브 플랫폼이다. FSG 플랫폼과 국내 CSV 플랫폼도 컨설팅 및 교육 사이트로 연계시키는 허브의 역할을 한다. 둘째, CSV 플랫폼은 신속하게 새로운 정보들이 업데이트되고 학습자료, CSV 실행도구, 포맷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FSG, Yunussb, Kopernik 플랫폼 등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이 방문하여 CSV 및 적정기술, 후원활동 등에 대해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방대한 내용들을 즉각 제공하며, 각자 참여 가능한 영역과 자신의 역할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지원한다. 플랫폼에서는 관련 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경험자,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즉각 연결, 지원하는 프로세스가 진행되며, 커뮤니티, 학습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제안된 CSV 활동이 플랫폼에서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참여자들에 의해 CSV 아이디어와 프로젝트가 발의되고, 집단지성 활동을 통해 요구자원과 방법론이 제시되고, 계획이 합의 및 수립되고, 각 단계마다 산출물이 체계화되며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평가와 보완이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활동의 흐름이 가능해야 한다. 플랫폼은 오프라인으로 연결시키는 채널에 머무르지 않고 디지털 공간에서 실제 활동이 진행된다. 국내 플랫폼 대부분이 오프라인으로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어 디지털 시대의 작업 패러다임과 맞지 않는다. CSV 플랫폼은 클라우드 기반의, 즉시성을 가진 스마트 모빌리티로 대부분의 오프라인 활동과 동일한 실행이 가능한 기술환경에 있다.

<표 2>는 이상, 논리적 근거와 사례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 프로세스 관점의 CSV 플랫폼 프레임워크와 지원기능을 제안하고 있다. 김현중 외(2017)의 Co-creation 플랫폼을 참조의 틀로 하였으며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요건들을 반영하여 제시하였다.

〈표 2〉 프로세스 관점의 CSV 활동 플랫폼 기능

실행 단계	단계의 실행 활동	요구되는 플랫폼 지원 기능	온/오프 연계활동 요구	참여자
1. CSV 과제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 CSV 과제 제안 • 과제필요성/의미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 과제내용 게시를 통한 의견청취/개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제안 기능(클라우드 파일 업로드, 게시 등) • 웹 기반 검색 및 필터링 기능 (언론, 포탈, 외부 SNS 등과 연동) • 화상회의 및 메신저 등, 집단 커뮤니케이션 기능 • 웹 기반 설문조사 및 게시 기능 • 빅데이터 분석으로 사회적 핵심이슈 및 의견 확인 기능 (오피니언 마이닝, 이슈 분류/도출 등) • 지식 분류/저장소 제공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기반 소통을 통해 오프라인 미팅 제안 및 공지를 통한 대면활동 • 수혜자 방문 및 출장 등 확인 활동 	수혜자, 지자체, 민간 및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소, 비영리/사회적 기업 등
2. CSV 과제의 공유/합의/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SV 과제의 참여자 정의/의견개진/신청 • 관찰 및 논의, 공감대 • 과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참여 등록 및 관계자 추천 기능 • 과제 관련 자료 배포/전달 • 인터뷰 실행, 게시, 의견달기 및 논의 • 과제의 기대성과 게시 및 논의 기능 • 웹 기반 투표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확인 및 오프라인 미팅 제안, 공지를 통한 대면활동 	과제 관련 이해 관계자 및 참여 가능자
3. CSV 과제 정의/목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SV 과제 내용 정의 • 과제 비전과 목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지성 방식의 정보, 지식 작성 및 수정, 지식 분류/저장소 제공기능 • 참여자에게 웹 기반 문서 배포 기능 • 온라인/모바일 공지 및 커뮤니케이션 기능 • 공개 질의응답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확인 및 오프라인 미팅 제안, 공지를 통한 대면활동 계획 	과제 관련 관계자 및 각 단계 참여 가능자
4. CSV 과제 전략 및 실행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전략, 핵심 성공요인, 성과지표, 요구자원 정의 • 실행 로드맵 정의/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지성 방식의 정보, 지식 작성 및 수정, 지식 분류/저장소 제공기능 • 로드맵 및 기타 표준 포맷/템플릿 도구 업로드 및 제공 기능 • 웹 기반 검색 및 필터링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확인 및 오프라인 미팅 제안, 공지를 통한 대면활동 	과제 관련 이해 관계자 및 참여 가능자
5. CSV 과제 실행 방안 확정/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참여자 역할 설정 • 요구자원 마련, 배분, 관리 • 정책, 제도, 규정 확인 • 실행프로세스 관리방안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기반 진행활동 프로세스 관리 기능 (BPM 관점) • 집단지성 방식의 정보, 지식 작성 및 수정, 지식 분류/저장소 제공기능 • 정부 및 공공기관, 이해관계자 사이트로 연계기능 • 웹 기반 공지 기능/ 스마트 알람기능 • 전문가 멘토링 소통제공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확인 및 조직 내/외보고회, 워크숍 • 필요 시, 공지를 통한 대면 활동 	과제 관련 이해 관계자 및 참여자, 관련분야 전문가/컨설턴트

실행 단계	단계의 실행 활동	요구되는 플랫폼 지원 기능	온/오프 연계활동 요구	참여자
6. CSV 과제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SV 과제 활동 실행 • 실행활동 모니터링 및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기반 진행활동 프로세스 관리 기능 (BPM 관점) • 웹 기반 공지, 게시, 피드백 기능 • 빅데이터 분석으로 현재 핵심이슈 및 의견 확인 기능 (오피니언 마이닝, 이슈 분류/도출 등) • 필요 시점마다 스마트 알림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확인 및 오프라인 미팅 제안, 공지를 통한 대면활동 	과제 관련 이해 관계자 및 참여자
7. CSV 과제 성과 평가, 보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작성 • 정량적 및 정성적 목표 달성 확인, 평가 • 참여자 및 수혜자 만족도 평가, 게시 • 개선의견 수렴 및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및 지표 포맷/보고서 제공/게시 • 웹 기반 설문조사 및 인터뷰 기능 • 평가자 pool 에서 평가자 지원 및 선정 기능 • 과제 결과 점수화 처리 기능 • 화상회의 및 집단 커뮤니케이션 기능,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으로 논의 및 개선/보완방안 마련 • 완료 보고서, 평가내용 게시/배포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내/외 보고회 및 워크숍 등 	과제 관련 이해 관계자 및 참여자, 관련분야 전문가, CSV 관심조직
8. CSV 과제 피드백 및 학습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완료 사례보고서 및 피드백 게시 • 과제 아카이브 저장 • 과제 사례를 통한 학습제공, 실행도구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SV 사례 분류 및 아카이브 저장 기능 • 학습 콘텐츠 및 과제실행 템플릿 개선/공유 • 웹 기반 학습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으로 사례 기반의 학습 프로그램진행, 토론회 등 • 신규 CSV 과제 발굴, 확산을 위한 모임, 방문 	과제 관련 이해 관계자 및 참여자, 사례 학습자, 정책 입안자 등

첫째, CSV 과제발굴 단계에서는 플랫폼에 접속 가능한 개인, 조직 등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하며 구체화시킨다. 스타벅스 MSI(My Starbucks Idea)는 기업 홈페이지와 외부 SNS를 연동시켜 경영에 반영할 소비자 및 대중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투표하여 경제적 가치 상승과 사회적 필요에 부응한다. Quirky는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전문가 및 일반 대중들이 사회적 요구가 있는 제품을 제안하고 평가 프로세스를 거쳐 시제품을 통해 상품화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이러한 상품개발과 판매방식은 큰 반향을 일으키며 다수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기획, 디자인, 브랜딩, 생산, 판매 등, 가치사슬 과정을 오픈 플랫폼에서 수행하는 혁신을 제시하였다. 둘째, CSV 과제의 공유 및 합의, 선정 단계이다. 이해관계자들이 과제의 성격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프로젝트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과제관련 자료와 제안배경, 목표성과 등을 제시하면 공개,

혹은 비공개 논의를 통해 웹 기반 투표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한다.

셋째, CSV 과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비전, 목표 등을 이해관계자들과 명확하게 공유한다. 집단지성 방식으로 과제수행에 필요한 내용들을 완성해나가고, 지식저장소에 저장하여 검색하거나 웹 기반 문서로 배포, 질의응답 기능들을 마련하여 디지털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넷째, CSV 과제 실행전략, 세부과제들을 설계하는 단계이다. CSV 핵심이슈에 따른 세부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핵심 성공요인, 성과지표, 요구자원, 실행로드맵 등을 계획한다. 웹에서 각종 템플릿 도구들을 업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섯째, CSV 과제 실행방안 확정, 구체화 단계이다. 관련 법, 제도적 내용을 함께 확인하고 자원을 배분한다. 디지털 공간에서 역할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여 게시하는 것은 구체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 단계부터는 단편적인 활동이 아닌 연속적인 활동이 시작되므로 웹 기반의 비즈니스프로세스 관리(Business Process Management:BPM) 기능,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의 연계 기능, 웹 기반 공지 및 스마트 알람기능 등이 필요하다.

여섯째, CSV 실행단계에서는 모니터링과 피드백 기능이 중요하다. 이때 과제 주관자들의 신속한 상황정보 게시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마이닝을 통한 관련 이슈 도출 및 논의기능도 요구된다. 일곱째, 성과평가와 개선, 보완단계이다.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대상의 설문조사 및 인터뷰, 과제성과에 대한 점수화 기능, 그룹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결과보고서 게시 및 배포 기능 등이 요구된다. 여덟째, 피드백 및 학습단계이다. 핵심지표를 기반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피드백 게시, CSV 활동의 확산을 위해 사례를 콘텐츠화 하여 저장하고 학습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플랫폼 아카이브에 저장된 사례들은 분류되어 학습물로, 과제실행을 통해 보완된 템플릿 등은 다수에게 오픈되어 지속적인 우수사례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오늘날 가장 효과적인 비즈니스 도구, 소통의 장, 혁신과 진화의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ICT 기반 플랫폼을 공유와 협력이 필수적인 CSV의 효과적인 실행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온, 오프로 긴밀하게 연계하며 중단 없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생태계 구현이 가능하다.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망 구조로 집단지성을 통해 사회와 기업에 필요한 현실적 아이디어들이 발의되고 유효 자원들이 활용되어 성과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플랫폼 프레임워크와 기능들은 Co-Creation 모델을 기반으로 하였으나 국내외의 플랫폼 사례들을 또한 참조하여 유용한 장점과 부족한 점을 고려한, CSV 활동에 적합한 관점으로 제안한 것으로 차별성

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플랫폼은 굳이 따로 구축하지 않고 기존의 민간 및 공공조직의 플랫폼에 기능을 추가하여 충분히 운영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사이트와 SNS 사이트들에 링크로 연결하고 함께 홍보하여 기 보유한 기술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자원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전환과 업무형태, 방식의 혁신적인 개선이 보다 요구되는 부분이다.

V. 결 론

CSV는 실무에서 큰 관심을 받고는 있으나 크게 확산되어 전략으로 자리 잡거나 다양한 우수사례들이 제시되고는 있지 못하다. 또한 CSV 관련연구는 당위성 측면의 연구들은 다수 있으나 현실적인 적용에 도움을 줄 실행방안, 방법론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CSV를 활성화시키고 CSV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CSV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민간 및 공공조직에서 내부 역량으로만 혁신적인 성격의 CSV를 실행하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CSV의 성격이 경제적 가치를 도출함과 함께 사회적 문제, 필요성, 가치 또한 해결한다는 것이기에 과거의 전형적인 사업수행 방식과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다각적인 시각과 자원 공유, 협력적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영리 조직들은 사회문제에 식량이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나 지속가능 경제활동으로 고용기회를 만들기는 어렵다. 대학 및 연구소 등, 전문가 그룹 또한 자원과 역량을 제공할 수 있으나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기 어렵고, 정부기관 또한 지원적 역할에 머무른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성과의 창출 없이는 사회적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어렵기에, 비즈니스적인 힘과 더불어 사회적 문제에 뜻과 전문성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사회적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과와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조직 내부관점에 한정된 아이디어와 자원에서 벗어나 CSV 활동영역과 한계를 확대하도록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소통, 공유를 주장하는데, 효과적인 CSV 수행도구, 활동의 장으로서 ICT 기반의 플랫폼을 제안하며 플랫폼 프레임워크와 필요기능들을 제시하였다. CSV 플랫폼 프레임워크에는 프로세스 관점에서 단계마다 실행활동, 플랫폼의 요구기능, 온/오프 연계활동의 필요성, 그리고 참여자들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최근 기업들은 지속 가능 경영 패러다임에 따라 윤리경영, 고객중심 경영 미션과 비전을 수립하고 있는 바, CSV의 실천적 접근을 위한 CSV 미션과 비전, 전략방향 및 추진과제, 로드맵 등을 수립하고 이를 플랫폼을 통해 조직 대내·외적으로 공유하며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킬 때 CSV 활동은 활성화될 것이다. 둘째, 사회와 시장의 문제를 발견하고 경제적 가치 또한 창출하고자 할 때 최적의 실행도구와 공간으로서 ICT 플랫폼의 최신 스마트 기술들을 활용한다면 시, 공간의 한계를 넘어 생태계를 확장하고 좀 더 다양한 사례들을 창출하고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플랫폼을 단순정보 제공과 오프라인 연계 채널 역할로 한정하지 말고 디지털 기반에서 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처리하는 혁신적 접근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CSV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들이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CSV 사례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벤치마킹되고 커스터마이징될 수 있는 연구, 효과적인 실행방법들을 제안하는 연구들로 민간 및 공공조직들이 CSV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동기를 갖도록 하여 패러다임 변화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유사연구가 충분치 않아 실증을 동반하지 못한 탐색적 제안연구로 수행되었다는 점이다. 향후 CSV 플랫폼 활용을 통한 활성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실행결과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실증연구를 수행하기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김우용. 2019. "SK, 사회적 가치 측정해 KPI에 50% 반영." 『ZDNet Korea』 (<http://www.zdnet.co.kr/view/?no=20190521122304> 2020/01/20.검색).
- 김현중 외. 2017. "Co-creation 기반 지역혁신 모델을 위한 플랫폼 설계." 『2017년 경영정보관련 춘계통합학술대회 논문집』. 703-707.
- 박광오. 2019. "공급사슬 내 CSV와 파워속성이 정보역량에 미치는 영향." 『경영과 정보연구』 8(2), 83-102
- 윤각·이은주. 2014.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공유가치창출(CSV)의 효과에 관한 연구: 자기효능감과 관여도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25(2), 53-72.
- 이상규. 2010. 『플랫폼 시장의 경쟁 이슈와 정책과제 1 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
- 이정가·이장우. 2016. "공유가치창출(CSV) 전략의 유형화와 실천전략." 『Korea Business Review』 20(2), 59-83.
- 조신. 2013. 『대한민국 IT 인사이트: 한국의 미래 IT 산업 선점 전략』. 서울: 중앙북스.
- 조영연·구유리. 2019. "어린이 안정을 위한 기업 CSV 사례분석 - 이해관계자와의 Co-creation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9(11), 356-357.
- 최다운·김경복·이상명. 2015. "공유가치창출의 동기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연구』 22(2), 153-174.
- 홍순구·김동완·임성배. 2015. "IT 융합 Co-creation기반 지역혁신모델 적용 및 유형별 참조모델 개발."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63-175.
- 황혜정. 2018. 『탈규모 시대의 제조업, 플랫폼 비즈니스'로 도약한다』. LG경제연구원 보고서.
- KOTRA. 2017. 『SDGs 시대, 공유가치창출과 비즈니스 기회: 신흥국 진출전략』. Global Strategy Report. 17-012.

영문 자료

- Archie B. Carroll. 2008. "A histor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ncepts and practices." in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edited by Andrew Crane, Dirk Matten, Abigail McWilliams, Jeremy Moon and Donald S. Siegel, 19-4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esbrough. 2011. "The Case for Open Services Innovation: The Commodity Trap."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53(3), 5-20.
- Hong, S. G., H. J. Kim and N. R. Kim. 2016. "Development of a Co-creation Model for the Social Problem Resolution." *INFORMATION-An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Journal* 19(8,B), 3395-3400.
-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2016. "Built for Change: Inclusive Business Solutions for the Base of the Pyramid." *World Bank Group Report*.
- Marshall, Alstynne, Geoffrey, Parker, Choudary. 2016. "Pipelines, platforms, and the new rules of strategy." *Harvard Business Review* April, 1-18.
- McWilliams, Siegel. 2011. "Creating and capturing value: Strategic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ource-based theory, and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37(5), 1480-1495.
- Porter, Kramer. 2006. "Strategy and Society: The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December, 78-93.
- Porter, Kramer. 2011.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January-February, 1-17.
- Porter, Michael E., Greg Hills, Marc Pfitzer, Sonja Patscheke and Elizabeth Hawkins. 2013. "Measuring Shared Value." FSG Report February, 1-15.
- Prahalad, C. K. Ramaswamy. 2004a. *The Future of Competition: Co-Creating Unique Value with Customers*.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Prahalad, C. & K. Ramaswamy. 2004b. "Co-creation experiences: The next practice in value creation." *Journal of Interactive Marketing* 18(3), 5-14.

인터넷 자료

- <http://www.collectiveimpactforum.org/about-us> (2019년/10월11일 검색).
- <http://www.csvplatform.net> (2019년/10월15일 검색).
- <https://www.fsg.org> (2019년/10월11일 검색).
- <http://happydosirak.org/> (2019년/10월15일 검색).
- <http://happyalliance.org> (2019년/10월15일 검색).
- <http://ibr.kr/515> (2019년/10월11일 검색).

<http://ibr.kr/2824,2013> (2019년/10월11일 검색).
<http://www.impactsquare.com> (2019년/10월11일 검색).
http://www.ips.or.kr/site/IPS/award/continue_01.aspx (2019년/10월11일 검색).
<http://www.kopernik.info> (2019년/10월13일 검색).
<http://kosif.kr> (2019년/10월13일 검색).
<https://makers.kakao.com> (2019년/10월13일 검색).
<https://prezi.com/skksneocp90e/10> (2019년/10월13일 검색).
<http://sehub.net/consulting-institution> (2019년/10월13일 검색).
<http://www.se-sang.com> (2019년/10월14일 검색).
http://www.seoulnpocenter.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146
(2019년/10월14일 검색).
<http://sksecenter.kaist.ac.kr> <http://skhappiness.org/index.jpg> (2019년/10월14일
검색).
<http://www.skprobono.com> ((2019년/10월15일 검색).
<https://together.kakao.com> (2019년/10월15일 검색).
<http://www.yunussb.com> (2019년/10월16일 검색).
<https://quirky.com> (2019년/10월16일 검색).
<http://www.starbucksathome.com> (2019년/10월16일 검색).

Abstract

A Study on ICT Platform Framework Proposal for CSV Activation

Yun Hi Chang ■ Dankook University

This study proposes the utilization of the latest digital technology-based CSV platform as a way to speed up the scope and speed of CSV implementation by expanding the scope of the CSV activity to the outside of an organization and allowing stakeholders to actively approach it from the perspective of disclosure, participation, sharing, and cooperation. Today as most production, consumption, and communication activities take place on ICT open platforms, the ICT platform can be an effective tool and means to create synergy with CSV activity that is not easy to proliferate in regards to its strategic meaning and value. Accordingly, domestic and foreign similar activity platform cases were found and analyzed, and the functions required for the CSV platform were presented for each step of the activity process. Currently, domestic and foreign platforms provide a variety of support functions, however its implementation does not suffice to be seamlessly performed in the digital space. Through the ICT-based platform proposed in this study, private and public organizations can establish CSV vision, strategy, execution roadmap, and performance indicators to seamlessly communicate with external stakeholders in the digital platform space with the latest smart function to ensure continuous CSV activities and improve performance without interruption due to space-time constraints. CSV ecosystem can be further activated through collective intelligence based idea & knowledge creation, storage, posting functions, various communication & voting functions, issue derivation & discussion functions through big data analysis, evaluation function, report & various template provision functions, learning contents derivation & publication, and operation functions. It is crucial that many researches are done to support strategic CSV

activities via various methodologies in order to create both economic and social value that enable sustainable business activities.

Key Words: CSV, ICT Platform, Social Value and Economic Value, Sustainable Business Strategy, CSV Platform

Religious Identity and the Democratic Peace*

Sung Chul Jung ■ Myongji University**

〈Abstract〉

International relations scholars have agreed that there is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shared democracy and interstate peace, but not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se factors. In an effort to further explain what fosters peace between democracies, this study shifts the focus to the presence of a common predominant religion - in particular, Christian populations and organized groups. Using the World Religion Data, it examines the effects of Christianity, Islam, Buddhism, and other religions on dyadic conflict onset in the post-World War II period. The results show that the presence of a greater Christian, Protestant, or Catholic population share has negative and significant effects on the onset of (fatal) conflict, and that the pacifying effects of the Christian population share increase when the institutional constraints on political leadership are stronger. This implies that cooperation among democracies results at least partly from their shared religion and its transnational institutions.

*Key Words: democratic peace, religion, international security, transnational actors, Christianity

I . Introduction

What prevents interstate conflict, and how can we create and expand the zone of peace in world affairs? Since the two world wars,

* Earlier versions of this work were presented at the 2017 annual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in Baltimore and at the 2018 summer convention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in Busan.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7S1A5A8021788). The online appendix can be downloaded at the following link: <https://sites.google.com/site/scjung2015/home/writing>.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Myongji University (Email: sungchul.jung@gmail.com)

International Relations(IR) scholars have been seeking to answer these questions. On one hand, realists, emphasizing the anarchical na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argue that power distribution and changes in that distribution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 Realists argue that a bipolar system characterized by great powers and nuclear proliferation provide a better environment in which states can maintain stability, if not peace. On the other hand, liberals shed light on institutions, economics, and politics, looking for ways in which states seek common interests or avoid asymmetric information. From this perspective, states choose cooperation as a rational option that promises security and affluence, especially in the long term.

This study proposes to shift the focus from power and institutions to religion and identity. Although realist and liberal arguments have historically dominated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recently scholars have paid more attention to religion as an important but overlooked factor in international politics, especially since the September 11, 2001 attacks(Petito & Hatzopoulos 2003; Fox & Sandler 2004). Does religion matter in interstate politics? Many now would agree, but a limited number of IR scholars have seriously attempted to explain why and how. This is mainly because mainstream IR scholars have relatively disregarded religion as a factor of international politics, assuming that states are rational and unitary actors and foreign-policy making is a secular process. But in the last several decades some IR scholars have made efforts to delve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security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s and data analysis(Snyder 2011; Warner & Walker 2011), as discussed in the next section.

Few would dispute that democratic states have rarely fought each other in the period since World War II. But wh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what we call democratic peace results from the presence of a common religion, i.e., Christianity, and whether the frequently supposed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peace may not be directly causal but spurious (or non-causal). This idea finds strong support from the statistical analyses of dyadic (i.e., between pairs of countries) relationships

from 1945 to 2001, which shows that having a common Christian, Protestant, or Catholic population has significant and negative effects on militarized conflict onset, that considering a common Christian population negates the common democratic peace effects, and that the pacifying effects of the shared religion seems stronger when political leaders are more institutionally constrained.

The rest of this paper is composed of four parts. First, it reviews the literature on inter-democracy peace, comparing three approaches - liberal, realist, and domestic politics - to war and democracy. Then, it develops a religious explanation of dyadic democratic peace, emphasizing transnational religious groups' influence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s especiall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Next, it report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test of whether having a greater share of religious population contributes to dyadic peace, even after controlling for political regime similarity. Finally, it concludes with its main findings and future research topics.

II. Democratic Peace Theory and Its Critics

Democratic peace theory has been one of the most widely debated concepts among IR scholars in the post-Cold War period (Levy 1994; Brown et al. 1996). Based on the empirical finding that democracies do not wage war against each other, many scholars and policymakers have asserted that promoting democracy increases international security as well as human freedom. However, the idea of democracy promotion which seems ethically good as well as strategically beneficial has been criticized because dyadic peace does not guarantee systemic peace (Gleditsch & Hegre 1997; Gartzke & Weisiger 2013). More democracies in a system bring more democratic dyads as well as more mixed dyads. Given that mixed dyads are more conflict-prone than others, we may not expect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more democracy and systemic peace.

However, we still do not know why joint democracy brings dyadic peace.

Indeed, serious debates have centered on the effect of joint democracy on dyadic peace. Does democracy have independent and significant effects? When and how does democracy contribute to dyadic peace? In defending their democratic peace thesis, liberal scholars have suggested two distinct, but not exclusive, approaches: normative and institutional(Maoz & Russett 1993). The normative approach emphasizes that democratic leaders perceive other democracies as friends rather than as rivals or enemies(Doyle 1983). In other words, democracies respect and trust each other, creating their own Kantian world in which states can avoid war even when their interests collide. According to the institutional approach, democratic leaders are constrained by domestic rules and institutions that make them responsible for the costs of bad decisions and failed policies. This makes democratic leaders reluctant to make war and causes them to view each other as prudent in times of peace and tough in war(Bueno de Mesquita et al. 1999). Thus, they prefer negotiation rather than facing the costs and risks of large-scale conflict.

One argument refuting the liberal approach is that not all democracies are mature enough to play a prudent and trustworthy role in international politics. Even when states hold free and fair elections, they may not be truly democratic if their leaders violate the nation's constitution and basic human rights. This is why Dahl(1971) distinguished between public participation and elite competition in proposing polyarchy as an ideal regime type. In the post-World War II period, we have witnessed many cases of democratic transitions that achieved mass participation in politics but encountered trouble in establishing a smoothly functioning checks-and-balances system among domestic actors. Their leaders were often unconstrained and ruled in an arbitrary way. This phenomenon led Zakaria(2003) to insist that not all democracies are liberal and peace-loving. In their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udies, Mansfield and Snyder(2005) persuasively argue that democratizing states, especially ones transitioning from autocracy to mixed regime, show aggression in their foreign behaviors because their leaders exploit

nationalism for their political survival.

Another realist argument is that the relation between democracy and security is not causal but spurious (Rosato 2003). According to them, democracies have cooperated effectively because of their common strategic and economic interests, hence the peace among them should be called "Cold War peace" or "capitalist peace."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most democracies were in the U.S. bloc that opposed the Soviet bloc. They were strategic partners fighting together rather than democratic partners sharing polities (Farber & Gowa 1995). Indeed, the United States maintained good relations with autocratic allies, including South Korea, the Philippines, Iran, and Iraq, whereas it sometimes had troubles with fellow democracies like India and France. In addition, most democracies are deeply involved in economic globalization through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Gartzke 2007; Mousseau 2000). Most democracies are so involved in the global economy that they have prospered from the liberal world order since the end of the two world wars. As business partners, democracies cooperate actively with each other and work together for common wealth.

This strategic-/economic-interest-based approach gives little weight to democracy's characteristics and capabilities. As discussed above, many liberal scholars provide explanations of how a political system'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make leaders less likely to initiate interstate conflict, and how domestic audience and opposition parties allow democratic leaders to send strong signals to each other and avoid inter-democratic conflict (Fearon 1994; Schultz 1998). But the realist view sees democratic peace as cooperation among similar regimes, supporting the idea for the zone of peace among authoritarian or socialist states (Bennett 2006; Peceny, Beer & Sanchez-Terry 2002; Oren & Hays 1997). In other words, it insists that regime similarity, rather than common democracy, contributes to interstate cooperation because states of similar institutions often share interests and ideologies and prefer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This explanation implies that democracies can cease cooperating with each other and engage in conflict. The

discontinuation of peace among “developed socialist states”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which had been a key security provider, exemplifies this point(Oren & Hays 1997).

The third argument against the liberal perspective of the democratic peace theory comes from the society-level approach. According to this view, social identities bring interstate peace. Therefore, the absence of war between democracies results not from democratic politics or common interests but from social identity or cultural similarity. This approach shifts the focus from state-level factors (i.e., regime type, economic openness) to society-level ones (i.e., ideology, identity)(Hermann & Kegley 1995). In his study on liberal war and liberal peace, for example, Owen(1994: 95) argues liberal states fight for liberal ends against illiberal ones because liberal democracies believe their fellows “reasonable, predictable, and trustworthy,” supporting.” Some scholars also have developed cultural peace theses, including “Confucian peace”(Kelly 2012) and Asia’s benign hierarchy(Kang 2010), which emphasize how cultural norms and regional traits shape, if not determine, relations among political entities(Henderson 1998, 2009). In this regard, democratic peace may not result simply from similar political institutions but from holding similar norms such as human rights and religious freedom(Sobek, Abouharb, & Ingram 2006). However, this approach loses its explanatory power if, in reality, political leaders do not represent their society’s opinion but enforce their own views in their foreign policymaking. Even in democracies, we sometimes see political leaders who make decision irrespective of public opinion when they face serious issues in foreign affairs.

The three main approaches to interpreting inter-democratic peace are summarized in Table 1. They posit democracy, strategic and economic interests, and identity, respectively, as the main cause of peace between democracies. Whereas liberals argue for a causal relation between democracy and peace, interest and identity approaches insist that the relation is spurious or non-causal. Moreover, while liberalism regards democratic regions as a special zone of peace, the other two approaches

argue that the zone of peace exists because states are bound together by a common interest or common identity, irrespective of their regime types.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some regard democracy as not a cause but a result of peace. They argue that international peace provides a suitable environment for democratic transitions or democracy’s survival (Rasler & Thompson 2004). But many believe that this proposed reverse causality cannot fully explain the strong correlation between democracy and peace.

〈Table 1〉 Three Approaches to Inter-democratic Peace

	Democracy-based	Interest-based	Identity-based
What causes inter-democracy peace?	Common democracy: normative and institutional	Common interest: economic and strategic	Common culture and ideology
What is the relation between democracy and peace?	Causal: Democracy → Peace	Spurious/ Non-causal	Spurious/Non-causal
What should we call inter-democracy peace?	Democratic peace	Capitalist peace, Cold War peace	Liberal peace
Can we find other zones of peace?	Not likely	Likely; e.g., dictatorial peace, developed socialist peace	Likely; e.g., Confucian or Sinic peace, human rights peace

It is perhaps surprising that, amidst IR scholars’ considerable efforts to explain what brings peace among democracies, serious efforts have not made fully to explain the effect of common religion on interstate peace, contributing to both the literatures of religion and politics and interstate conflict (for notable exceptions, see Henderson 1998; Horowitz 2009; Henne 2012). As discussed above, realists argue that democracies cooperate because they share strategic and economic interests; the domestic approach insists that democracies tied together by a common culture and ideology support each other. But one overlooked observation, even in the domestic approach, is that most democracies share a common dominant religion, Christianity. Is there any relationship between shared

Christianity and interstate cooperation? How can we explain the relation among religion, democracy and peace? What causal mechanism linking a common religion and democratic peace can be suggested and tested?

III. Religion and International Peace

IR scholars have focused mainly on power, interests, and institutions as main factors in their studies. However, religion has attracted increasing attention from political scientists at least since the 9/11 attacks(Philpott 2002; Snyder 2011; Shah, Stepan, & Toft 2012). In the wake of the Soviet Union's collapse, Samuel Huntington(1996) expected that a clash of civilizations would replace the former war of ideologies. His study, relying on different religions in mapping the world as composed of nine civilizations (Western, Orthodox, Islamic, Hindu, African, Latin American, Sinic, Buddhist, and Japanese) aroused popular attentions and critical criticisms from the West and the rest, alike(Henderson 2004; Russett, Oneal, & Cox 2000; Chiozza 2002; Fox 2002). But it was al Qaeda's surprise attacks on the U.S. which triggered systemic and rigorous studies on the effect of religion on foreign policy and world politics(Petito & Hatzopoulos 2003; Fox & Sandler 2004; Warner & Walker 2011; Brown 2016; Alexaner 2017). It was not major powers and their coalition but radical Islamic terrorist groups which posed major threat to the unipolar system leader. Many pundits and scholars also pointed out "a jump in religious vitality around the world" rather than a secularization of the globe in the post-Cold War period(Jenkins 2002; Shah & Toft 2006; Johnson 2017).

Indeed, religion affects politics by shaping individual perception, preference and behavior. Wu and Knuppe(2016), for example, found that Americans, especially those more religious, are more likely to support foreign intervention when the victims are fellow Christians. This "brother's keeper effect" shows that individuals have more favorable

feelings for their co-religionists even without any prior interaction. Johns and Davies(2012) also show that both the U.S. and British public tend to support using military force more against Islamic than against Christian countries, similar to their willingness to resort to military force against dictatorships than against democracies. Given the usual pattern of bias toward in-group members and against out-group member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religion affects decision-makers' judgment, especially in times of international crises, such as William McKinley in the Spanish-American War, Woodrow Wilson in World War I, and George W. Bush in the Iraq War(Preston 2012). Individuals usually support aid and intervention for their co-religionists and oppose pressure and sanctions against them.

Not surprisingly, religious individuals do not simply act alone. They often work together as groups to shape public opinion and lobby government officials. Religious groups are deeply interested not only in domestic issues such as abortion and homosexuality but also in foreign policy issues, including international poverty, religious freedom, and AIDS(Amstutz 2014: chs. 5, 6, 7; Shin 2014). One well-known historical example is British Christians' activism against the slave trade in the nineteenth century(Kaufmann & Pape 1999); a more recent, provocative instance is U.S. Christian Zionists' support for Israel(Amstutz 2014: ch. 6; Mearsheimer & Walt 2007). Indeed,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transnational religious actors and their influence on foreign policy and international politics: al-Qaeda, American Evangelical Protestants, the Organis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and the Roman Catholic Church(Haynes 2009; 2001). These groups' stance on certain issues of foreign affairs can be best explained not in terms of power and interest but as reflections of belief and theology.

What should be noted is that Christian organizations have grown to become transnational and influential 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tics. Many global religion-based organizations like World Vision and Compassion International connect people across nations and borders and strengthen their sense of worldwide brotherhood(Rudolph & Piscatori

1997). Since the First Great Awakening, for example, a transatlantic evangelical network emerged to forge a common identity and advocacy stance on social issues such as slavery and independence in both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Yoon 2012; O'Brien 1986; Carwardine 1978). As globalization deepens, transnational faith-based organizations have become more deeply involved in international issues, not only by directly helping people and sending aid but also by affecting foreign policies of major states(Wuthnow 2009). Although the influence of Christianity seems to have declined in Europe and the U.S., Western denominational and nondenominational organizations have continued to coordinate global Christianity's financial and organizational resources, strengthening faith-based networks among people and organizations interested in international issues like emergency relief, poverty, education, human rights, and religious freedom(Wuthnow 2009: 55-61).

In broad terms, religion matters in foreign policy not only because it creates constructivist factors (i.e., identity and idea) but because it constructs liberal factors (i.e., domestic groups and institutions)(Warner & Walker 2011). Increasingly more IR scholars, realists as well as liberals, seem to agree that states often do not what they should do but what they prefer(Moravcsik 1997). This is represented in their studies of domestic actors and institutions and their effect on international relations. For example, Mearsheimer and Walt(2007) argue that Israel lobby groups influence U.S. foreign policy toward the Middle East in ways that are harmful for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for Israel; another realist Schweller(2006) points out that lack of social and elite cohesion produces under-balancing behaviors toward an external threat; Zakaria(1998) attributes the late rise of the United States as a global power to its society's strong influence on foreign relations. Which social actors contribute to, if not bring, inter-democratic peace? What effects do religious groups in and across democracies have on their countries' relation?

Accordingly, it would be worthwhile to develop and test a hypothesis linking common Christianity to interstate peace. Since the nineteenth

century, there has been an explosion of international Christian activities, movements, and organizations, based almost totally in democratic or democratizing states. If the democracies' elites and public view each other as brothers and sisters rather than competitors and enemies, they may be reluctant to support a decision for war but may instead prefer to maintain a conciliatory policy toward like-spirited states. Indeed, several previous, notable studies have examined how common religion matters in interstate conflict (Gartzke & Gleditsch 2006; Henderson 1998; Henderson & Tucker 2001). However, these studies have asked whether religious difference brings interstate conflict, but not whether religious similarity promotes interstate peace. Given that religions differ in their beliefs, histories, and transnational organizations, this study shifts the focus to which shared religion makes a (more) difference in avoiding conflict.

H1a: Christian dyads are less likely than others to participate in military conflict.

The effects of Christian faith on interstate relations can be distinguished from those of democratic systems by developing the preceding hypothesis and testing it based on valid and reliable measurements of religious identity. However, one may wonder whether other shared commitment to other religions, such as Islam or Buddhism, might have a similar effect. Another factor adding complexity to the issue is the existence of multiple subgroups of each major religion (e.g. Protestantism, Catholicism, Shia Islam, Sunni Islam). There were long and fierce wars between Protestants and Catholics in European history, and today there is strong animosity and competition between Shia and Sunni Muslims.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ich religious group members see which groups as brothers and sisters and as competitors and enemies. Thus, I develop another hypothesis proposing that sharing the same (sub)religion in general (not only Christianity) will lead to interstate peace. We may find the pacifying effects same (sub)religion has on dyadic relation, irrespective of each religion's own doctrine and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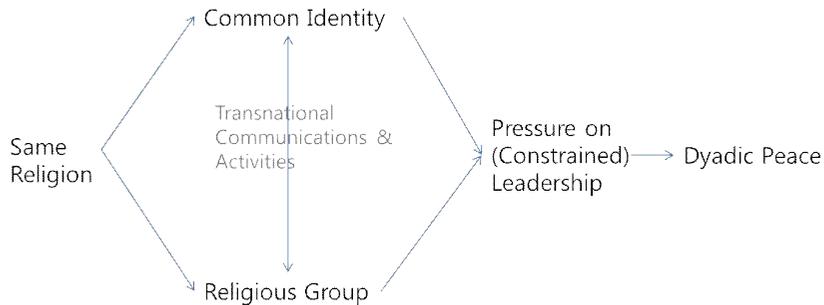
H1b: Same-(sub)religion dyads are less likely than others to participate in military conflict.

One potential objection to this study's approach stems from the existence of strong states relative to their societies. Even if there is a strong tie between two Christian societies, their governments may firstly seek national interests rather than follow Christian groups' demands. Whereas democratic leaders are accountable to their voters, leaders of autocracies often exploit public opinion and initiate foreign policies in search of political gains. Although there is disagreement over whether only democratic leaders suffer from domestic audience costs (Fearon 1994; Weeks 2008), domestically constrained leadership is more likely to represent domestic voices in making foreign policies. In this respect, Owen (1994) insists that only through democratic institutions can liberal elites affect their state's foreign policy in favor of liberal states. In accord with this perspective, I expect Christian states to be more likely to enjoy interstate peace when they have institutionalized constraints on political leadership. The effect of constrained leadership may also hold for same-religion dyads in general. Religious individuals and groups can affect their states' foreign relations by electing and pressuring their leaders. Domestically constrained leaders cannot easily go against the attentive public's preferences and desires in foreign affairs, especially in fateful decisions to engage in risky, costly military conflicts. The causal process suggested here is illustrated in Figure 1.

H2a: Christian dyads with constrained leadership are less likely than others to participate in military conflict.

H2b: Same-religion dyads with constrained leadership are less likely than others to participate in military conflict.

[Figure 1] Causal Process



This study acknowledges that religious groups have had increasing influence on international politics as they become transnational and globalized. In other words, globalization has strengthened transnational religious identities and solidarities with rapid and massive transfer of information, goods, service and individuals across borders. This is why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many scholars and policy-makers have paid attention to transnational networks, coalitions, and movements, suggesting the fading role of states in world politics (Haynes 2001; Khagram, Riker & Sikkink 2002). Although transnational religious groups like the Roman Catholic Church have existed for a very long time, many agree, their number and influence have increased dramatically reflecting the advancement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especially since the late twentieth century (Shani 2016: 300-303). In this regard, I expect that the pacifying effects of the same religion on dyadic relation, which are hypothesized above, become stronger in more recent years when transnational Christian and/or religious activities became more widely organized enough to affect general dyadic relations in international politics.

H3a: Christian dyads are less likely than others to participate in military conflict, especially in more recent years.

H3b: Same-(sub)religion dyads are less likely than others to participate in

military conflict, especially in more recent years.

H4a: Christian dyads with constrained leadership are less likely than others to participate in military conflict, especially in more recent years.

H4b: Same-religion dyads with constrained leadership are less likely than others to participate in military conflict, especially in more recent years.

IV. Research Design

To test the above hypotheses, I examine dyads from 1945 to 2001.¹⁾ To interpret whether sharing Christianity (or another religion) affects interstate relations, this study's unit of analysis is dyad-years. Using the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dataset(Ghosn, Palmer, & Bremer 2004), the dependent variable is coded as 1 if a dyad participated in a fatal militarized conflict in a given year and as 0 otherwise. If there was an ongoing conflict, it is coded as missing. In addition, I use dyadic participation in a militarized conflict, fatal or non-fatal, as the dependent variable in order to see whether the hypothesized effects of common religion and domestic constraints are found in the cases of all conflicts.

For the first independent variable, I measure each state's percentage of Christians, Protestants, Catholics, Muslims, Sunni, Shia, and Buddhists in the population in a given year, using the World Religion Data version 1.1(Maoz & Henderson 2013).²⁾ As Bove and Gokmen(2017) recently pointed out, most studies examining the effects of religious or cultural difference on interstate conflict are limited in that they measure the religion factor only with a dichotomous variable that is immutable for a dyad across time(Chiozza 2002; Henderson 1998, 2004; Henderson &

1) Due to the limited common period covered by the main datasets, including the World Religion Data and the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this study's empirical scope remains in the post-World War II period before 2002.

2) In this study, Protestant populations represent sums of the "Protestant" and "Anglican" population in the World Religion Data.

Tucker 2001; Russett, Oneal, & Cox 2000). Because the dataset gives information for every five years, I use each state's value in a given year for its cases of the next four years. Of the two values for each religious group in the two states in a given dyad-year, I use the lower score, following the weak-link assumption that most scholars of democratic peace theory have adopted in their empirical analyses.

The second independent variable is domestic constraints on leadership. For this, I use the Polity IV dataset's score of executive constraints, ranging from 1 to 7 (1: unlimited authority; 2: intermediate category; 3: slight to moderate limitation on executive authority; 4: intermediate category; 5: substantial limitations on executive authority; 6: intermediate category; 7: executive parity or subordination)(Marshall & Jaggers 2002). Again, the lower of the two scores for domestic constraints in each dyad is used for the analysis.

To examine the true effects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ir interaction on conflict participation, I control for the other influences of joint democracy, relative power, political similarity, economic interdependence, border, and distance. If each of the polity scores of two states in a dyad is equal to or greater than 6, the joint democracy variable is coded as 1; otherwise, it is coded as 0. Using the National Material Capability dataset's Composite Index of National Capabilities (CINC) scores (Singer, Bremer, & Stuckey 1972), I calculate the variable of relative power by taking the natural log of the higher CINC score divided by the lower score in a given dyad-year. Using a dataset from Hegre, Oneal, and Russett(2010), economic interdependence is calculated by dividing bilateral trade by each state's GDP in a given year. I use a lower one of economic interdependence scores of two states in a dyad. Using the EUGene program(Bennett & Stam 2000), I also measure whether two states shared a land border and how distant their capitals are from each other. Lastly, I include the variables of peace years, the number of years without military conflict, and the square and cube of the latter variable, following Carter and Signorino's(2010) guidance for the analysis of binary time-series datasets and using Beck, Katz, and

Tucker's(1998) STATA command. The results for the variables related to peace years are omitted due to space limitations.

V. Results and Discussion

In general, the logit analyses for the dyad-years provide strong support for the hypothesis linking common Christianity with interstate peace.³⁾ Whereas joint democracy has significant and negative effects on interstate conflict (Model F1), as summarized in Table 2, it is insignificant in the models that incorporate Christian or Catholic population variables (Models F2 and F4). The percentages of Christian, Protestant, and Catholic population have significant and negative effects on conflict initiation. The Islam and Sunni variable has negative and insignificant effects (0.1 level, Models F5 and F6), while the variables for Shia and Buddhist population are positive and insignificant (Models F7 and F8). The control variables show the expected effects on conflict participation: the dyads with more power parity, more economic interdependence, no land border, and greater distance between capitals are less likely to participate in fatal military conflict. The scores of least likelihood, AIC and BIC indicate that the model for general Christian population (Model F2) is the best fit and the models for Catholic and Protestant populations (Models F4, F3) are second- and third-best, respectively.

³⁾ To conduct statistical analyses, I use STATA/IC 11.2.

<Table 2> Logit Analysis of Fatal Conflicts

	DV: Fatal Conflict Onset							
	Model F1	Model F2	Model F3	Model F4	Model F5	Model F6	Model F7	Model F8
	b/se	b/se	b/se	b/se	b/se	b/se	b/se	b/se
<i>Democracy</i>	-0.693** 0.329	-0.291 0.292	-0.569* 0.317	-0.485 0.309	-0.726** 0.326	-0.697** 0.325	-0.634* 0.327	-0.635* 0.327
<i>Christianity</i>		-1.395*** 0.339						
<i>Protestant</i>			-3.583* 1.868					
<i>Catholic</i>				-1.183** 0.54				
<i>Islam</i>					-0.429 0.266			
<i>Sunni</i>						-0.497 0.327		
<i>Shia</i>							0.975 0.599	
<i>Buddhism</i>								0.719 0.443
<i>Relative Power</i>	-0.136* 0.073	-0.125* 0.071	-0.123* 0.072	-0.141* 0.072	-0.143** 0.072	-0.140* 0.072	-0.135* 0.073	-0.134* 0.073
<i>Economic Dependence</i>	-114.658*** 43.774	-95.535*** 37.34	-116.186*** 44.642	-114.000*** 43.005	-120.764*** 45.644	-118.853*** 44.89	-122.487*** 46.574	-120.049*** 46.399
<i>Border</i>	4.132*** 0.333	4.033*** 0.32	4.119*** 0.328	4.135*** 0.325	4.216*** 0.34	4.177*** 0.339	4.127*** 0.334	4.119*** 0.338
<i>Distance</i>	-0.357*** 0.121	-0.407*** 0.115	-0.365*** 0.117	-0.375*** 0.118	-0.351*** 0.119	-0.357*** 0.12	-0.361*** 0.122	-0.360*** 0.123
Constant	-4.157*** 0.962	-3.538*** 0.9	-4.010*** 0.926	-3.925*** 0.93	-4.116*** 0.938	-4.099*** 0.953	-4.126*** 0.971	-4.135*** 0.974
N	427697	426932	426932	426932	426932	426932	426932	426932
ll	-1687.717	-1651.779	-1667.729	-1664.901	-1670.014	-1670.737	-1671.744	-1671.333
aic	3393.435	3323.559	3355.459	3349.801	3360.028	3361.474	3363.488	3362.665
bic	3492.13	3433.203	3465.103	3459.445	3469.672	3471.118	3473.132	3472.309

Note: * .10; ** .05; *** .01; 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ed by Dyadid; Peace years, its square, and its cube are omitted to save space.

Does the result hold for cases of all conflict onset? According to the analyses of all conflicts summarized in Table 3 in the Online Appendix,

larger Christian, Protestant, and Catholic populations still have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conflict participation in the 0.05 or 0.01 significance levels (Models A2, A3, A4), whereas other religion-related variables, except for the variable for Islam population, have insignificant or positive effects (Models A6, A7, A8). The joint democracy variable loses its significance across all the models, including one which exclude any religion-related variable (Model A1). All directions of the coefficients for the control variables do not change. Still, the model for general Christian population is the fittest model according to the scores of least likelihood, AIC, and BIC.

To illustrate the effects of the Christian and Protestant variables, I calculate the predicted probabilities of conflict onset between two contiguous states not sharing a democratic system with Models F2, F3 and F4 (Figure 2-a, 2-b, 2-c in the Online Appendix). Whereas an increase in the Christian, Protestant, or Catholic population share from 0.1 to 0.9 decreases the probability of conflict by 66.81 percentages (from .0235 to .0078), increases in the Protestant and Catholic population share from 0.1 to 0.9 decrease the conflict risk by 93.99 percentages (.0183 to .0011) and by 60.62 percentages (0.2226 to .0089), respectively. In other words, the variables of Christian, Protestant and Catholic population have pacifying effects in the cases of post-World War II dyad-years, even when there are no effects of joint democracy.

Next, to test hypotheses 2a and 2b, I include the interaction terms between religious population and domestic constraints and their constituent terms in the statistical models (Models F9, F10, F11, F12, F13, F14, F15). As summarized in Table 4 in the Online Appendix, of the seven interactions, only those between Christian population and domestic constraint, Catholic population and domestic constraint have significant effects at the 0.01 level (Model F9) or the 0.1 level (Model F11). As expected, the interaction between Christianity and constraint (Christian*Constraint) seems to negatively affect dyadic conflict onset, whereas its two constituent coefficients - Christian and Constraint - are insignificant or positive. Interestingly, the coefficient for domestic

constraint (Constraint) is positive only in the Christianity-related models (Models F9, F10, F11). Logit analyses for the onset of all conflict also find negative but insignificant effects for the interaction between Christian/Catholic population and domestic constraint, whereas Christian and Protestant population share - Christianity, Protestant - have significant and negative effects (Model A9, A10 and A11 in Table 5 in the Online Appendix). Another interaction - Shia*Constraint - has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s (Model A14).

Following Brambor, Clark, and Golder (2006), I illustrate the marginal effects on the probability of conflict exerted by the two constituent terms in the interaction of Christian population and domestic constraints by using Model F9. Figure 3 in the Online Appendix shows the marginal effects of Christian population share (1% to 90%) across domestic constraints at 90% confidence intervals. According to the figure, the change in Christian population has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ly if there is "slight to moderate limitation on executive authority" or more (Constraint ≥ 3). Figure 4 in the Online Appendix illustrates the marginal effects of domestic constraints (1 to 7) for the range of possible Christian population shares at 90% confidence intervals. It shows that while domestic constraints have positive effects with a low Christian population share (10% or lower), they do not have pacifying effects across all the range. These graphs provide support for the hypothesis that the presence of a Christian population affects policymaking toward making peace with like-spirited states, along with weak support for the idea that democratic institutions can bring peace with fellow democracies through constraining both leaderships.

To test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on religion and interstate conflict, I include a year variable (Year) in the models and see how this affects the result. While the coefficient for year has negative effects on fatal or all conflict onset across seven models (F16, F17, F19, A16, A17, A18, A19), Christian, Protestant, and Catholic population share still hold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s (Table 6 in the Online Appendix). Considering the inclusion of the year variable changes

neither the absolute values of the coefficients nor the scores of least-likelihood, AIC, and BIC,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conflict do not change drastically in the post-World War II period before 2002.

Lastly, I conduct three robustness checks. First, I measure common religion in different ways and run the same model as used above. Following the weak-link assumption, I previously used the lower score for a certain religion's population share in a dyad. But there can be other valid and reliable measurements of common religion in a dyad(Lewer & Van den Berg 2007). Therefore, in the robustness check, I use the mean of the two scores of Christian, Protestant, or Catholic population share in a given dyad-year (Models R1, R2, R3 in Table 7 in the Online Appendix) or a product of the two (Models R4, R5, R6) and analyze the effect of these variables on dyadic fatal conflict. Across these models, Christian population share has negative effects in the 0.01 significance level, while the coefficient for joint democracy is negative but insignificant. Second, I conducted rare events logit analyses considering the rareness of this study's dependent variable(King & Zeng 2001; Models R7, R8, R9). The result also shows negative and significant effects of Christian, Protestant, and Catholic population share on dyadic participation in fatal conflict. Third, I compare the explanatory powers of joint democracy and joint Christianity (Christianity, Protestant, or Catholic) by including either one in the statistical model. As summarizing in Table 8 in the Online Appendix, the effects on fatal conflict of Christian population are negative and significant irrespective of using a lower or a mean of the religious population share values. Also, the AIC and BIC scores of the statistical models including the Christian, Protestant, or Catholic population variable are smaller than those of the models having the democracy-related variables (lower or average Polity scores in dyad-years).

VI. Conclusion

Religion matters in international politic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international relations scholars have expanded their interests to non-system-level factors, including regime type, domestic unrest, risk orientation, and leaders' personality and experience. However, religion-related factors should be more carefully examined as well, as part of these efforts to diversify and add sophistication to IR theories. Since Huntington's (1996) clash of civilizations thesis and the 9/11 attacks, some have delved seriously into the effect of religion on conflict onset and duration, but only a few systematically analyze how religion similarity affects interstate cooperation and alliance politics.

This study has hypothesized that common Christianity brings peace and finds some empirical support for it. In the model including common democracy, Christian population still has pacifying effects on dyadic peace whereas joint democracy loses its significance. How can we explain this study's finding that Christianity has stronger and more significant effects than democracy? Why does having a shared Christian population matter more in dyadic conflict than other religious commonalities? This study argues IR scholars should seriously take into account religious factors to provide a more satisfactory explanation on dyadic peace among democracies, emphasizing transnational religious identities and actors and their influence on foreign policy. It also raises many questions that deserve careful examination to further ou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international politics.

One issue to note is that the effects of Christian, Protestant, and Catholic religiosity are not fixed across time and space. Even looking at a single variable such as Christian population share, we may see its different effects on interstate peace, in terms of direction and degree, depending on the time period or geographic area considered. Accordingly, it would be useful to examine cases of interstate relations in more recent years after the 9/11 attacks and before the two world wars when the

nuclear weapons had not yet been used, a bipolar system of international relations did not exist, transnational religious movements had not emerged, serious confrontations between Protestant and Catholic believers occurred. Although this study used the Christian and other religion's share of a country's population as its main variable, there can be more valid and reliable ways to quantifying religion by examining other state-/dyad-level factors, such as the political leader's religion, the number and influence of religious groups, and interstate religious organization and communication(Fox & Sandler 2003; Henderson 1997: 657-662).

Deeper qualitative analyses can provide more information and evidence for causal inferences linking Christianity to peace. One promising case is Anglo-U.S. relations in th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ies, which have attracted academic attention especially from scholars seeking to specify the conditions for peaceful power transition between great powers. Indeed, it is a puzzle why there were no serious military conflicts during and after the Civil War. While there are some answers emphasizing normative concerns and domestic procedures(Little 2007; Thompson 2007), future research needs to analyze how their religious identities affected the great power transition. Their share of Protestant population and the revival movements that took place in those countries might be one of the factors helping them to avoid a hegemonic war.

References

- Alexander, Kathryn J. 2017. "Religiosity and Bellicosity: The Impact of Religious Commitment on Patterns of Interstate Conflict." *Journal of Global Security Studies* 2(4), 271-87.
- Amstutz, Mark R. 2014. *Evangelicals and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eck, Nathaniel, Katz, Jonathan N., and Richard Tucker. 1998. "Taking Time Seriously in Binary Time-Series Cross-Section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2(4), 1260-1288.
- Bennett, D Scott. 2006. "Toward a Continuous Specification of the Democracy - Autocracy Connec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0(2), 313-338.
- Bennett, D. Scott and Allan C. Stam. 2000. EUGene: A Conceptual Manual. *International Interactions* 26(2): 179-204. Website: <http://eugenesoftware.org>.
- Bove, Vincenzo and Gunes Gokmen. 2017. "Cultural Distance and Interstate Conflict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7(4), 939-949.
- Brambor, Thomas, William Roberts Clark, and Matt Golder. 2006. "Understanding Interaction Models: Improving Empirical Analyses." *Political Analysis* 14(1), 63-82.
- Brown, Davis. 2016. "The Influence of Religion on Interstate Armed Conflict: Government Religious Preference and First Use of Force, 1946 - 2002."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55(4), 800-20.
- Brown, Michael Edward, Sean M. Lynn-Jones, and Steven E. Miller, eds. 1996. *Debating the Democratic Peace*. Cambridge: MIT Press.
- Bueno de Mesquita, Bruce, James D. Morrow, Randolph M. Siverson, and Alastair Smith. 1999. "An Institutional Explanation of the Democratic Pea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4), 791-807.
- Carter, David B. and Curtis S. Signorino. 2010. "Back to the Future: Modeling Time Dependence in Binary Data." *Political Analysis* 18(3), 271-292.
- Carwardine, Richard. 1978. *Transatlantic Revivalism: Popular Evangelicalism in Britain and America, 1790-1865*. Praeger.

- Chiozza, Giacomo. 2002. "Is There a Clash of Civilizations? Evidence from Patterns of International Conflict Involvement, 1946-97." *Journal of Peace Research* 39(6), 711-734.
- Dahl, Robert A. 1971.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Doyle, Michael W. 1983.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hilosophy & Public Affairs* 12(3), 205-235.
- Farber, Henry S. and Joanne Gowa. 1995. "Politics and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20(2), 123-146.
- Fearon, James D. 1994. "Domestic Political Audiences and the Escalation of International Dispu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3), 577-592.
- Fox, Jonathan. 2002. "Ethnic Minorities and the Clash of Civilizations: A Quantitative Analysis of Huntington's Thesi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3), 415-434.
- Fox, Jonathan and Shmuel Sandler. 2004. *Bringing Religion into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Springer.
- Fox, Jonathan and Shmuel Sandler. 2003. "Quantifying Religion: Toward Building More Effective Ways of Measuring Religious Influence on State-level Behavior." *Journal of Church and State* 45(3), 559-88.
- Gartzke, Erik. 2007. "The Capitalist Pea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1), 166-191.
- Gartzke, Erik, and Kristian Skrede Gleditsch. 2006. "Identity and Conflict: Ties that Bind and Differences That Divid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2(1), 53-87.
- Gartzke, Erik and Alex Weisiger. 2013. "Permanent Friends? Dynamic Difference and the Democratic Peac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7(1), 171-185.
- Ghosn, Faten, Glenn Palmer, and Stuart Bremer. 2004. "The MID3 Data Set, 1993-2001: Procedures, Coding Rules, and Description."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21(2), 133-154.
- Gleditsch, Nils Petter, and Hegre, Håvard. 1997. "Peace and Democracy: Three Levels of Analysi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1(2),

283-310.

- Haynes, Jeffrey. 2001. "Transnational Religious Actors and International Politics." *Third World Quarterly* 22(2), 143-158.
- Haynes, Jeffrey. 2009. "Transnational Religious Actors and International Order." *Perspectives* 17(2), 43-69.
- Hegre, Håvard, John R Oneal, and Bruce Russett. 2010. "Trade Does Promote Peace: New Simultaneous Estimates of the Reciprocal Effects of Trad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47(6), 763-774.
- Henderson, Errol A. 2009. "Disturbing the Peace: African Warfare, Political Inversion and the Universality of the Democratic Peace Thesi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9(1), 25-58.
- Henderson, Errol A. 2004. "Mistaken Identity: Testing the Clash of Civilizations Thesis in Light of Democratic Peace Claim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4(3), 539-554.
- Henderson, Errol A. 1998. "The Democratic Peace through the Lens of Culture, 1820-1989."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2(3), 461-484.
- Henderson, Errol A. 1997. "Culture or Contiguity: Ethnic Conflict, the Similarity of States, and the Onset of War, 1820-1989."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1(5), 649-68.
- Henderson, Errol A. and Richard Tucker. 2001. "Clear and Present Strangers: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International Conflic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5(2), 317-338.
- Henne, Peter S. 2012. "The Two Swords: Religion - State Connections and Interstate Disputes." *Journal of Peace Research* 49(6), 753-768.
- Hermann, Margaret G. and Charles W. Kegley, Jr. 1995. "Rethinking Democracy and International Peace: Perspectives from Political Psycholog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9(4), 511-533.
- Horowitz, Michael C. 2009. "Long Time Going: Religion and the Duration of Crusading." *International Security* 34(2), 162-193.
- Huntington, Samuel P. 1996.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Simon & Schuster.
- Jenkins, Philip. 2002. "The Next Christianity." *The Atlantic Monthly* 290(3),

53-68.

- Johns, Robert and Graeme AM Davies. 2012. "Democratic Peace or Clash of Civilizations? Target States and Support for War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olitics* 74(4), 1038-1052.
- Johnson, Ian. 2017. "China's Great Awakening: How the People's Republic Got Religion." *Foreign Affairs* 96(2), 83-95.
- Kang, David C. 2010. "Hierarchy and Legitimacy in International Systems: The Tribute System in Early Modern East Asia." *Security Studies* 19(4), 591-622.
- Kaufmann, Chaim D. and Robert A Pape. 1999. "Explaining Costly International Moral Action: Britain's Sixty-Year Campaign against the Atlantic Slave Trade." *International Organization* 53(4), 631-668.
- Kelly, Robert E. 2012. "A 'Confucian Long Peace' in Pre-Western East Asia?"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8(3), 407-430.
- Khagram, Sanjeev, Riker, James V., and Sikkink, Kathryn. 2002. *Restructuring World Politics: Transnational Social Movements, Networks, and Norm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King, Gary and Langche Zeng. 2001. "Logistic Regression in Rare Events Data." *Political Analysis* 9(2), 137 - 163.
- Levy, Jack S. 1994. "The Democratic Peace Hypothesis: From Description to Explanation." *Mersho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38(2), 352-354.
- Lewer, Joshua. J. and Hendrik Van den Berg. 2007. "Religion and International Trade: Does the Sharing of a Religious Culture Facilitate the Formation of Trade Networks?"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66(4), 765-794.
- Little, Richard. 2007. "British Neutrality versus Offshore Balancing in the American Civil War: The English School Strikes Back." *Security Studies* 16(1), 68-95.
- Mansfield, Edward D. and Jack Snyder. 2005. *Electing to Fight: Why Emerging Democracies Go to War*. Cambridge: MIT Press.
- Maoz, Zeev and Errol A Henderson. 2013. "The World Religion Dataset, 1945 - 2010: Logic, Estimates, and Trends." *International Interactions* 39(3), 265-291.

- Maoz, Zeev and Bruce Russett. 1993. "Normative and Structural Causes of Democratic Peace, 1946-1986."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3), 624-638.
- Marshall, Monty G. and Keith Jaggers. 2002. Polity IV Project: Political Regime Characteristics and Transitions, 1800-2002. Version p4v2002e. <http://www.systemicpeace.org/inscrdata.html> (accessed 24 October, 2019).
- Mearsheimer, John J. and Stephen M. Walt. 2007. *The Israel Lobby and U.S. Foreign Polic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Moravcsik, Andrew. 1997. "Taking Preferences Seriously: A Liber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1(4), 513-553.
- Mousseau, Michael. 2000. "Market Prosperity, Democratic Consolidation, and Democratic Pea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4(4), 472-507.
- O'Brien, Susan. 1986. "A Transatlantic Community of Saints: The Great Awakening and the First Evangelical Network, 1735-1755." *American Historical Review* 91(4), 811-832.
- Oren, Ido and Jude Hays. 1997. "Democracies May Rarely Fight One Another, but Developed Socialist States Rarely Fight at All." *Alternatives* 22(4), 493-521.
- Owen, John M. 1994. "How Liberalism Produces Democratic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19(2), 87-125.
- Peceny, Mark, Caroline C. Beer, and Shannon Sanchez-Terry. 2002. "Dictatorial Pea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1), 15-26.
- Petito, Fabio, and Pavlos Hatzopoulos, eds. 2003. *Relig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Return from Exile*. New York: Springer.
- Philpott, Daniel. 2002. "The Challenge of September 11 to Secular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World Politics* 55(1), 66-95.
- Preston, Andrew. 2012. *Sword of the Spirit, Shield of Faith: Religion in American War and Diplomacy*. New York: Anchor Books.
- Rasler, Karen and William R. Thompson. 2004. "The Democratic Peace and a Sequential, Reciprocal, Causal Arrow Hypothesi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7(8), 879-908.
- Rosato, Sebastian. 2003. "The Flawed Logic of Democratic Peace Theory."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7(4), 585-602.
- Rudolph, Susanne Hoeber, and Piscatori, James P., eds. 1997. *Transnational Religion and Fading States*. New York: Westview Press.
- Russett, Bruce M., John R. Oneal, and Michaelene Cox. 2000. "Clash of Civilizations, or Realism and Liberalism Deja Vu? Some Evidence." *Journal of Peace Research* 37(5), 583-608.
- Schultz, Kenneth A. 1998. "Domestic Opposition and Signaling in International Cris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829-844.
- Schweller, Randall L. 2006. *Unanswered Threats: Political Constraints on the Balance of Pow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ah, Timothy Samuel and Monica Duffy Toft. 2006. "Why God is Winning." *Foreign Policy* 155, 38-43.
- Shah, Timothy Samuel, Alfred Stepan, and Monica Duffy Toft, eds. 2012. *Rethinking Religion and World Affai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hani, Giorgio. 2016. "Transnational Religious Actor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Jeffrey Haynes (ed.), *Routledge Handbook of Religion and Politics*. second edition. London: Routledge.
- Shin, Chan Woong. 2014. "America's New Internationalists? *Evangelical Transnational Activism and US Foreign Policy*. PhD Dissertation, Syracuse University.
- Singer, J. David, Stuart Bremer, and John Stuckey. 1972. "Capability, Distribution, Uncertainty, and Major Power War, 1820-1965." in Bruce M. Russett (ed.), *Peace, War, and Numbers*. Beverly Hills: Sage.
- Snyder, Jack ed., 2011. *Relig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obek, David, M Rodwan Abouharb, and Christopher G. Ingram. 2006. "The Human Rights Peace: How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at Home Leads to Peace Abroad." *Journal of Politics* 68(3), 519-529.
- Thompson, Peter. 2007. "The Case of the Missing Hegemon: British Nonintervention in the American Civil War." *Security Studies* 16(1), 96-132.

- Warner, Carolyn M., and Stephen G. Walker. 2011. "Thinking about the Role of Religion in Foreign Policy: A Framework for Analysis." *Foreign Policy Analysis* 7(1), 113-135.
- Weeks, Jessica L. 2008. "Autocratic Audience Costs: Regime Type and Signaling Resolve." *International Organization* 62(1), 35-64.
- Wu, Joshua Su-Ya and Austin J Knuppe. 2016. "My Brother's Keeper? Religious Cues and Support for Foreign Military Intervention." *Politics and Religion* 9(3), 537-565.
- Wuthnow, Robert. 2009. *Boundless Faith: The Global Outreach of American Church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Yoon, Young Hwi. 2012. "The Spread of Antislavery Sentiment through Proslavery Tracts in the Transatlantic Evangelical Community, 1740s - 1770s." *Church History* 81(2), 348-377.
- Zakaria, Fareed. 2003. *The Future of Freedom : Illiberal Democracy at Home and Abroad* New York: W.W. Norton & Co.
- Zakaria, Fareed. 1998. *From Wealth to Power: The Unusual Origins of America's World Rol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국문요약

종교 정체성과 민주평화론

정성철 ■ 명지대학교

1990년대 이후 국제정치학자들은 민주국가가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민주평화론을 둘러싼 논쟁과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의 종교 정체성을 통하여 민주국가 간 협력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세계종교데이터(World Religion Data)를 통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쌍 내 기독교, 이슬람, 불교 등의 종교 유사성을 살펴본 후 국가 간 분쟁의 발발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독교, 개신교, 가톨릭 인구의 비율이 분쟁의 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민주정치 제도가 자리 잡은 경우 더욱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했다. 향후 민주국가 간 협력과 평화에 대한 연구는 정치제도와 경제 이익 뿐 아니라 정체성과 초국가 행위자를 아우르는 풍부한 이론적 탐색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민주평화, 국제분쟁, 종교, 국제정치, 기독교

한국의 다면영상공연에 관한 연구 - 관람만족도와 재관람의도를 중심으로

신예지 ■ 공연기획 프리랜서*

이호배 ■ 홍익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연구가설 1(다면영상공연의 특성 즉 가격적합성, 접근성, 오락성, 현장성이 관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락성과 현장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만, 가격적합성과 접근성은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2(다면영상공연의 특성이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결과도 관람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오락성과 현장성은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만, 가격적합성과 접근성은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3(다면영상공연의 특성이 관람만족도를 매개해서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격적합성은 관람만족도를 매개해서만 재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의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접근성, 오락성, 그리고 현장성은 만족도를 매개해서 재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접 재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서 관람만족도의 부분매개 효과를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 영상공연의 한계인 현장성이 다면영상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다면영상공연의 기회 확장과 잠재 고객의 유치에 긍정적이다.

둘째, 현장성 뿐만 아니라 오락성도 만족도와 재관람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특성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관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오락적 요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현재 다면영상공연의 주된 관객이 주로 20대 여성 대학생층이 주 표적시장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향후 K-pop, 한류, 그리고 최근 '기생충' 영화의 아카데미상 수상 등 한국적 문화를 활용해서 저변 잠재 시장을 해외 관객들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주제어: 관람만족도, 재관람의도, 다면영상공연, 가격적합성, 오락성, 접근성, 현장성

* 주저자. 공연기획 프리랜서, 홍익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 석사
(E-mail: sks959377@naver.com)

** 교신저자.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E-mail: hblee@hongik.ac.kr)

I. 서 론

최근 공연 예술분야에서도 정보기술과 미디어의 융합을 통해 예술을 새로운 형태로 확장시켜서 일반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어디서나 예술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영상산업과 공연예술 분야가 융합하여 공연영상이라는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공연영상이라는 용어는 대부분 순수 공연예술의 교육용이나 기록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관객개발의 목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김자은(2016)은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이 융합되어 기존 공연예술의 단점을 보완할 영상콘텐츠로 재생산되고 있다고 하였다. 공연영상 콘텐츠(이후에는 '공연영상'으로 쓰겠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즐기는 콘텐츠가 되었다. 이것은 공연의 고유특성인 일회성(공연예술에서는 같은 공연이라도 항상 다르기 때문에 일회성이 존재)과 현장성(공연예술에서는 공연영상을 즐길 때 기존 공연에서 느낄 수 있는 즉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성질)의 한계를 해결했다. 그러나 기존의 공연영상은 스크린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실제 공연장에서 느낄 수 있는 생동감이나 몰입도와 같은 현장감을 느끼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한 다면영상공연 콘텐츠(이후에는 '다면영상공연'으로 쓰겠음)가 등장하게 되었다. 다면영상공연은 맵핑을 통해 3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한 기법으로 기존의 스크린 영상보다 더 생동감 있는 화면과 몰입도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러한 공연예술의 변화에 따라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유경(2018)은 국내외 공연예술 영상화 사례를 통해 공연예술을 영상화하여 생산되는 영상 콘텐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다. 진윤희(2017)는 국내외 공연영상화 사례를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제작자와 배급자 관점에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예지(2016)는 공연영상의 여러 특성요인을 분류해서 관람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황순기(2015)는 MVP시스템을 개발하여 보다 더 수준 높은 제작과 보관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런 기존 연구들은 사례를 통해 공연예술콘텐츠의 활성화 즉 비즈니스화에 관한 질적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공연영상 콘텐츠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관객 만족도에 대한 계량적 검증을 한 연구는 미비하다. 또한 오프라인 공연의 특성인 관객의 몰입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 또한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장감에 초점을 맞춘 다면영상공연에 대한 만족도를 실제 관객들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한다.

공연영상은 많은 관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 이유로 관람하지 못했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공연영상을 관람한 관람객들은 좋은 공연을 저렴하게 관람하는 것은 만족하지만 공연 현장에 있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어서 아쉬워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한계점을 다면영상공연을 통해서 해결가능한 지를 타진하여 공연영상을 더욱 발전시켜서 문화산업의 확대와 보편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는 다면영상공연의 콘텐츠가 국내 콘서트로 국한되어 있지만 다면영상공연이 활성화되어서 전통공연, 순수공연에도 적용할 수 있어서 국내 및 해외 공연시장의 새로운 수익창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공연영상

1) 공연예술의 특성

공연예술은 무형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연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보거나 느끼거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즉 공연은 일회성을 가진 서비스 제품이고 공연을 보면서 만족을 느끼는 것도 개인마다 다르다.

공연이라는 서비스 제품은 직접 관람을 하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험재(experience goods)이다. 경험재는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개인의 기호를 형성한 후에 자발적인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람객들은 직접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거나 본인이 전에 경험했던 관람 경험으로 공연을 선택하게 된다(진윤희 2017). 그래서 처음 공연을 접하는 관객은 자신의 기호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얻어야 하는 정보가 많아 소비 진입장벽이 높다.

이러한 공연예술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김설희 2011; 김윤철 1989).

첫째, 실연이다. 관객과 출연자는 공연을 관람할 때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공연에 대한 환호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공연에 참여한다.

둘째, 일회성이다. 공연예술은 공연과 동시에 없어지는 소멸성을 갖고 있다. 즉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서 공연하기 때문에 시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예

술이다.

셋째, 집단성이다. 공연예술은 많은 스텝과 출연진 등 여러 사람들이 오랜 시간동안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끝으로, 현장성이다. 살아 있는 창조자와 관객이 같은 장소에 존재함으로써 강렬한 감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2) 공연영상의 출현배경

인쇄문화에서 영상문화로 변화하면서 공연예술도 영상매체의 도입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서 있고, 다른 매체들과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

최근에 콘텐츠산업이 발전 동력으로 강조되면서 이러한 콘텐츠산업과의 융합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로 문화예술을 들 수 있다(이용관 2012).

이런 추세에 따라서 공연예술이 공연영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김자은 2017). 영상콘텐츠는 영상과 콘텐츠의 합성어이다. 콘텐츠는 여러 예술작품을 매체를 통해 표현하여 전달하는 제품으로 정의된다(인문콘텐츠학회 2006). 따라서 영상 콘텐츠는 예술작품을 영상 매체를 통해 표현되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제품이다. 공연영상은 공연예술에 대한 가치 콘텐츠를 통해 지속되어서 많은 관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연영상을 '공연이라는 예술작품을 영상콘텐츠라는 매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제품으로서의 공연'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공연예술은 공연장에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영상콘텐츠가 새로운 형태의 공연장을 마련해 주었다. 공연영상을 통해서 시공간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공연예술이 디지털 영상기술을 통해 기존의 공연장에서 벗어나 영화관, 웹 등 새로운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김선영 2017).

3) 공연영상의 특성

앞에서 언급한 공연예술의 특징들인 일회성, 소멸성, 현장성은 공연 현장에서만 갖는 특성인데 오히려 이런 특성들이 공연예술의 관람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공연 영상은 공연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소멸성을 극복해서 관객에게 새로운 형태의 공연 관람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김어진 2015). 또한 실황중계영상을 통해 현장감도 전달할 수 있어서 관객들과 출연진 사이에 유대감 형성을 가능하게 하면서 시공간의 경계

를 확장시켰다. 한편 공연가격은 제작비나 유통을 통해 종합적으로 결정되는데, 관객들은 관람한 공연예술에 비례하여 가치의 대가를 지불한다. 그런데 공연영상은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을 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황순기 2015). 이와 같이 공연영상은 기존 오프라인 공연보다 저렴한 가격적합성, 영상콘텐츠의 정보나 장소에 대한 접근성, 관람이라는 체험을 통해 즐거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오락성, 그리고 현장성을 충족시킨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공연영상콘텐츠의 특성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1) 가격적합성

윤유정(2015)은 가격이 공연예술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공연예술은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 공연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연예술을 콘텐츠화 하게 된다면 기존에 촬영한 공연 촬영물로 수익을 계속 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연예술의 주요 관객은 상위계층이라는 제한된 시장이지만, 다양한 미디어와 콘텐츠의 융합으로 가격이 낮아지면서 고급 공연예술의 관람 시장이 더 커지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고급예술이 더이상 계층에 따라 관람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정영찬 2014), 공연 콘텐츠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공적 가치도 있다(황순기 2015). 또한 일회성과 특정 공연장이라는 한정된 장소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던 기존 공연과 달리 공연영상은 저렴한 가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하나의 공연을 무대에 올리기까지 출연진부터 연출진까지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 공연예술의 제작비의 40%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된다. 이러한 제작비나 유통 때문에 공연예술의 가격은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가격은 소비자가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태도가 형성 되어 구매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이다(Zeithaml 1984). 관객의 입장에서 미리 평가할 수 없는 무형의 공연제품에 대해 선불로 지불하는 행위는 높은 구매위험을 갖는다(한윤희 2007). 그러므로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연이 영상 콘텐츠화 된다면 유통 단계를 축소하여 동일한 공연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관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이예지 2016), 같은 공연이라면 가격이 저렴한 공연을 관람할 의도가 높다(최태규 2011). 한윤희(2007)는 공연영상은 가격이 저렴해서 금전적 부담을 낮추어서 잠재 관객들을 유인할 수 있고 재관람의도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2) 접근성

유형 제품은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하고 나중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하지만, 서비스 제품은 판매와 동시에 소비가 시작되는 것이다. 공연예술도 서비스 제품이기 때문에 비분리성 특징을 가지게 된다(Zeithaml, et al. 1996). 공연예술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관객들은 공연장으로 찾아가서 정해진 시간에 공연을 관람해야 한다. 그리고 공연예술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연시간 동안 공연을 관람해야 한다(최태규 2011). 반면에 영화관은 관람객들에게 기존의 공연(뮤지컬, 연극, 오페라, 콘서트 등)과 비교하여 어디서나 관람을 할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한다(이예지 2016). 이와 같이 공연영상이 등장하면서 관객들은 본인의 편한 시간에 맞춰 가까운 곳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김우철·이유재(1998)은 공간의 접근성이 관람객들에게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간의 접근성 외에 정보의 접근성도 강조하였다.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 관객들은 지인, 인터넷, 광고 등 여러 곳에서 정보를 얻기를 원한다. 기존의 공연은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가 비교적 쉽다. 그러나 공연영상의 경우 아직 대중적으로 생소하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 쉽지 않다. 공연영상은 주로 영화관, 특정 상영관에서 상영하지만 홍보가 잘되지 않아 많은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한다.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공급이 쉽지 않다. 따라서 공연 자체가 경험제이므로 정보의 접근성이 공연영상을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관객 본인이 경험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3) 오락성

공연영상은 멀티미디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고화질과 고음질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오락적 요소를 강화하여 기존 매체와는 다른 유희성을 갖는다.

김예희(2015)는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체험이라 정의하고 그 체험을 통하여 자신도 모르게 유희적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관객들은 공연영상의 관람을 통해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체험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즐거움을 느끼는 이유는 공연영상은 공연을 콘텐츠라는 영상매체와 융합한 멀티미디어 환경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Perse & Durn 1998). 이러한 환경 속에서 관객들이 공연영상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영상은 영상을 제공하는 매체로서 멀티미디어를 기반으로 활용하여 사용자들의 오락적 요소를 강화한다. 또 다면영상공연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공연영상 콘텐츠이기 때문에 관객들은 새로움을 느끼게

된다. 관객들은 새로움을 통해서 또 다른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4) 현장감

공연예술은 관객들이 현장에 가서 공연을 즐기고 그 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만족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공연영상은 공연예술을 스크린을 통해 관람하기 때문에 현장감을 느끼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공연영상은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공연예술을 즐길 수 있지만 현장에서 공연자와 관객의 상호작용이 없어서 예술적 감동이 감소한다(이유경 2018).

그런데 다면영상공연은 기존 공연영상과 달리 현장에서 느끼는 현장감을 공연영상을 통해 느낄 수 있다. 기존의 한 면의 스크린이 아닌 가상현실 기반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다면영상공연으로 공연예술을 관람할 때 관객들은 실제로는 특정 장소에 있지 않아도 그 현장에 있다는 심리적 느낌을 갖게 한다. 이런 것을 현존감이라 하는데 현장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동훈·양호철(2012)은 3D영상을 관람할 때 몰입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한다면서, 그중 하나인 현존감을 4가지(공간관여, 시간관여, 몰입실재감, 몰입역동감)로 구분하였다. 즉, 영상 콘텐츠를 관람할 때 그 영상에 빠져드는 공간관여,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시간관여, 영상을 보는 동안 영상안의 화면에 몰입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인 몰입실재감, 그리고 영상 공간에 빠져 자연스럽게 몸을 흔들고 움직이고 있다고 느끼는 몰입 역동감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현존감 특성이 본 연구에서 다면영상공연을 관람할 때 느끼는 현장성으로 볼 수 있다.

현장감도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공연영상을 관람할 때 현존감을 느껴야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공연영상을 관람할 때 공연영상에 빠져있어 시간이 빠르게 가는지 느끼지 못하고 화면이 실재하는 것이라 느끼는 감정을 현장감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다면영상공연

1) 다면영상공연의 개념

기존의 공연영상은 한 개의 스크린을 통해서 공연을 관람하기 때문에 현장에 있다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다. 단지 공연을 영화처럼 관람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국 국립극장(The Royal National Theatre: RNT)는 공연영상이 실제 공연을 대체될 수 없다고 하였다. 대신에 공연영상은 잠재적으로 '수준 높

은 2등급의 경험을 제공한다 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극장으로 공연을 관람하러 올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NESTA 2011).

공연영상의 초기에는 공연장을 벗어난 공간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어서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공연영상 콘텐츠가 활성화되고 많은 곳에서 향유할 수 있게 되면서 관객들은 공연의 질에 대한 더 큰 만족을 찾게 된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다면영상공연이다. 다면영상공연은 기존에 1면의 스크린이 아니라 여러 개의 스크린을 이용하여 관객들에게 몰입감을 강화하는 형식의 콘텐츠이다. 스크린을 2개 이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람객의 시야 범위를 포위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관람 체험을 선사하게 되는 것이다(최양현·조성민 2015). 이렇게 복수 스크린을 사용하는 이유는 관람객들에게 몰입감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5.1 채널 형식의 사운드가 관객을 서라운딩하는 효과와 유사하다.

다면영상의 역사는 1950년 할리우드에서 텔레비전의 등장으로 인해 영화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을 생각해 고안해낸 시네라마라는 기술로 시작한다.¹⁾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만족을 주었지만 기술의 어려움으로 인해 반짝 인기를 얻은 후 사라진 후, 현대에 발전한 기술에 의해 다면영상이 다시 인기를 얻게 되었다. 벨기에의 유명 프로젝트업체인 바코(Barco)는 2014년 이스케이프(Escape)를 개발해 대중에게 공개했다. 이 기술은 3개의 스크린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투사하는 방법이다. 이 기술이 적용된 영화 <메이즈러너>는 미국에서 이스케이프 전용 상영관 5곳에서 개봉하였다. 다면영상공연은 이외에도 전시, 공연 등 여러 예술 분야에 먼저 보급되어 활용하고 있다. 독일의 쿨럭스(Coolux), 스웨덴의 워치아웃(Watchout)의 프로그램을 통해 스크린에 투사되는 여러 개의 이미지를 압축하여 통합시키는 작업을 하여 영상을 다면으로 구현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다면영상의 기술이 개발되었는데 2013년 CGV와 카이스트(KAIST) 문화기술대학원의 노준용 교수 연구팀과 함께 스크린X를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기존의 이스케이프와는 조금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스크린X는 정면의 스크린 한 개와 양 옆벽에 스크린을 투사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따로 전용관이 필요하지 않다. 모든 상영관에서 스크린X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따로 전용관이 없이도 기존의 상영관에서 다면영상공연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다면 관람객에게 더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관객들이 저렴한 가격에 높은 수준의 공연을 기존보다 더 몰입감있게 관람할 수 있다.

1) 3대의 특수 영사기를 동시에 가동하여 세 방향에서 영사함으로써 화면의 뛰어난 입체감을 살림과 동시에 6분사운드 트랙으로 완전한 입체음향을 재현시킨 영화기법 (<https://terms.naver.com/alikeMeaning.nhn?query=E00194881>. 2019/11/10 검색)

그러나 다면영상공연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기 때문에 아직 대중적이지 못하고 공연의 종류도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되어있다.

2) 다면영상공연의 사례

국내에서 다면영상공연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은 CGV 스크린X와 SM THEATRE 서라운드 뷰이다. CGV는 스크린X를 개발해 많은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주로 공연실황 영화가 스크린X를 통해 상영되었다. 가장 큰 인기를 얻은 가수 퀸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BTS의 월드투어 공연실황영화인 ‘러브 유어셀프 인 서울’이 있다([그림 1]과 [그림 2] 참조).

‘러브 유어셀프 인 서울’의 경우 2019년 01월 26일 개봉하였고 약 34만명이 관람하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러브 유어셀프 인 서울’은 스크린X관이 큰 인기를 얻었는데 그 이유는 스크린X를 통해 더 공연에 몰입감을 얻을 수 있고 응원봉을 흔들고 같이 환호를 하며 영화관에서 공연을 관람하지만 공연장에 있는 듯한 현장감의 느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공연의 가격보다 저렴한 티켓으로 때문에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였던 팬, 다시 공연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팬, 그리고 팬은 아니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초기 관객까지 이끌게 되었다(최태규 2011).

[그림 1] 러브유어셀프 인 서울 포스터(왼쪽), 보헤미안 랩소디 포스터(오른쪽)



출처: 러브유어셀프 인 서울(왼쪽), 보헤미안 랩소디(오른쪽)

[그림 2] 스크린X로 상영하는 러브유어셀프 인 서울



출처: 러브유어셀프 인 서울

다음 사례로는 SM THEATRE 서라운드 뷰잉이다.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영화관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서라운드 뷰잉은 270도의 화면을 통해 관객을 서라운드 즉 포위하는 것처럼 둘러싸아서 몰입감을 높이는 콘텐츠이다(<https://www.smtownland.com>). 서라운드 뷰잉은 기존 스크린에 옆면스크린까지 활용해 스크린이 넓어져 무대를 직접 관람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서라운드 뷰잉은 국내이외에도 해외공연장에서도 즐길 수 있다.

슈퍼주니어 D&E의 일본 공연을 한국, 일본, 칠레 3개국에서 서라운드 뷰잉으로 서울 삼성동 SMTOWN@COEXARTIUM, 일본 하우스 텐보스에 위치한 SMTOWN THEATRE, 칠레 산티아고 ESPACIO RIESCO 내 Pabellon 4에서 선보여 일본 공연에 참석하여 관람하지 않았지만 서라운드 뷰잉을 통해 공연장에 함께 있는 듯한 현장감을 선사하여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장윤정, 2015).

이렇게 다면영상공연은 기존 공연콘텐츠의 한계점인 몰입도와 현장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안이 되고 있다.

III. 연구 설계

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관객들이 영상 콘텐츠를 관람한 후 느끼는 정도를 만족도라고 할 수 있는데 (김소영 2014), 만족도는 공연관람 후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특성 요소들과 연관되어서 형성된다. 공연영상의 경우 구전의도가 높은 예술이기 때문에 개인의 만족도가 공연영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김석균(2012)는 영화관람 특성요소를 분류하여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 영화의 특성 요소들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철·이유재(1998)는 정보의 접근이 편하고 활성화가 된다면 공연에 대한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낮아져서 초기 관람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접근성은 관객 만족도 및 재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된다. 신현숙(2017)은 공연의 특성요인이 관람객 만족과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관람객이 원하는 공연영상 선택요인은 다양해서 공연 내부적으로만 선택이 어렵고 외부적 정보 원천도 역할을 한다고 한다.

다면영상공연은 새로운 형태의 공연영상이기 때문에 새로움을 통해서 다른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오락성은 관람객 만족도 및 재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예희 2015). 스크린으로 공연을 관람할 때 얼마나 현장감을 느끼는가가 관객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이상의 논거들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1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 다면영상공연의 특성이 관람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가격적합성은 관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접근성은 관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오락성은 관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현장성은 관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소영(2014)은 공연 선택 요인이 재관람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정제운(2011)은 공연예술은 핵심제품과 부가적인 제품들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서비스 상품으로 보고 관람객의 만족도와 재관람의도를 알아보았는데, 신뢰성, 시설우수성, 편의성, 부가서비스 등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외부적 정보 원천은 접근성이라 할 수 있는데, 김우철·이유재(1988)는 공간의 접근성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관람객은 공연을 관람할 때 외부적 정보원천(예; 인터넷, 지인, 광고)을 활용하여 정보를 얻기 때문에 정보의 접근성은 공연예술을 활성화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공연영상은 동일한 공연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관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이예지 2016), 같은 공연이라면 가격이 저렴한 공연을 관람할 의도가 높다(최태규 2011). 한윤희(2007)는 공연영상은 가격이 저렴해서 공연에 대한 관여도가 낮은 관람객들을 유인할 수 있으며 가격이 저렴하고 공연장에 대한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재관람의도가 높다고 하였다.

뉴먼과 베르벨(Joseph W. Newman & Richard A. Werbel)은 불만족한 고객이 만족한 고객보다 재구매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Newman & Werbel 1973). 이를 통해 공연특성 요인이 재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논거들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2를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 다면영상공연의 특성이 재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가격적합성은 재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접근성은 재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오락성은 재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현장성은 재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족도와 재관람의도는 관람객과 공연영상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이예지 2016). 개인이 공연영상 콘텐츠를 관람 후 만족을 하게 된다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신뢰도가 높아지면 그 후에는 다시 공연영상을 관람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Newman & Werbel(1973)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이 그렇지 않은 고객보다 재구매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 김소영(2014)는 공연예술의 관람만족도는 공연태도를 비롯하여 재관람의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족도는 소비자가 관람 행동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감정 상태인데 이 만족도는 구매행동과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김석균 2012). 이처럼 많은 연구들이 관객 만족도가 재관람의도에 영향을 밝혀냈다.

본 연구는 다면영상공연 특성이 만족도와 재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다면영상공연특성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 영향이 재관람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족도의 매개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3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3: 다면영상공연의 특성이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만족도가 매개할 것이다

가설 3-1: 가격적합성이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만족도가 매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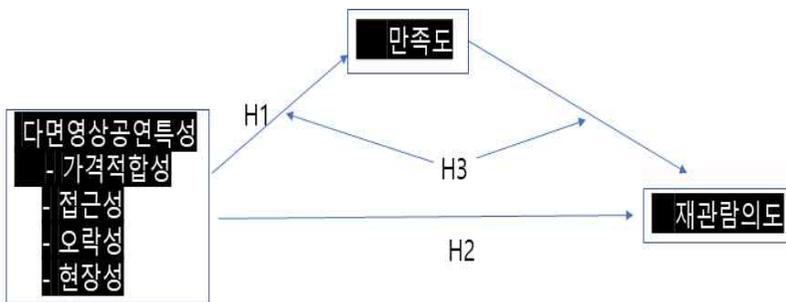
가설 3-2: 접근성이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만족도가 매개할 것이다.

가설 3-3: 오락성이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만족도가 매개할 것이다.

가설 3-4: 현장성이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만족도가 매개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가설들에 대한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다.([그림3] 참조)

[그림 3] 연구모형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1) 가격적합성

가격적합성은 다면영상공연 관람에 적절한 가격과 가치로 정의하였다. 가격적합성은 신현숙(2017), 이예지(2016), 윤유정(2015), 그리고 정영찬(2014)의 연구들 근거로 3개 항목(다면영상공원이 기존 공연보다 저렴하다, 다면영상공연의 가격이 적당하다, 다면영상공연의 가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에 대해서 5점 척도(전혀 아니다 1 <-->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2) 접근성

접근성은 이예지(2016)와 신현숙(2017)의 정의에 근거하여 다면영상공연을 이용할 때 얻는 정보의 양으로 정의하였다. 접근성에 대한 측정항목은 이예지

(2016), 신현숙(2017), 그리고 정제윤(2011)의 연구에 근거해서 3개 항목(다면영상 공연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다면영상공연에 대한 정보 접근이 쉽다, 다면 영상공연은 내 가까이 있다)을 5점 척도(전혀 아니다 1 <--->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 오락성

오락성은 다면영상공연을 관람할 때 공연에 몰입해서 느끼는 즐거운 감정으로 정의하였다. 오락성에 대한 측정항목은 김예희(2015)와 이예지(2016)의 연구에 근거해서 3개 항목(다면영상공연을 관람했을 때 새로웠다, 다면영상공연을 관람했을 때 즐거웠다, 다면영상공연을 관람했을 때 재미있었다)을 5점 척도(전혀 아니다 1 <--->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4) 현장성

현장성은 다면영상공연을 관람할 때 그 공연에 몰입하고 함께 참여하는 역동성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현장성에 대한 측정 항목은 정동훈·양호철(2012)의 연구에 근거해서 3개 항목(다면공연영상 콘텐츠를 관람했을 때 기존 공연장의 분위기와 비슷하다, 다면영상공연을 관람할 때 현장에 있는 느낌을 받는다, 다면영상공연을 관람할 때 흥미와 흥분을 유발한다)을 5점 척도(전혀 아니다 1 <--->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5) 관람만족도

관람만족도는 관람객이 공연예술을 관람 후 느끼는 흡족한 정도로 정의하였다. 관람만족도에 대한 측정항목은 김석균(2012)과 김소영(2014)의 연구를 근거하여 3개 항목(다면영상공연을 관람후 즐거움을 느꼈다, 기존공연과 비교하여 다면 영상공연이 만족감을 준다, 다면영상공연의 공연기법이 마음에 든다)을 5점 척도(전혀 아니다 1 <--->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6) 재관람의도

재관람의도는 고객이 향후에도 공연영상콘텐츠를 반복하여 이용할 가능성으로 정의하였다. 재관람의도에 대한 측정항목은 Newman & Werbel(1973)과 김소영(2014)의 연구를 근거로 해서 3개 항목(관람한 다면영상공연을 다시 볼 의향이 있다, 관람 후 지인들에게 추천하겠다, 관람한 다면영상공연에 대해서 긍정적이다)을 5점 척도(전혀 아니다 1 <--->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 표본설계

본 연구의 설문을 보다 정확히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 대상을 다면영상공연인 CGV 스크린X <러브 유어셀프 인 서울>와 SM THEATRE 서라운드 뷰잉을 관람한 관객으로 한정하였다. 본 논문의 설문조사는 실제 관람한 사람들만이 제대로 질문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다면영상공연을 직접 관람한 관객을 대상으로 판단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기간은 2019년 10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215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이중 기록이 누락된 설문지 8부를 제외한 총 20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IV. 실증분석

1. 설문응답자의 다면 영상 공연 콘텐츠 관람형태

본 연구의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성보다는 '여성'(88.0%)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연령은 '20대'(69.6%)가 가장 많았고, 학력은 '대학생 재학과 졸업'(54.1%)이 가장 많았다. 또 직업은 '회사원'(44.0%)이 가장 많았고, 소득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38.2%)이 가장 많았다(<표 1>참조).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위(%)
성별	남자	23	11.1
	여자	184	88.9
연령	10대	22	10.6
	20대	144	69.6
	30대	33	15.9
	40대이상	8	3.9
학력	고등학교졸업이하	36	17.4
	전문대 재,졸업	43	20.8
	대학교 재,졸업	112	54.1
	대학원이상	16	7.7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위(%)
직업	청소년	22	10.6
	대학(원)생	52	25.1
	회사원	91	44.0
	전문직	27	13.0
	기타	15	7.1
월소득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60	28.9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0	24.2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79	38.2
	300만원 이상	18	8.7
합계		207	100(%)

응답자의 다면영상공연에 대한 형태는 다음과 같다. 연간 공연관람 횟수는 '1~2회'(41.5%)가 가장 많았고, 다면영상공연 관람 횟수는 '1~2회'(94.7%)가 가장 많았다. 다면영상공연을 알게 된 경로는 '지인추천'(61.4%)이 가장 많았다. 다면영상공연의 주요 선택 요소는 '출연진(배우)'(50.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작품'(33.3%)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관람한 영상 공연콘텐츠의 정보원천은 '추천'(40.6%)이 가장 많았다(<표 2> 참조).

<표 2> 표본의 다면영상공연 관람형태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위(%)
공연관람횟수	1~2회	86	41.5
	3~4회	80	38.6
	5~6회	30	14.5
	7~9회	7	3.4
	10회 이상	4	1.9
다면공연영상 관람횟수	1~2회	196	94.7
	3~4회	11	5.3
다면영상공연을 알게 된 경로	포털사이트 검색	26	12.6
	뉴스, 신문	17	8.2
	지인 추천	127	61.4
	SNS, 포털사이트 광고	35	16.9
	포스터광고(오프라인)	2	1.0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위(%)
다면영상공연의 중요한 관람요소	작품	69	33.3
	출연진(배우)	104	50.2
	다면영상 호기심	5	2.4
	타인 추천	15	7.2
	홍보	14	6.8
관람한 다면영상공연의 공연 정보 원천	보도기사	10	4.8
	광고	17	8.2
	홈페이지	61	29.5
	추천	84	40.6
	인터넷	35	16.9
합계		207	100(%)

2. 연구가설 검증

1) 관람만족도에 대한 영향 요인의 검증

연구가설1(다면영상공연의 특성요인이 관람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된 회귀모형의 설명력(R²)은 86.7%이고, 더빈-왓슨(Durbin-Watson) 통계량은 2.213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다면공연영상 특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표준편차	β	t	p값	VIF
만족도	(상수)	.216	.138		1.565	.119	
	가격적합성	.024	.037	.020	.656	.513	1.373
	접근성	-.087	.035	-.082	-2.491	.014	1.535
	오락성	.302	.051	.285	5.894	.000	3.349
	현장성	.720	.047	.712	15.155	.000	3.160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표3>참조), 가격적합성(가설1-1)은 비유의적이었지만, 접근성(가설1-2), 오락성(가설1-3), 그리고 현장성(가설 1-4)은 모두 관람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접근성(β =-.082)의 경우에는 부(-)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서 본 연구가설의 의도와 반대 방향으로 나와

서 의미상으로는 지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연구가설 1-3>과 <연구가설 1-4>만 지지되었다. 특히 현장성 요인($\beta = .712$)이 오락성($\beta = .285$)보다 관람만족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면영상공연의 가장 중요한 특성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재관람의도에 대한 영향 요인의 검증

연구 가설2(다면영상공연의 특성요인이 재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된 회귀모형의 설명력(R^2)은 79.7%이고, Durbin-Watson 통계량은 1.557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고,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다면공연영상 특성이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재관람 의도	(상수)	-.044	.180		-.245	.807	
	가격적합성	.022	.048	.018	.471	.638	1.373
	접근성	.049	.046	.043	1.078	.282	1.535
	오락성	.314	.067	.277	4.696	.000	3.349
	현장성	.664	.062	.614	10.721	.000	3.160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표4>참조), 가격적합성(가설2-1)과 접근성(가설2-2)은 비유의적이었지만, 오락성(가설2-3)과 현장성(가설 2-4)은 관람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연구가설 2-3>와 <연구가설 1-4>만 지지되었다. 그리고 관람만족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락성($\beta = .277$)보다 현장성($\beta = .614$)이 재관람의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면영상공연이 일반 공연영상과 구별되는 결정적 특성인 현장성이 재관람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특성 요소임을 알 수 있다.

3) 재관람의도에 대한 관람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연구 가설 3(다면영상공연의 특성요인이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관람만족도가 매개할 것이다)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이아코부치(Iacobucci 2008)의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의 검증력을 높이기 위해 소벨 테스트(Sobel-test)도 실시하였다.

(1) 가격적합성과 재관람의도의 관계에서 관람만족도의 매개 역할

가설 3-1(가격적합성이 만족도를 매개해서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Iacobucci (2008)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하였다(<표 5>참조).

첫째, 독립변수인 가격적합성이 매개변수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다($\beta=.445, t=7.034, p=.000$).

둘째, 독립변수인 가격적합성이 종속변수인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445, t=7.116, p=.000$).

마지막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가격적합성이 종속변수인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beta=.070, t=1.922, p=0.062$), 매개변수인 만족도가 종속변수인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850, t=23.220, p=.000$).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은 미치지 않고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완전매개효과가 있다. Sobel-test 결과($Z=6.730, p=.000$)도 유의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3-1>은 지지되었고, 가격적합성은 만족도를 매개해서만 재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관람만족도의 완전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표 5> 가격적합성-재관람의도 관계에서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단계	회귀식	β	t값	p값
1단계	가격적합성→만족도	.441	7.034	.000
2단계	가격적합성→재관람의도	.444	7.096	.000
3단계	가격적합성→재관람의도	.069	1.880	.062
	만족도→재관람의도	.852	23.260	.000

(2) 접근성과 재관람의도의 관계에서 관람만족도의 매개 역할

가설 3-2(접근성이 만족도를 매개해서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를 검증하기 위하여 Iacobucci(2008)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하였다(<표 6>참조).

첫째, 독립변수인 접근성이 매개변수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453, t=7.269, p=.000$).

둘째, 독립변수인 접근성이 종속변수인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521, t=8.740, p=.000$).

마지막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접근성이 종속변수인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beta=.153, t=4.325, p=.000$)과 매개변수인 만족도가 종속변수인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813, t=22.936, p=.000$). 3단계에서 접근성이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첫 번째 회귀분석과 비교하면 그 영향력은 작아졌다($\beta=.453 \rightarrow \beta=.153$). 이러한 효과는 총효과에서 직접효과를 차감한 간접효과이므로 총효과에서 직접효과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Sobel-test 결과($Z=6.878, p=.000$)도 유의적이었다.

따라서 <가설 3-2>는 지지되었다. 접근성은 관람만족도를 매개해서 재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재관람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관람만족도는 부분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접근성-재관람의도 관계에서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단계	β	t값	p값
1단계	접근성→만족도	.453	7.269	.000
2단계	접근성→재관람의도	.521	8.740	.000
3단계	접근성→재관람의도	.153	4.325	.000
	만족도→재관람의도	.813	22.936	.000

(3) 오락성과 재관람의도의 관계에서 관람만족도의 매개 역할

가설 3-3(오락성이 만족도를 매개해서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Iacobucci(2008)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하였다(<표 7>참조).

첫째, 독립변수인 오락성이 매개변수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834, t=21.639, p=.000$).

둘째, 독립변수인 오락성이 종속변수인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813, t=19.985, p=.000$).

마지막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오락성이 종속변수인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beta=.254, t=4.453, p=.000$)과 매개변수인 만족도가 종속변수인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670, t=11.730, p=.000$). 3단계에서 오락성이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첫 번째 회귀분석과 비교하면 그 영향력은 작아졌다($\beta=.834 \rightarrow \beta=.254$). 이러한 효과는 총효과에서 직접효과를 차감한 간접효과이므로 총효과에서 직접효과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Sobel-test 결과($Z=10.246, p=.000$)도 유의적이었다.

따라서 <가설 3-3>는 지지되었다. 오락성은 관람만족도를 매개해서 재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재관람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관람만족도는 부분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오락성-재관람의도 관계에서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단계	회귀식	β	t값	p값
1단계	오락성→만족도	.834	21.639	.000
2단계	오락성→재관람의도	.813	19.985	.000
3단계	오락성→재관람의도	.254	4.453	.000
	만족도→재관람의도	.670	11.730	.000

(4) 현장성과 재관람의도의 관계에서 관람만족도의 매개 역할

가설 3-4(현장성이 만족도를 매개해서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를 검증하기 위하여 Iacobucci(2008)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하였다(<표 8>참조).

첫째, 독립변수인 현장성이 매개변수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912$, $t=31.935$, $p=.000$).

둘째, 독립변수인 현장성이 종속변수인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872$, $t=25.446$, $p=.000$).

마지막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현장성이 종속변수인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beta=.399$, $t=5.272$, $p=.000$)과 매개변수인 만족도가 종속변수인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518$, $t=6.841$, $p=.000$). 3단계에서 현장성이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첫 번째 회귀분석과 비교하면 그 영향력은 작아졌다($\beta=.912 \rightarrow \beta=.399$). 이러한 효과는 총효과에서 직접효과를 차감한 간접효과이므로 총효과에서 직접효과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Sobel-test 결과($Z=10.246$, $p=.000$)도 유의적이었다.

따라서 <가설 3-4>는 지지되었다. 현장성은 관람만족도를 매개해서 재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재관람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관람만족도는 부분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현장성-재관람의도 관계에서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단계	회귀식	β	t값	p값
1단계	현장성→만족도	.912	31.935	.000
2단계	현장성→재관람의도	.872	25.446	.000
3단계	현장성→재관람의도	.399	5.272	.000
	만족도→재관람의도	.518	6.841	.000

관람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관람만족도는 가격적합성과 재관람의도 관계에서는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고, 접근성, 오락성, 현장성의 경우에는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연구가설1(다면공연영상 특성요인이 관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연구가설2(다면공연영상 특성요인이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는 여러 다면영상공연 특성요인들이 만족도와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4개의 요인 중에서 가격적합성, 접근성은 관람만족도와 재관람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적합성이 비유의적으로 나타난 이유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를 다면영상공연을 직접 관람한 사람들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즉 응답자들은 대부분 다면영상공연을 열성팬이라서 관람티켓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접근성 요인도 재관람의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면영상공연이라는 것이 아직 생소하고 대중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오락성 요인은 만족도와 재관람의도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오락성의 경우 다면영상공연을 관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즐거움과 재미, 흥미를 느껴 재관람의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장성 요인도 만족도와 재관람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현장성은 여러 특성요인들 중에서 관람만족도와 재관람의도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서, 기존 공연영상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현장감이 다면영상공원의 강력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가설3(다면공연영상의 특성이 관람만족도를 매개해서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격적합성 요인은 관객 만족도를 매개해서만 재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만족도가 완전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비록 연구가설1과 연구가설2에서 가격적합성이 관람만족도 및 재관람의도 각각에 별도로 미치

는 영향은 비유의적이었지만, 만족도와 재관람의도를 동시에 고려할 때는 우선 가격이 적절(가격이 저렴하거나 공연의 가격과 서비스가 적합)하다고 느끼면 가격대비 가치측면에서 관객이 만족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만족도가 재관람의도를 높이도록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특성들인 접근성, 오락성, 그리고 현장성은 당연히 만족을 해야 재관람 의도가 높아질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다면공연영상 자체가 접근이 용이하고, 오락성이 높고, 현장감이 높다는 것만으로도 재관람의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관객 만족도가 완전매개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매개 역할도 한다.

본 연구는 나름대로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관객 중심으로 다면영상공연의 실제 관람객들의 소비 행태를 실증 분석을 했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질적 분석을 통한 이론적 서술과 다면공연영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한 반면, 본 연구는 실제 관람한 관객들의 입장에서 체험하고, 만족하고, 향후 재관람의도에 대한 실증적 확인을 통해서 다중영상공연의 실상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다면영상공연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로서 의미를 갖는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공연영상과 관련해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최근에 등장한 다면영상공연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다면영상공연과 관람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연 관람자들을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공연예술 영역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랫동안 공연영상은 아카이빙의 형식을 띠거나 단순 영상기록으로 사용되어왔다. 최근에 들어서야 관객들의 니즈에 맞춰 대안콘텐츠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공연영상의 만족도를 알아보면 현장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면영상공연의 실증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어떠한 특성 요인이 만족도와 재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 결과들을 공연영상의 확장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현장성이 가장 중요하게 만족도와 재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요인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다면영상공연의 지속적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이 관건이다. 또한 현장성과 함께 오락적 요소들을 잘 반영하는 영상 공연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다면영상공연이 활성화가 된다면 또 하나의 대안콘텐츠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다.

둘째, 설문조사에서 확인되어진 사항으로 현재 다면공연영상의 고객이 주로 여성 중심(응답자의 약 90%)이고 20대 연령층(약 70%)이 대부분이어서 향후에

잠재고객으로 20대 남성이 중요한 잠재관객시장으로 대두될 수 있음을 주시하고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면영상공연의 관람회수도 '1·2회'가 절대다수(약 95%)이어서 노력여하에 따라서 재관람의도가 더 높아져서 관객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또한 다면영상공연을 알게 된 경로도 주로 '지인추천'(약 62%)에 의존하고 있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 및 광고를 해서 관객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K-pop과 K-art를 비롯해서 '기생충' 영화의 아카데미상 석권 등 한국의 문화가 세계화되면서 한국 고유의 콘텐츠를 반영한 다면영상공연에 대한 외국인 관객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전세계 관객들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단계로 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다면영상공연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했던 설문지의 표본이 한정적이어서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현재 활성화 되어있는 다면영상 공연은 국내가수의 콘서트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표본을 모집하는데 한정적이었다. 또한 설문지의 응답자가 대부분이 여성(88.9%)이라는 성별 편향도 실증 분석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본들을 대상으로 특히 해외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다면영상공연 관람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관람자 뿐만 아니라 잠재고객인 비관람자들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향후의 다면영상공연에 대한 관심도 유발이나 관람객의 저변확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재희(2009)는 공연예술에서는 일반관객과 열성관객으로 나누었다. 이중에서 일반관객은 어쩌다가 한 번씩 공연을 보는 부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잠재고객과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연구도 향후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4개의 다면공연영상의 특성요인들이 기존연구의 고찰을 통해서 추출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중요한 영향요인이 간과될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공연 콘텐츠 특성요인을 파악해서 본 연구에 다루었던 특성요인과 함께 연구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김상훈·강지윤. 2005. “소비자 특성이 추구편익 및 내구재 속성의 중요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 연구』 20(4), 209-226.
- 김석균. 2012. “영화평가가 고객 만족도 및 구전에 미치는 영향-인터넷 동호회 고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설희. 2011. “공연예술경영분야의 연구동향에 관한 계량서지학적 분석.”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논문.
- 김소영. 2014. “무용공연관람객의 공연선택요인에 따른 관람몰입, 만족도, 재관람 의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어진. 2015. “대안 콘텐츠로서 공연 실태중계의 위상과 효과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예희. 2015. “공연 콘텐츠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 체험경제와 관객 체험요소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우철·이유재. 1998. “물리적 환경이 서비스 품질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마케팅 연구』 13(1), 61-86.
- 김윤철 역. 1989. 오스카 G. 브로케트의 『연극개론』. 서울: 한신문화사.
- 김자은. 2017. “전통공연예술 관객개발을 위한 영상콘텐츠 활용방안 연구-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석사논문.
- 신현수. 2017. “화성재인청 춤 공연의 콘텐츠 특성 요인이 관람객의 만족, 구전 의도 및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논문.
- 윤유정. 2015. “국악공연의 마케팅믹스 요인이 관람객 만족도와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 -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논문.
- 이서미. 2016. “국립중앙극장 대안콘텐츠로서의 NT Live 도입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논문.
- 이예지. 2016. “공연영상콘텐츠의 특성요인이 이용자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 이용관. 2013. 『관객을 만드는 예술경영』.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유경. 2018. “공연예술 영상화를 통한 영상 콘텐츠 활성화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재희. 2009. 『공연예술경제학』. 서울: 삼영사.
- 인문콘텐츠학회. 2006. 『문화콘텐츠 입문』. 서울: 북코리아.

- 정동훈·양호철. 2012. "3D 영상 평가를 위한 측정도구 신뢰도와 타당도분석." 『방송공학회논문지』 17(1), 49-59.
- 정영찬 외. 2014. "한국 중·하위계층의 고급예술 소비 연구." 『예술경영연구』 30, 219-242.
- 진윤희. 2017. "공연예술의 영상화사업 사례연구를 통한 국내 공연영상화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제작사 및 배급사 관점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최양현·조성민. 2015. 『퓨처시네마』.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태규. 2011. "문화콘텐츠로서 뮤지컬의 선택 및 만족요인."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1(6), 205-214.
- 필립 코틀러·조앤 세프 용호성 역. 2007. 『전석매진』. 서울: 김영사.
- 한윤희. 2007. "무용의 무대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연구." 『용인대학 논문집』 25, 81-97.
- 허난영. 2016. "공연예술콘텐츠의 가치와 융합적 구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 241-255.
- 황순기. 2015. "MVP시스템을 이용한 공연콘텐츠 영상화 사업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논문.

영문 자료

- Anderson, E. W., C. Fornell and D. R. Lehmann. 1994. "Customer Satisfaction, Market Share, and Profitability: Findings from Sweden." *Journal of Marketing* 58(3), 53-66.
- Hornby, R. 2011. "National Theatre Live." *The Hudson Review* 64(1), 196-202.
- Iacobucci, D. 2008. *Mediation Analysis* Sage.
- Johnson, R. K., I. T. Omtvedt, and L. E. Walters. 1978. "Comparison of Productivity and Performance for Two-Breed and Three-Breed Crosses in Swine." *Journal of Animal Science* 46(1), 69-82.
- NESTA. 2011. "Digital Broadcast of Theatre Learning from the Pilot Season-NT Live." <https://www.nesta.org.uk/report/nt-live/> (2019/10/15검색)
- Newman, Joseph W. and Richard A. Werbel. 1973. "Multivariate Analysis of Brand Loyalty for Major Household Applianc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0(4). 404-409.

- Oliver, R. L. 1980. "A Cognitive Model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atisfaction Divis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7(11), 460-469.
- Perse, E. M. and D. G. Dunn. 1998. "The Utility of Home Computers and Media Use: Implications of Multimedia and Connectivity."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2(4), 435-456.
- Yu, Aimin, Yong Hu and Ming Fan. 2011. "Pricing Strategies for Tied Digital Contents and Devices." *Decision Support Systems* 51(3), 405-412.
- Zeithaml, V. A., L. L. Berry and A. Parasuraman. 1996. "The Behavioral Consequences of Service Quality." *Journal of Marketing* 60(2), 31-46.

인터넷 사이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연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038#0000> (2019/11/18 검색).
- 장윤정. 2015. "슈퍼주니어-D&E, 일본 두 번째 투어 화려한 피날레." <https://www.ajunews.com/view/20150424173027728> (2019/11/20 검색).
- SMTOWN THEATRE. <https://www.smtownland.com> (2019/11/11 검색).
- CGV. <http://www.cgv.co.kr/theaters/special/?regioncode=SCX> (2019/12/02 검색). 스크린X.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84392&cid=43667&categoryId=43667> (2019/11/20 검색).
- 예술의전당. <http://www.sac.or.kr/SacHome/sachome/main> (2019/11/02 검색).
- 메가박스. <http://www.megabox.co.kr/?menuId=specialcontent> (2019/11/02 검색).

Abstract

**The Study of Multi-Faceted Video
Performing Arts in Korea
-Focused on the Audience Satisfaction
and the Intention to Revisit**

Yea-Ji Sin ■ Performing Art Planner

Hobae Lee ■ Hongik University

This study tested the following hypothese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hypothesis 1(the effec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lti-faceted video performing arts on audience satisfaction) showed that entertainment and on-site performance had significant effects on satisfaction, but price suitability and accessibility were not significant.

The results of the research hypothesis 2 (the effec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lti-faceted video performing arts on the intention to revisit) showed that entertainment and on-site performance had significant effects on satisfaction, but price suitability and accessibility were not significant.

The results of research hypothesis 3 (the effect of the characteristics of multi-faceted video contents on the intention of re-viewing through mediation of audience satisfaction) are as follows. The price suitability was completely mediated to affect revisit intention through mediation of audience satisfaction, and accessibility, entertainment, and on-siteness not only affected the intention to revisit by mediating satisfaction, but also influenced direct the intention to revisit. As a result,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was found.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on-siteness, which is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video performance, is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in the multifaceted video performing arts. In addition, since it was confirmed that entertainment as well as the on-siteness is an important characteristic that determines audience satisfaction and revisiting intention,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develop the

entertainment element in order to attract customer audience. Since the main audience of multi-faceted video performances is females and 20s of ages, mainly college students and office worker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base market to surrounding audiences by setting them as target markets.

Key Words: video performing arts, multi-faceted video performing arts, audience satisfaction, intention to revisit

